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4. 1

해양수산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① 핵심 관리과제 선정, 집중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견인

- (핵심과제 선정) 올해까지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필요한 핵심 관리과제로 우리 부 소관 중점국정과제*를 관리과제에 포함 선정

*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 20개 과제(9.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 (집중관리) 핵심과제 추진성과에 따라 가·감점(±3점)을 부여하고, 담당부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정책과제 및 국정과제 등(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시 반영)

②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 관리 강화

- (미흡·부진과제 관리)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6·7등급)를 대상으로 지속적 개선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반기별 실행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반기별로 점검

* '22년도 자체평가 미흡과제(9)·부진과제(4개) 개선계획을 '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③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

- (운영 내실화) 제7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23.6)하고, 활동의 충실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타 부처 중복 선임 및 장기간 연임을 제한

- (중복 선임) 원칙적으로 우리 부를 포함하여 2개 부처까지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임기 일시적 중복 등)는 3개 부처까지 허용

* 우리 부 자체평가위원의 타 부처 평가위원 중복 활동 여부 등 점검

- (연임) 2년 임기 기준, 3회까지 허용(최대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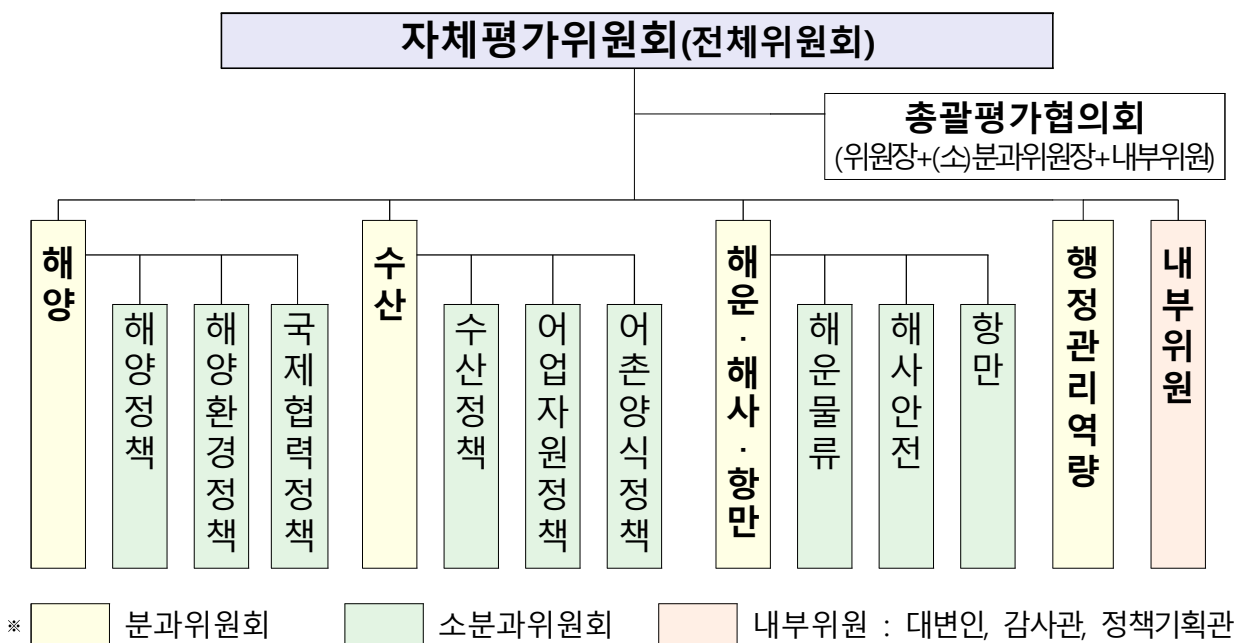
- (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부서에 대한 평가 제척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①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담보를 위해 민간전문가(27명)와 내부위원(3명)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해수부 훈령 제496호) 운영
-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대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분과위원회) 전문 분야별 분과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과 소관 관리과제 평가
 - * (1분과) 해양(해양정책/해양환경/국제협력), (2분과) 수산(수산정책/어업자원/어촌양식), (3분과) 해운물류·해사안전·항만
- (총괄평가협의회) 위원장, (소)분과위원장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및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을 수행



- (평가지원팀)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점검 실시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총괄지원팀과 분과별 지원팀을 구성·운영

② 평가 절차

< 2023년도 성과관리과제 평가 일정 >

서면평가 및 사전질의	➡	대면 평가	➡	총괄평가 협의회(1차)	➡	이의신청	➡	총괄평가 협의회(2차)	➡	전체 회의 (등급 확정)
'23.12.13~12.21		'24.1.3~1.5		'24.1.11		'24.1.12 ~ 16		'24.1.17~18		'24.1.18~23

<서면평가 및 사전질의>

-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성과지표의 부합도는 서면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별로 제출한 사전질의서와 부서의 답변을 전체 분과 위원에게 공유

<대면평가>

- 소분과 단위로 대면회의를 통해 부서별 정책성과를 상대 비교 (5단계 등급)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총괄평가협의회>

- 평가 등급 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치밀한 검토로 평가 공정성 확보
 - 7단계(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로 과제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수용여부 검토

<전체 회의>

- '23년도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방법

- (소분과 평가) 관리과제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5단계(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로 평가등급 강제 배분

【소분과별 평가등급 분포 기준】

등급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순위누적	~20%	20%~35%	35%~65%	65%~80%	80%~

- (등급결정) 총괄평가협의회를 통해 7단계 등급으로 상대 등급화

【최종 평가등급 분포 기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순위누적	~5%	5%~20%	20%~35%	35%~70%	70%~80%	80%~95%	95%~

-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총괄평가협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 결정
-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결과 확정
- 평가결과는 전체회의 개최 이전에 모든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제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본부 43개 부서(과, 팀)의 53개 관리과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15	53	96

○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정책추진 노력	○ 추진계획의 충실성	○ 상위 정책과제와 연계 정도 ○ 분기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 전년도 평가 개선보완 필요사항 반영 등
	○ 정책이행 노력도	○ 과제별 추진계획의 이행정도
	○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 정책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노력도
목표(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부합도	○ 대표성있는 지표 설정 및 목표치가 과거 실적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수준을 상회·미달하는지 여부
	○ 목표(지표)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
정책효과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종합적 정책효과 ○ 향후 기대효과
가감점	○ 가점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대내외기관에서 우 수과제로 선정 ○ 획기적인 성과로 사회적 주목, 부처 위상제 고에 크게 기여 등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장(장·차관)의 현 장 중심 성과점검 및 소통 노력 ○ 우리 부 소관 중점국정과제를 관리과제에 포함하여 핵심관리과제로 선정 ○ 우리 부 소관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지표를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설정 ○ 정책효과가 주요정책평가 부문 실적보고 서에 반영된 경우 ○ 정책현장 점검(국조실, 자체평가위원)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한 과제
	○ 감점	○ 주요정책과제, 국정과제 등 이행계획 지연 및 성 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입력, 회의·교육 등 참여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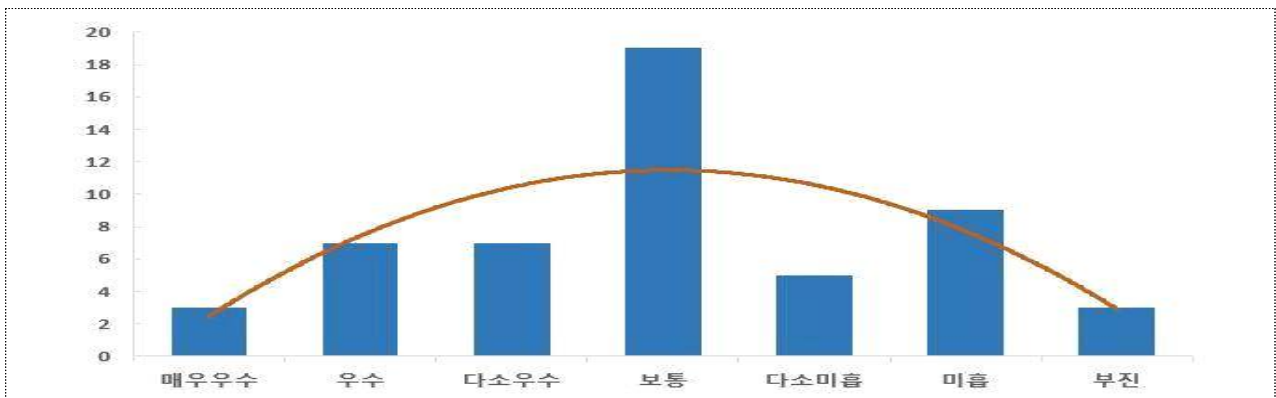
2. 평가결과

(1) 총 평

□ '23년도 총 43개 과(팀)의 5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5.7%), 우수 7개(13.2%), 다소 우수 7개(13.2%), 보통 19개(35.7%), 다소 미흡 5개(9.4%), 미흡 9개(17%), 부진 3개(5.7%)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10개(18.9%)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12개(2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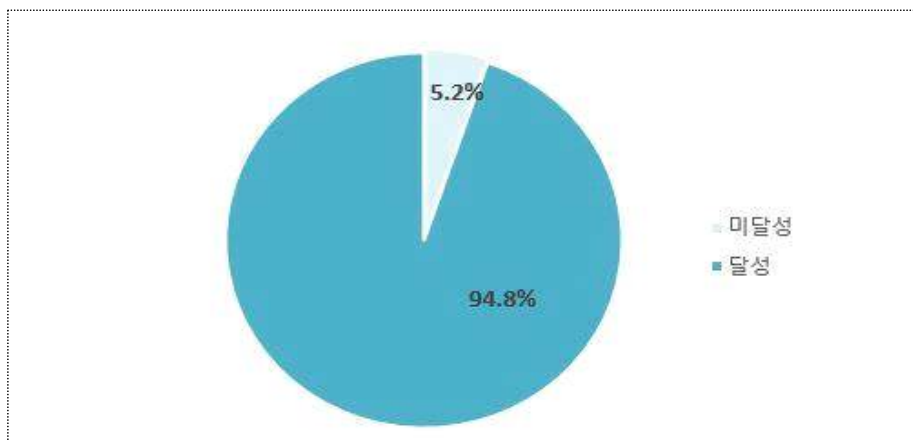
<'23년도 자체평가 결과 등급별 과제 분포도>



□ 총 53개 관리과제의 9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4.8%로,

- 해양방사성물질 감시망 강화 등 9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등 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23년도 자체평가 결과 성과지표 달성율>



(2) 주요성과

□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우수과제는 다음과 같음

해 양

Ⅲ-4-⑤ 국민이 행복한 청정·안심 해양환경 안전망 구축

- (해양 모니터링) 日 오염수 방류 이슈에 따른 국민적 우려 증가로, 우리 바다 안전성에 대한 이중·삼중 촘촘한 감시망 구축*
- *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확대(해수부) : ('22) 45개소 → ('23) 127 → ('24) 143
- (모니터링 역량 확충) 신속·정확한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해양방사능 분석장비(2배↑) 및 인력(3배↑) 대폭 확충
- (정보 공개) 우리 바다의 안전여부를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포털에 해양방사능 안전신호등 제공, '해양·수산물 방사능 정보 누리집*' 구축·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정보공개

수 산

Ⅳ-4-① 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 하고 전국 30여개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환급행사 상시(매일) 개최
-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8.4),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9.7),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9.12)
- (물가관리) 최대규모 할인행사, 고등어 한시적 무관세 전환, 비축물량 상시 방출 등으로 수산물물가 상승세는 7월 이후 4개월 연속 둔화*
- *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전월 대비): (6월) $\Delta 0.3\%$ → (7월) $\Delta 0.9$ → (8월) $\Delta 0.6$ → (9월) $\Delta 0.4$
- (신속검사) 주요 산지 위판장을 대상으로 신속검사법을 도입하여 유통 전에 위판 물량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8.21~)
- (천일염 관리) 국내 전체 가동염전 837개소를 대상으로 방사능 전수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정밀검사(품질·안전) 전년비 663% 확대
- * ('21) 20건 → ('22) 52건(전년비 52%↑) → ('23.10) 397건(전년비 663%↑)

- (부산항 진해신항)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을 기반으로 부산항 진해신항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남방파제 등 외곽시설 발주('23.12)
- (인천항) 스마트항만인 신항 '컨'부두*(1-2단계) 개발('27)에 대비한 항로 연장 및 중심·준설 착공(6.29), 항만배후단지 2구역 완공('23.12)
- (광양항 테스트베드)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4선석) 구축 본격 추진('23.11. 발주)
- (장비 국산화) 현재 조성 중인 부산항 신항 2-6단계 부두와 광양항 테스트베드에 국산 크레인을 도입('23.12 발주)하여 내수기반 마련

(3) 개선·보완 사항

□ 분야별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해 양

Ⅲ-4-①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수 산

Ⅳ-1-④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소득 기반 강화

-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목표 달성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정책이행 노력도,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성과 목표	관리과제	평가결과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핵심]저시항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수
	②[핵심]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다소우수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핵심]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미흡
	②[핵심]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매우우수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우수
	④[핵심]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미흡
	⑤[핵심]'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다소우수
	⑥[핵심]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보통
	⑦[핵심]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보통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핵심]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부진
	②[핵심]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다소미흡
	③[핵심]그린 SHIPPING(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우수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보통
	②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보통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미흡
	②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보통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다소미흡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보통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다소우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평가결과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다소미흡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우수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미흡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다소우수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보통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다소우수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보통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미흡
	③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미흡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보통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우수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다소미흡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부진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보통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보통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보통
	⑤국민이 행복한 청정·안심 해양환경 안전망 구축	매우우수
전략목표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미흡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보통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다소우수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부진
	⑤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보통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 목표	관리과제	평가결과
	①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보통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보통
	③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다소미흡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우수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미흡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핵심]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우수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미흡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다소우수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보통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매우우수
	②[핵심]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보통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I-1-①)	우수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펀드조성) HMM 배당금, 선사의 톤세제 절감액 자발적 출자 등을 통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6.27), 펀드 투자를 통해 국내 4위 벌크선사 해외 매각 방지(9.20) 등 우리 해운산업의 자생력 강화

* 위기 선사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국적선사의 ESG 경영활동을 지원

- (선박금융)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선사에게 선박금융·특별보증, 긴급경영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33개사 1,360억원* 지원('23.10 기준)

* 중소선사 특별지원(4개사, 610억원), 중소선사 긴급경영자금 지원(29개사, 750억원)

-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업종은 대출한도를 상향(20억→30억)하는 등 중소선사 경영지원 강화(1.30)

- (환헷지 지원) 국적선사의 외화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2차레에 걸쳐 총 3.8억 달러(한화 약 5천억원) 해진공 외화채권 발행(4.24, 9.19)하여 선사에 공급함으로써 올해 환율변동률(저점 대비 고점비율) 최대 10.8% 하에서 환변동 리스크 경감

- (국적선사 실적) '22년부터 시작된 '퀵' 운임지수 급락으로 일부 글로벌 선사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HMM*은 최상위권 선사 수준**의 흑자기조 유지

-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퀵' 중견·중소선사(10개사)도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모두 흑자 유지(평균 영업이익 381억원)

* '23년 아시아 해운시장 선박규모(수송능력) 10.4%, 선박 평균크기 4.8% 증가('23.9 기준)

- (총 운송능력 확대) 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이후 5년간 국적선사는 449척의 선박을 신조하여 3,559만톤(DWT)의 화물운송능력을 확충한 결과,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은 '18년 대비 32.1% 상승하여 최초로 1억톤대 진입

* (해상수송능력) 국적선사가 운용(소유·임대 등) 중인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

- 한진해운 파산 사태('16) 이후 급감한 국적 원양선사(2개사)의 수송 능력은 한진사태 직후인 '17년 대비 2.7배 증가한 112.4만 TEU(신조 발주 포함)로 한진사태 이전수준 상회

- (국적선박 확충) 해진공은 ①선박 금융(신조·중고선) 7,214억원을 지원하여 27척 확충(10개사), ②S&LB 4,825억원으로 유동성 공급, 선박 해외유출 방지(8개사 22척) ('23.10 기준)

-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23년 자동차운반선(LNG 추진) 4척 신조 발주(10.27), 중국·동남아 항로를 운항할 2,600TEU급 '컨'선 2척 확보('23.12) 등 총 6척의 선박 확충('26년 50척 목표 대비 42% 달성)

* 공공기관(해진공)이 선박을 확보(소유)하여 선박 감가상각 등 리스크를 부담하고, 합리적 가격에 장기 임대('21~)

- (친환경선박) 해진공의 금융지원*과 함께 HMM은 국내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선(9,000TEU급, 9척) 신조 발주(2.14)로, 최대 100% 탄소감축**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신조계약시 해진공-HMM간 금융지원 MOU 체결(2.14)

** 기존연료 대비 SO_x와 NO_x 80%, CO₂ 25% 감축, 다만 공기중 CO₂를 포집하여 생산하는 e-메탄올이나 바이오메탄올 사용시 탄소중립 가능

- 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투자 추진을 위해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11.14)

* (주요내용) 세제특례, 토큰증권(STO) 등 신개념 선박금융 도입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적선사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모두 이행하여 매우우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저시황기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에 안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정책효과와 해상수송능력 확대 등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출지원) 자동차 전용운반선 부족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 생산기업 지원을 위해 '자동차 물류난 해소 지원방안 발표'(1.27)
 - ❶컨테이너에 자동차(3대)를 적재·고정시켜 컨테이너선으로 이송하는 대체 수출방안을 주선하여, 8월 기준(누적)으로 전년도 전체(1~12월) 실적 대비 139% 증가한 872,763건의 '컨' 대체수출 실적 달성
 - ❷항만내 화물 반입기간 연장 및 ❸자동차 수출용 '컨' 보관장소 확보, ❹원칙적으로 금지된 외항선의 국내항간 운송을 자동차운반선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항만 확대(8→9개소), ❺비상대책반 구성 등
- (중소기업) 단독으로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적선사·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전용선적공간 제공
 - 특히, 중진공과 무협이 모집한 중소기업들과 국적선사간 장기운송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항차당 전용공간* 60TEU 제공

* 美서안(총 105회, 1,252TEU), 美동안(25회, 36TEU) 등 총 130회, 1,288TEU 지원
- (농수산물식품) HMM·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협력으로 미주 등 주요 항로*에 농수산물식품 전용공간을 배정(항차당 87TEU)하여 적기 수출지원

* 美서안(33회), 美동안(24회), 호주(17회), 유럽(20회), 베트남(17회) 등 총 110회 지원
- (제도 개선) 우리 선사·물류기업 등의 해외 주요 항만·물류시설 확보를 해진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10.24)

* (개정 내용) 공사 지원 대상인 해운항만업 범위에 항만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공사 업무범위에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 추가

- (미주진출 지원)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 內 우리 기업의 물류시설 확보를 지원하여 수출입기업 공급망 불안정 해소에 기여(6.19, 해진공-CJ 협약체결)
 - * 일리노이주 Elwood 및 Des Plaines, 뉴저지주 Secaucus 등 총 3개소/ 총 투자규모 5,891억원
- (공동 투자 발굴) 한전 발전 자회사의 친환경 발전연료 조달 입찰에 선·화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기 위한 공동 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ESG분야 상생 기반을 조성
 - * 年94만톤 규모 / 10~15년 계약 / ('24.3)입찰 공고 → ('24.9) 선정 →('27) 운송 개시 계획
 - 정책금융기관(해진공)은 경쟁력 있는 신조금융을 제공하여, 선-화주 컨소시엄의 비용 경쟁력과 입찰 가능성 제고 지원
 - * 중소선사가 선주가 될 경우 LTV 최대 90%까지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융 제공 可
- (인증대상 확대) 국적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수출기업(화주)을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하여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 (화주) 법인세 감면(포워더 대상), 수출보증한도 우대 / (선사)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 기존 정기운송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물자 및 부정기화물 운송도 인증제 대상으로 확대(9.26)하여 인증대상 물동량 2.6배 이상 대폭 증가*
 - * '22년 기준 수출입 물동량 : (정기 한정) 5억 143만톤 → (부정기 포함) 13억 764만톤
 - 국적선사 점유율은 미미하고 글로벌 선사들의 경쟁이 심한 원양항로(미주, 유럽)* 수출입 화주도 인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3.9월 및 12월 발의)
 - * (미주항로) 국적선사 점유율 5.7%(HMM 3.7%, SM 2.0%), (유럽) HMM 6.0%
 - ** (현행)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 지출이 40% 이상 → (개선) 25% 이상으로 완화
(현행)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 지출이 전년대비 상승했 → (개선) 비율 상승 시 추가 감면
- (인증기업 확대) 인증기업 확대('22. 15개 → '23. 28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기업의 국적선사 이용률(적취율)은 상승*
 - * 최초인증 화주기업(3개사, '20)의 적취율은 '20년 24.1%에서 '22년 31.5%로 상승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수출물류 영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모두 이행하여 매우우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자동차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우수선화주인증 확대 등 정책효과가 우수하며,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화주간 상생의 정책효과 발생이 기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술개발)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착한 소형 시험선('22.5 건조)을 활용하여 국내 연안에서 자율항해 시험 성공적으로 추진(8.16~, 울산)
- (기반구축) 자율항해 시험 실시간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기반 운항 테스트 등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하여 본격 가동(9.20)
- (실증준비)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고 한-중-일 항로 운항 예정인 실증선* 건조 착수(4.28)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 민간선박(1,800TEU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시스템 적용 후 실해역 실증 예정('24.下)

- (법률제정) 원활한 실증, 민간 참여 활성화, 체계적 지원 가능성 확보 등 기술 실증과 운항 및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을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추진*

* 입법 제안 협의회('22.6), 발의를 위한 의원실 협의('22.11), 법안 설명회(23.11) 등

- (추진 배경)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R&D사업'에 따라 자율운항 시스템, 기관자동화 시스템 등 핵심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개발된 기술을 소형시험선과 실제 컨테이너선박으로 실증('24.下)할 예정인 바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필요

* '20~'25 / 1,603억원(해수부 587억, 산업부 610억, 울산시 111억, 민간 295억)

- (제정 취지) 이번 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로서 여러 기관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 (주요 내용) 정의 규정, 기본·시행계획, 정책위원회 운영, 운항승인 및 규제특례 등 자율운항선박 실증과 운항시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규제특례) 실증과 운항 시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항목별 개별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해 원활한 실증 지원

*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 (정책지원)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추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운영, 국제협력 등 정책지원 사항 규정
- (기타) 자율운항선박 정의, 운항해역 지정·고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성과지표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정책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저조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성과지표 부합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모두 이행하여 매우우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 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이하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자율운항선박 실증 추진 및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등 정책 효과가 양호하며,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 및 규제특례 등으로 시장선점 효과가 기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산항 진해신항)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을 기반으로 부산항 진해신항을 적기에 구축*('29. 1-1단계 개장)하기 위해 남방파제(4.20)와 투기장 호안(10.26) 등 외곽시설 발주

* 진해신항 개발 완료 시 부산항 전체의 연간 처리능력은 3,242만TEU('20년 기준 세계 3위의 처리능력)로 향상

- 부산항신항 서'컨' 부두와 진해신항을 단절시키고 있는 송도(섬)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10.31)되어 진해신항의 안정적 개발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부두 간 연결을 강화하여 항만운영 효율화 기대

* 송도개발 시 발생하는 토사, 석재는 진해신항 개발에 필요한 공사용 재료로 활용

-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재개발(7.31) 등으로 광양만권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세풍산단 매입('21~'23) 및 북측 배후단지 착공(7.24)으로 부족한 배후단지를 공급하는 한편, 안전항로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

* 묘도수도 직선화사업(1,426억원): ('23) 기초조사 → ('24) 착공 → ('30) 완공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973억원): ('20) 착공 → ('24) 완공

- (동해신항) 체선율*('21. 23%) 개선을 위한 기타광석·잡화부두(2선석) 발주(6.30), 원자재 공급용 석탄부두(1선석) 설계 착수(9.15)

*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항만 밖에서 대기하는 비율('20년 전국 평균 3.1%)

** 기타광석·잡화부두('23~'29), 석탄부두('21~'27)

- (인천항) 스마트항만인 신항 '컨'부두*(1-2단계) 개발('27)에 대비한 항로 연장 및 중심·준설 착공(6.29), 항만배후단지 2구역 완공('23.12)

- (새만금신항) 북측 진입도로 발주(3.2), 정박 선박의 안전을 위해 물결이 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파호안(북측) 완공(4.18) 등 새만금 신항이 '26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 적기 구축

- (테스트베드) 부산항신항 2-5단계 성과를 토대로,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4선석) 구축 본격 추진('23.11. 발주)
- (육성전략 수립) 항만장비 국산화율 제고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확대 전략' 발표(1.19)
 - * 점유율 목표(%): ('21) 2.4 → ('26) 4 → ('31) 10
- (지원기반 마련)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제정(7.19. 제2123348호 의원발의)을 추진하고 민관협력 통로로서 항만장비산업협회 설립(11.1)
- (장비산업 발전기반) 현재 조성 중인 부산항신항 2-6단계 부두에도 국산 크레인*을 도입('23.12. 발주)하여 내수기반 산업발전 추진
 - * 안벽크레인 6기, 야드크레인 34기 등 3천억원 규모, 항만장비는 안벽크레인(배에서 상·하역), 야드크레인(항만 육상부 적재), 이송장비(항만내 이송)으로 구분
- 광양항 테스트베드도 우선 국산 크레인 도입('23.12 발주)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 발주를 통해 자동이송장비(AGV)도 국산화 추진
 - * 안벽크레인 5기, 야드크레인 16기, 항만 AGV 22대 등 2.6천억원 규모
- (정책자금) 장비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2,498억원*(목표 대비 35% 초과)의 정책금융(대출·보증) 지원
 - * (산업은행) 458억원, (기업은행) 1,844억, (신용보증기금) 196억
- (인허가 간소화) 신항만건설사업 시 타법률 인허가 의제 범위를 항만시설뿐만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로 확대*하여 절차 효율화**
 - *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대상시설 : 항만시설로 제한 → 공공시설(공원,도로 등)로 확대
 - ** 항만시설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6개월 이상 단축 예상
- (참여기반 확대) 신항만건설촉진법 내 공모, 평가 등 객관적인 사업자 선정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의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 및 투자 촉진
 - * 그간 동법에 사업자 선정 절차 부재로 민간은 항만법, 민투법 등을 근거로만 참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산항 진해신항이 적기에 구축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양호함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하나 타 과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소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거점항만개발 및 항만기술산업 육성 등 정책효과가 우수하며, 신항만 시설 확충, 항만기술산업 발전 관련 기대효과가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항만기본계획)**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래 항만시설 수요, 항만시설 개발 등 중장기 항만개발 전략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
 -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별 현안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한 항만개발 수요예측 및 항만별 특화방안 마련
 - * 항만별 비전 수립, 부두기능 재정립, 선박대형화, 크루즈/여객수요 전망, 첨단항만 기술도입 방안 마련, 안전 시민친화형 SOC발굴 등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립
- **(탄소중립)**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22.5~24.5)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전략, 법·제도 기반 검토
 - 하역장비 동력 전환 및 친환경(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병커링,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등 탄소중립 시설계획을 수립
 - 기존 유류·석유화학 부두를 기능 전환하고 신규개발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확대 계획 수립
 - 항만 내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제조·발전시설을 도입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 추진
 - *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구체화 하기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 추진(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3.10.20)
- **(신규 연안항)** 신규 연안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여객·화물·어업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 개발 추진
 - 서해중부 영해기점에 위치한 격렬비열도항(충남 태안)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해상영토 분쟁 대응 및 신속한 구호활동 지원

- 관광특화 연안항인 진촌항(경남 통영)의 시설보강 및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객과 도서민의 편의를 증진하여 여객·화물·어업 등 산업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
-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의 항만기능 다각화 및 신성장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중부권 산업거점 복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기존 화물·물류 중심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한 지원시설, 친수시설 등 확충계획 수립
- (제도 개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장,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료 기준 마련 등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한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23.6.)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최대 2년)
 -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임대료 징수 방지
 - 2종 항만배후단지 양도제한 폐지, 국유재산 특례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항만법」 개정 완료('23.10.)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양도제한 폐지
 -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확대(20→30년)
- (규제 개선) 항로 및 정박지 구간 등의 유지준설 시급성 고려하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 준설공사 허가기간 단축(현행 20일 → 14일)
 - 선박대형화 등에 따른 양곡 수입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곡물동량 재검토 및 전망치 추정 후 양곡부두 배치조정 추진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사회·민간기업의 요구가 항만 및 배후지역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모두 이행하여 매우우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규제혁신,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효과과 글로벌 경쟁력 갖춘 항만성장 기대효과가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망거점 지속 확보)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동남아, 미국 등에 해외물류센터 4개 추가 확보 등 글로벌 물류망 지속확대
 - * (기존) 인니 자바주(21.9), 네덜란드 로테르담(22.1), 스페인 바로셀로나(22.6) 운영중 (추가) 베트남 호치민(23.12), 인니 자바주 수라야바(23.5), 미국 LA(23.12), 네덜란드 로테르담(23.12)
- (민관투자 촉진) 중견 물류기업과 공공기관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펀드 마련(24.上 출시) 및 간담회 개최
- (동유럽 물류투자) 이차전지·자동차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으로 부상*하는 동유럽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민관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10.13)
 - * 국내 배터리 3사(LG엔솔, 삼성SDI, SK온)와 현대차 생산공장은 운영, 기아차도 설립 논의중(슬로바키아)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550조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
-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 유망해외거점 확보, 우크라 재건사업 대응 등을 위해 국토부 공동 민관합동 국제물류 실무협의체 운영(23.12~)
- (우크라 기업 지원) 우크라 재건사업의 우리 기업 수주 및 투자 지원을 위해 국토부 공동으로 우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11.17, 200명 이상 참석)
 - * 6대 선도 프로젝트, 금융 및 보증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항만물류 현황 및 전망 등 안내
- (협력 MOU) 동유럽 물류 거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루마니아 콘스탄차항의 투자 선점을 위해 협력 MOU 체결
- (물류기업 해외지원)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및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등 총 12건 지원

-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과 아프리카 등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현지시장 개척사업 지원

*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현지 시장조사, 법률검토 등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8천만원)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물류기업 단독,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비용 지원(최대 4천만원)

- (해외시장 신규 진출) 물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3년 신규 해외시장 진출은 목표대로 10건 달성

- 최근 5년간('18~'23) 지원한 67건 중 49건(327억원 규모)의 투자가 성사되었으며, 24개 해외법인 및 중국, 미국, 폴란드 등에 10개 물류거점 확보

- (제도개선) 기업 간담회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개편

- 현행 사업 형태로는 지원하기 곤란한 유형의 지원수요를 포괄하기 위해 ①물류기업의 단독 조사도 지원하고, ②필요시 연구·컨설팅 기관 뿐만 아니라 他 물류기업으로부터의 컨설팅도 지원
- 신청 기업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으로 개선

- (유망 물류시장 설명회) 유럽의 생생한 현지 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알리고자 현지기관 물류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투자설명회 개최

* 동유럽의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슬로베니아 코퍼항 관계자 등 참여

- (기업 네트워크 확대) 국내외 물류기업 간 네트워크 축진을 위해 한상(韓商) 물류기업 설명회*,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 개최

* 인니 투자기획부 및 경제조정부, 세관, 인니 진출 우리 해운·물류기업 20여개 사 참석

** 해운·물류기업 CEO 및 임원 등 약 140여명 참석

- (신규 물동량 창출) 네덜란드, 인니 등 우리 물류센터를 통한 물동량 창출을 위해 기업 마케팅 및 이용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23년 만족도 평균 94.91점으로 전년 대비 10.56점 상승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장기 해외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국제물류 체계 구축 및 물류기업 간담회를 통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모두 이행하여 매우우수함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이상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우리 물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신시장진출 지원 등 항만공사와 민간기업의 협력사업의 정책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본 과제의 정책효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보통 정도의 정책효과로 판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항만) 항만 내 전영역(안벽-이송-적재) 무인화를 통한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준공으로 항만 운영의 생산성·안정성 혁신

* (부두명)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준공) '23.10월

- (기대효과) 국산장비 도입으로 생산유발 6,417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 유발, 무인화·스마트화로 항만 내 인적사고 저감 등 운영 안정성 제고

* (기존) 재래장비(트랙터, 크레인)에 사람 탑승 → (현재) 자동화장비 활용한 무인원격조종

- (기업 유치·홍보) 입주자격 완화*, 상시 모집, 임대료 감면, 유치 인력 보강(1→3명), 1:1 기업 홍보 등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 마련

* 기존에는 연구개발업종만으로 한정되었으나, 사업내용에 연구실증개발 내용 포함시 입주 가능

- 한국수력원자력의 연료전지 R&D사업 유치*, 하역장비 자동화 실증, 항만장비 국산화 R&D사업의 실제적인 입주의사 확인

* R&D 수행기업 공고시 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수행하도록 의무화('23.12.5)

- (전문인력 양성 연구) 광양항 활성화 용역*을 통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용역** 추진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22.6~12)

** 전문인력 양성을 등을 통한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23.8~'24.8)

- 클러스터별 핵심산업 동향과 육성방안 마련, 핵심산업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방안 마련 추진('24.下)

- (항만 배후단지)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임대면적 제한(15만㎡)의 초과 승인이 필요하나 초과승인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에 애로

*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가 큰 기업에 대해 초과 승인 가능

- 기관장 건의 기업 현장방문, 규제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정량 기준 마련 등 신속히 추진하여 규제 신속 개선(6.20)
- 정량 기준 충족시에는 별도의 승인없이 제한면적(15만㎡) 이상 부지 임대 가능하도록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6.20)
- (특화구역) 수출입 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방문한 현장 등에서 대규모 투자와 인접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특화구역 지정 건의(11.28)
 - 국제 탄소배출 규제 강화, 친환경 에너지 수요 확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내 친환경 에너지 특화구역(24만㎡) 신규 지정(12.6)
 -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 LNG 터미널(KET) 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수소복합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에너지 거점' 역할 수행
- (투자유치 마케팅) 국제물류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항만별 홍보부스 운영, 1:1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설명회 등 실시
 - * ALMAC 컨퍼런스 참여(11.21~22, 홍콩), 57개 기업 대상 1:1 비즈니스 미팅 실시, 30여개 기업 투자설명회 참석
 - 배후단지 입주 업체 1개사(대우로지스틱스)에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모델 홍보 및 신규 물동량 유치 활동 지원
- (경영 지원)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경영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 사업 기회 발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입주기업(총 5개 업체)의 경영실태 분석을 통해 수익성 개선, 경영 관리 고도화를 위한 기업 세무, 회계 개선방안 컨설팅 실시
 - *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용역('23.5~'24.12, 삼일회계법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만배후단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의견 수렴 등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거의 이행하여 우수 이상임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이상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항만배후단지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 촉진 등 정책효과가 양호하며, 물동량 실적 확대 추세 유지, 배후부지 외자유치 등 기대효과가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항만 서비스 다변화) 민간자본 1조 842억원을 유치하여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1선석), 수리조선소, 피더·잡화부두(3선석) 구축 추진
 - (양곡부두) 양곡부두 이전을 위한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4월)하고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 진행
 - (수리조선소) 민자사업 심의위원회(기재부)를 거쳐 제3자 공고(7월)
 - (피더·잡화부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경제성 등 민자 적격성조사(KDI PIMAC) 진행 중('22.8~)
- (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 적기공급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는 유지하되,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 도입
 - (사업방식 전환) 민간사업자 특혜(해지시 지급금, 재정지원 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행 협약(계약) 절차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로 정비
 - (공공성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배후단지 민간개발, 유사 법령을
비교하여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투기성 이익 방지 방안 마련 등
 - (실수요자 우대) 민간사업자가 취득토지의 40% 직접 사용하도록
평가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최초 제안자에 부여하는 가점제도 폐지
 - (투기성 이익제한) 분양가액을 총사업비의 115%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용지 사전확보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
- (현장점검) 항만 민자사업장에 대해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운영 근로자

안전관리 현황, 태풍·집중호우 등 대비를 위한 대책 등을 점검

- (교육) 부산청 등 11개 지방청(비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업무역량 강화 교육(‘23.3.~4) 및 청렴교육을 실시(‘23.9.)
 - (해외항만개발) 개도국 항만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항만 엔지니어링 및 건설·운영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개도국*의 항만 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지원 및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관계 구축
-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티모르, 조지아, 엘살바도르, 크로아티아
- (수주지원) 사우디(옥사곤), 이라크(알포항) 항만개발사업 관련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23.3), 국내기업(대우건설)이 알포항 ‘컨’ 터미널 기반개발공사 수주성과 창출(‘23.10, 1.4억불) 등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인프라 등 재건사업 관련 정부 간 협력방안 모색 및 국내기업 참여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재건협력단 파견(‘23.9)
 - (협력강화) 해외항만개발 관련 협력국의 고위급 정부인사(해외항만관계관)를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나라 항만개발·운영 과정을 홍보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
 - (공동 국제세미나) 아태지역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UNESCAP과 협력 및 공동세미나 개최
 - (해외진출 지원) 해외항만개발사업에 수주·투자 의향이 있는 국내기업에게 수주 활동 및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실시(‘23년, 3건 / 베트남, 미국, 싱가포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항만개발사업 관련 지원 지속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보통 정도임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하나 타 과제 대비 다소 미흡함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정도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다수민자사업 진행과 해외항만 개발 지원 등 정책효과와 국내외 항만에 민간투자 성과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그린메탄올 등)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그린메탄올(탄소저감 효과 최대 95%) PTS(Port to Ship, 항만 대 선박) 병커링 성공(7월, 울산항) 및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STS(Ship to Ship,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메탄올(그레이) 병커링 실증 성공*(11월, 울산항)
 - * 잠정 안전기준 마련, 위험도 평가 목록 개발, 안전계획 기술 자문(UPA-KR) 등 사전 준비
- (바이오선박유) 자동차운반선에 STS(Ship to Ship,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바이오선박유* 병커링 실증 성공(9월, 울산항)
 - * 선박 건조·개조 없이 바이오연료를 기존 연료와 혼합하여 즉시 사용 가능
- (LNG) 국내 최초 LNG 추진선의 선박 대 선박(STS) 병커링, 하역 동시 작업 실증 성공(10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철저한 사전 안전 검토
 - * 해수부, YGPA, KRISO, KR, 해경, 소방서, KOLB, H-Line, 포스코 등
-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 구축방안' 수립(11월)을 통해 선제적 공급망 구축, 국적선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수요 창출, 인프라 조성 등 향후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선도체계 기반 마련
 - (민간 투자 유도)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선박 선박금융 지원 추진(해진공법 개정 '23), 1조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 신설('24~) 등
 - (규제 개선) 내항해운고시 개정(11월)을 통해 액체화물선 병커링 추진, Truck to Ship 병커링 영업구역 제한 폐지(항만운송사업법 발의, 12월) 등
- (원스톱 항만서비스)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통해 영세한 항만 서비스 업체의 규모화와 하역사 중심의 원스톱 항만서비스 제공 (하역+항만서비스) 기반 마련(5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 (표준계약서) 저가 입찰, 불리한 계약서 활용 등의 불합리한 계약구조 개선을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 추진(5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통해 선박연료 불법 유통·급유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항만의 대외 신뢰도 제고('23.12,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선박연료 공급선에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석유 관리원이 정량공급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 (안전)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지침을 수립하여 메탄올, LNG 병커링시 안전관리구역 설정, 연료 유출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국내 여건에 맞는 작업 기준을 마련(11.24)

- (인프라) 전국 15개 항만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총 79.5억원을 투입, 151개 장비 설치·개선

- (안전관리체계)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한 항만별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정착 지원, 항만안전점검관 배치(2월)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조치

- (안전문화) “항만안전교육 포털” 운영비 지원 협약으로 항만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무상 수료 지원 및 항만하역 재해예방 기여자 시상

- (보안) 외국인 항만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 조사 실시 및 지침화 추진, 보안관련 지침을 통합한 '항만보안 통합지침' 마련

- (안티드론 등) 항만 내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드론 비행금지 제도 마련, 침입탐지장비 실증테스트를 통한 합리적 장비 설치기준 마련

* 드론의 항만내 비행금지, 불법드론 탐지·식별·무력화 및 비행금지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발의(6월) / 항만 드론테러 대응 매뉴얼(안) 마련(12월)

- (보안료 현실화) 징수대상 확대(공'컨', 환적 등) 등 제도개선('23)

* 현재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한 항만시설 보안 비용 총당 비율은 약 7.7%로 추정(요율 과소)

- (직무전환 지원) 기존항만 인력을 신규 스마트항만 인력으로 전환배치하기 위해 RC C/C, RC ARMGC, S/C 운전 직무전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침입탐지장비 실증테스트 등을 통해 신유형의 항만 보안 위협에 대응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이상임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우수한 정책적 효과 발생이 기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산업)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수립(10월, 관계 부처 합동)을 통해 선박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반 마련

- 산업육성 협력을 위한 산·학·연·관(29개) MOU 체결(4월)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정비(9월 개정안 발의)를 통한 산업 지원근거* 마련

* △산업인력 교육·양성, △금융·세제 지원, △국제표준화 및 △수출지원 등

- (해상교통서비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한 내항선 의료지원 서비스 시행

- (해양안전 음성정보) 먼바다(연안 최대 100km)에서도 바다내비 앱·단말기를 통해 안전복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음성 시스템 구축
- (통합 안내창구)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단말기, 서비스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상이한 문의처를 하나의 대표번호(ARS)로 통합 운영 실시

* 바다내비 단말기, 앱 서비스, 단말기 보급·등록, 해상무선통신망 등

- (해상무선통신망) 안정적인 해상무선통신망 제공을 통해 해상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바다내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해상 간 디지털 격차 해소

- (기지국 신·증설) 지형적 요인으로 통신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섬지역 어항·수로에 대한 안테나 신설·조정 등 통신품질 제고(3~9월)
- (통신관리)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의 유지보수 사업자(KT)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시범운영(24)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통신 서비스 품질(무형)을 지표화(유형)하여 측정·평가하는 방법

- (저변확대)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톤수제한 폐지**^{*}(2톤 이상 → 톤수제한 폐지, '23.6), 지원단가 증액(154 → 250만원, '23.6) 시행

* (지원대상) 기존 2톤 이상 어선 28,111척 → 61,376척, 약 2배이상 증가

- (신형 단말기 보급) 13인치 표시장치, 어군탐지기능 연동 단말기, 소형송수신기 개발·보급을 통해 이용자 수요 충족 및 선택권 강화

- (국제협력)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디지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협력방안 모색(6개 세션)

- 국내기업 수출 확대 지원,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산업 기술·장비 개발 현황 및 국제준화 동향 공유 등 추진(9월)

* 국제기구(IALA, IHO), 덴마크, 싱가포르 등 23개국 266명(해외 47, 국내 219)

** 국내 해양디지털 기업(HD현대 글로벌서비스 등)과 해외 기업간 수출협력 MOU 체결(2건)

- IMO 이사회(11.21~24) 계기,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관련 정책동향 및 기술개발 등 국제심포지엄(3개 세션) 개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이행 노력도,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 수요자와의 적극적인 정책 소통·확산 방안 제고
-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도 등 개선·보완 조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거의 이행하여 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정도임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바다내비 지원대상 확대 등 정책효과가 양호하고 바다내비를 통한 해양안전 복지증진 기대효과가 우수하나, 바다 내비 등의 국민 불편 해소가 요구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위성항법시스템) 부지 현장조사, 기본설계 검토, 센티미터급 임무 제어국 후보지 선정 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속 추진
- (국제협력) 한-미 위성항법회의(3월), 한-미 PNT 기술협력회의(9월),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연례회의(10월) 및 한-영 PNT 실무회의(11.23)를 통해 항법분야 협력 추진
- (법안대응) KPS 추진체계 마련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 항법체계 기본법안」 등 제정 대응
- (고정밀 위치정보) 고정밀(5cm) 위치정보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항공위성서비스(KASS) 기준국 데이터(제주, 울릉) 실시간 연계 협력(6.23)
- (인프라 구축) 전국 기준국(48개소)별 데이터 활용을 위해 소속기관(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GNSS 데이터 중앙처리국 설치 및 통합 검증 실시
 - * ('22) 기준국 14개소 추가 구축 → ('23) 중앙처리국 개발·설치 → ('24) 전국망 시험서비스
- (전국망 성능검증) 전국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전국망 기반 보강정보 생성 및 준 실시간 전국망 성능검증 실시*, 기술확보
 - * 인터넷망, LTE-M 등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즉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확보 완료
- (지상파항법서비스) GPS 전파교란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에 대한 적합성 향상 등 기술 고도화 추진('24년 예산반영)
 - * 확보된 원천기술은 해양에서 사용은 문제없으나, 내륙은 주변 환경 영향으로 수신에 제한

- (범부처 협력)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대비하여 국가안보실 주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GPS 전파혼신 대응 강화 방안(대외비)' 마련(10월)

* 우리부는 GPS 전파교란 대응 방안으로 eLoran 성능 강화방안 등 포함

- (활용 확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에 eLoran 현장 성능 실증 등 기술협력 추진 중('23.1~, 국토부)

* '30년 무인 UAM 본격 운항 예정 ⇒ 전파교란 시 인명 안전을 위해 수신기 장착 필수

- (스마트항로표지) 고효율의 경량 전용배터리 개발, 전용 주파수 (NB-IoT)확보 등 스마트항로표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운영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성 향상

- (국제선도) 국제표준(S-200)이 도입된 항로표지 스마트화를 통해 항로표지 부문 국제표준의 선도적인 역할 추진

- (신뢰성 제고) 안정된 시스템을 활용한 항로표지 기능 서비스 및 해무정보 등 대국민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 (해로드) 해로드의 기능개선, 활용성 증대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1,715명('23.9현재)을 구조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높이기 위한 검토 및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낮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및 지상파 항법서비스 제공 추진 정책효과가 보통 이상으로 양호한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략수립) 국제해운 탄소중립('50)을 이끌고 해운·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마련(2월)
 - * 탄소배출 규제강화에 선제적 대응 및 친환경 해운으로의 과감한 전환지원을 위해 선대개편 등 4대 추진전략 수립
- 정부부처·지자체 등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보급 정책·사업 등을 담은 「'23년 보급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23년 선박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관리기술 개발 착수, 연안선박에 대한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위한 '24년 신규 예산 확보 등 미래시장 선도를 이끌 친환경선박 新기술 개발 강화
 - 예타사업*을 통해 세계최대 규모(30MW급)의 전기추진 육상시험평가 설비 구축 등 친환경 원천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 *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산업부·해수부, '22~'31)
- (친환경 건조·개조) 영세한 연안선사의 친환경 전환 유인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 한도 상향* 등 노력으로 총 7척 건조 지원
 - * 국내 친환경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지원한도 50→100억원 상향
- (외항선)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선가의 일부(최대 10%)에 대해 보조금 지원하여 12척 건조 지원
- (공공선)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7척 건조를 착수하고, 단기간 내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기존 선박 20척도 친환경 개조(DPF 설치) 추진
- (표준설계 플랫폼)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 건조시 설계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선박 표준설계 플랫폼 구축
 - * ('23년) 어업지도선 등 6개 모델 개발

- **(녹색해운항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녹색 해운목표 정상급 행사(美·노르웨이 주관)”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이행현황·계획 공동 선언문 발표(조홍식 대통령 특사, 12.1)
 - 우리나라 탈탄소 정책 홍보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행사 개최(12.6)
- **(제도기반)** 친환경선박의 보급확산을 위해 각종 금융혜택 지원기준과 연계한 국가 인증제도 운영(32건) 및 기자재 인증 등 제도개선* 추진
 - * (기존) 친환경 선박 인증 → (개선) 친환경 선박 + 기자재 인증 / 고시개정 예정('24)
 - 정부 보조사업(선가 최대 30%) 및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금리우대 등 민간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술기준)** 수소 저장용기, 소수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23.4)」 등 친환경 신기술의 검사 및 실선박 건조를 위해 기술기준 마련
 - (상용화) 퇴역 관공선을 친환경 신기술 실증 선박으로 개조하여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해상 실증 및 실적 확보 등 상용화 지원
-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친환경인증선박 취득세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해운선사의 비용부담 완화
 - * 동법 제64조 제4항 신설 / 인증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 감면
- **(보조금·컨설팅 지원)** 규제 대응 여건이 열악한 중·소형선사 대상, 국내선사가 규제대응을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10%)를 보조금으로 지원('23년, 159척 지원 완료)
 - 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을 위한 기술적·운항적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에 대해 각 개별선사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 지원('23년, 71척 지원)
- **(국가감축목표 달성)** 내항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업체(9社)를 대상으로 '23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 및 제도이행 지원, 소규모 선박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제도를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기술개발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친환경선박 개조·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규제 이행 지원 효과가 우수하며, 향후 관련 산업 성장 기대효과가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원일자리 혁신방안) 노-사, 학계, 전문가 및 현직·예비 해기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7월)

*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1월~), 청년선원 정책위원회 출범 및 간담회(3월), 당·정 협의(7월)

-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원→500만원)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7월, 기재부 발표) 및 선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추진

* 해사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4~12월, 한국재정학회)

- (노-사 대타협)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 발맞춰,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일수 확대 등을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11월)

- '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및 상생을 위해 노·사가 대승적으로 합의*하여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사·정 공동선언'

* (주요내용)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 (선박직원법 개정) 해기사면허에 필요한 해기사 시험은 18세 이상 등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년들의 조기 취업 기반 확보

* 해기사가 될 수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 등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면허 취득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

- (시행령 개정) 선사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해기사 배출을 위해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해기사 양성 기관 지정*

* △해군교육사령부 △인천해사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해기교육원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이수 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기관으로 운영

- (해외취업 지원) 해외선사(크루즈, 쇄빙선 등)의 국제 일자리를 원하는 국내 청년 해기사에게 선사 맞춤형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직무 교육·훈련을 시행한 후 유류선사 등 해외취업 연계 지원
- (국적선원 양성) 업종별·면허급수별 교육, 실습연계 강화, 구인 수요 반영 등 오션폴리텍 과정을 통해 맞춤형 해기인력 양성 추진
 - (실습선) 오션폴리텍 및 국제승선실습 교육생의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실습선(선령34년)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 추진
- (일자리 지원) 청년해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계 맞춤형 실무특화 교육 실시, 취업연계 프로그램(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국적 해기사) 일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를 대체하여 국적 해기사 채용할 경우 평균임금차액을 선사에 지원하는 노사정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 (국적 부원) 산업계 맞춤형 신규 국적부원 양성을 위한 모집-교육-취업연계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원직 일자리 창출 및 수급 안정화 도모

* 부원양성 사업 설명회(1월), 선사 대상 채용수요조사(2~4월), 부원양성 지원자 대상 승선체험교육(4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발맞춰 관련 제도 정비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선원일자리 혁신방안 등으로 국적선원 양성 기반 강화, 선원 부족 현상에 대응한 정책으로 향후 정책효과 확대 기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원일자리 혁신방안) 노-사, 학계, 전문가 및 현직·예비 해기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7월)

*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1월~), 청년선원 정책위원회 출범 및 간담회(3월), 당·정 협의(7월)

-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원→500만원)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7월, 기재부 발표) 및 선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추진

* 해사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4~12월, 한국재정학회)

- (노-사 대타협)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 발맞춰,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일수 확대 등을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11월)

- '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및 상생을 위해 노·사가 대승적으로 합의*하여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사·정 공동선언'

* (주요내용)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 (인권 개선) 노사정 합동점검반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을 개선(근해, 원양)

* 노사정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휴식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 (선내 인권침해예방) 각 기관의 인권보호 시책을 주기적으로 확인·공유하고, '선박 내 괴롭힘 신고 전용창구(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를 마련하여 선원 노동인권을 개선을 추진

- (특별근로감독)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사의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 상환을 독려하여, 선원의 생계를 보장

* (설 명절) '22.12.21~'23.1.13. / 임금체불선원 해소율(80.5%)

** (추석 명절) '23.8.21~9.21 / 임금체불선원 해소율(73.5%)

- (교육) '선원 노동권 및 인권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선원 (외국인 포함), 선박소유자 등 47,000명 수강 완료(12.8 기준)
- (기준 마련) '선원 노동권 및 인권교육' 의무화('22.1, 선원법 개정) 에 따라 교육방법, 기간 등의 기준 마련을 위해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7월)

○ (해양원격의료) 전문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원양선원에게 비대면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 '23년 신규 20척을 설치하여 누계 160척 지원(선원 약 3,500명 관리)

** 원양선박에 위성통신 등 ICT 기술을 활용,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①건강상담 서비스, ②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

○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의 검진·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교육기관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원체계 구축

* (업무협약처) 제주·목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 (운영실적) 검사 1,381건, 상담 197건, 교육 1,476건('23.11월 기준)

○ (인프라 확충) 서남해권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충남지역 사무소 신규 개소(6월) 하고, 권역별 복지수혜 제공을 위한 선원 복지회관(6개소) 및 지역사무소(3개소) 운영하여 선원 후생복지 증진

○ (순직선원 지원) 해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순직선원을 예우하고 유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제비 지급 및 추모제(위령제) 지원

* 장제비 지급 49건(11월), 추모제(위령제) 지원 3건

○ (선원 복지) 선원들의 교통편의, 자녀 장학금, 휴양시설, 전자도서관 운영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선원복지 증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이직률 저감을 위해 선원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개선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선원 근로조건 개선 및 원격의료 등 정책효과 양호, 청년이직률 저감 및 선원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착수 전임에도 시민·지자체 요구를 과감히 수용, 인천 내항 부지 일부를 해안친수공간으로 우선 개방*(10월)
 - * 既개방된 상상플랫폼 부지(2.6만m²)와 연계하여 친수공간(3.9만m²) 조성, 인천 시민의 날 행사(10.14)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축제의 장으로 활용
- (지역 소통) 지역이 원하는 인천항 내항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4월) 하여 사업성 개선방안 도출, 사업시행자 확대**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 해수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 (기존) 인천항만공사(IPA) → (변경) IPA·인천시·인천도시공사
- (인천항-영종도 재개발) 영종·청라지구와 연계하여 골프장, 호텔 등 종합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조성 완료('14~'23)
- (광양항-LNG허브터미널) LNG 저장·발전시설 등이 항만과 연계된 에너지허브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타당성재조사 면제
- (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연계, 신소재, 복합 물류·제조 산업 등을 집적화한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조성 착공
- (거제-고현항 재개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항만기능을 상실한 고현항을 구도심과 연계하고, 해양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조성, 분양 등 차질없이 진행
-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지자체, 지역주민참여 상생협의체(분기 1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한 로드맵 마련('23.12)

- (부산항·용호부두 재개발) 장기간 유희상태가 예상되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주민 휴식공간, 포토존·경관조명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 (연안 정비) 기후변화, 해수면 지속 상승으로 증가되는 연안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지속 시행*, '23년에는 강원 동해 어달지구, 전북 부안 격포지구, 제주 수마포 지구 등 20개소 정비 완료
 - * 국가 시행 19개소, 지자체 시행 55개소
- 연안정비 완료 지역 중 매년 2개소('23년 부산 영도, 포항 송도)를 대상으로 사업효과* 평가, 개선사항 제시로 적기 보수·보강 지원
 - * 해변 지형, 환경·생태계, 해양 물리, 물적·인적 피해 여부 등
- (국민안심해안) 침식·재해 고위험 연안 20개소의 토지를 매입하여 완충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은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신규사업 착수
 - (시범사업) 동·서해권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계획 등 실행방안 수립('23.4~'24.12) 및 시범사업 설계 추진(2.27~)
 - * 강원 강릉시 순긋~사근진 지구, 전북 고창군 명사십리 지구
 - (대상지 선정) 후보지(30개소) 중에서 침식피해 정도, 배후 밀집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지(20개소) 확정(11월)
- (침식관리) 연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안 침식심각지역(12개소)을 선별(3월)하고, 유형별 방지대책 마련(4월~)
 -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기술 등 침식·퇴적 관련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4월)
- (설계기준 마련) 쏄해역 실측 파랑데이터로 도출한 최신 설계 기준파 제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해역환경에 부합하는 설계기준 마련('26)
 - 실제 관측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신규 파랑관측망*을 추가 설치(8개소. 10.5)하고, 기상청과 관측망(24개소) 공유
 - * 외해(파랑 데이터) → 근해(해안·파랑 데이터) → 시설물(파력 데이터) 확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이행노력도,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가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개선,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소통 확산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다수의 추진계획 지연이 발생하여 정책이행 노력도는 보통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재개발 추진 및 연안안전 정책효과 우수하며, 항만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및 연안 안전강화 기대효과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1876년 개항 이후 통제구역이었던 북항에 부지 92만m²를 신규 조성(24.3)하고 친수공원 18만m² 등을 지역시민에게 전면 개방(23.11)
 -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완공(3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친수공원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항만 공간의 이미지 개선
 - 교통, 집객·편의, 문화·관광 등 재개발 핵심 지원시설을 차질없이 확충 중(제10차 사업계획 변경, 2.17)
-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산시(대표사), 부산항만공사(BPA)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8월)하고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10월)
 - 2단계 조기착공 TF구성·운영*를 통해 조속한 착공을 위한 사업시행자지정,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 점검
- * (구성)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시설 이전) 물류·교통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2단계 부지 내 항만시설(자성대 부두* 등)과 철도부지를 순차적으로 이전
 - * 하역장비 해체·이동·재조립, 운영시스템 이전으로 항만 기능의 물류 연속성 유지
- (BIE* 실사 대응) 부지 조성현황을 실사단과 공유하고 장·차관이 실사단 면담, PT 발표에 직접 참여(4.5)하여 우리 정부 의지 전달
- *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시민참여 유치 행사) BIE 실사 일정(4.2~4.7)에 맞춰 부산항 북항 일원에서 론 라이트 쇼 등 시민 참여 유치기원 현장행사 개최

- (맞춤형 홍보) 북항 재개발 홍보관을 리뉴얼하여 프로젝션 맵핑*, 전면 스크린 등을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 입체적 체험 기회 제공

* Projection Mapping: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기존 공간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기술

- '23.11월 기준으로 약 8,000여 명 이상 방문하여 전년 동기 5,323명 대비 52% 증가

* 북항 재개발 홍보관 방문 실적(명): ('21) 2,840 → ('22) 5,986 → ('23.11) 8,08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적기 추진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 정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북항1단계 부지조성 개방, 2단계 적기 착공 준비 등 정책효과 우수, 국가균형개발, 해양관광거점 개발 관련하여 기대효과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기반)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연안재해(태풍, 해일, 해수면 상승 등)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마련(2월)

* 심해설계파 개정('19), 설계파 산정방식 개선('20), 설계파 재현빈도(50년→100년) 강화('21) / 국제무역항, 위험물 취급시설, 해군해경 시설 등 중요시설물에 100년 빈도를 적용

- (안전항만 구축) '23년 192억원을 투입하여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2월) 및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6월) 신규 착공

-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추진 중인 기존 사업(3개)도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연안재해에 사전 대비

*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 방파제 보강('23.12.11. 준공), 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 1-2공구) 보강('26년 완공 예정)

- (정책 홍보·공유) 항만관리청(지자체,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2회, 3.28., 3.30.)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홍보) 언론 브리핑('23.2), SNS(유튜브, 블로그 등)('23.6), KTX 영상 송출('23.4), (공유) 공동학술대회('23.5), 대국민 토론회('23.6), 울산 항만안전 컨퍼런스('23.11)

-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관리청 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및 국민 수용성을 높여 침수피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

* 항만관리청 및 광역지자체에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구축 사업 매뉴얼' 배포(12.15.)

- (안전시설 확충) 태풍이나 노후로 손상·파손된 항만 내 안전시설(안전난간, CCTV 등) 보수·보강*('23.6~)으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 '항만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 정비계획'('22.5)을 토대로 일제정비 착수 ('23~'24, 국가관리 항만 24개소, 314억원)

- (태풍피해 복구) 태풍 ‘콩레이’(‘18.10)로 피해를 본 부산항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복구공사(392억원)를 마무리(‘23.8)하여 배후항만 보호
- (방파제 안전)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안전사고*(미끄러짐, 추락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 통제구역 표시, 이용수칙 전파** 등으로 테트라포드 출입의 위험성을 알려 중대시민재해 예방
 - * 연도별 방파제 추락사고 현황(건): (‘21) 37 → (‘22) 16 → (‘23.9) 13
 - ** ‘해랑이가 알려주는 방파제 안전 이용수칙’(KTX·SRT, 전국 여객터미널) 상영(‘23.2~)
- (스마트 안전장비*) 장비 시범적용(‘22.11, 새만금신항, 가이드북(위험 공종별 권장장비 등) 제작·배포(‘23.12)로 항만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 추락 보호 에어백, 스마트 밴드, 긴급구조 버튼 및 위치 관제 등
 - 항만건설 재해 사례(‘18~‘22, 96건), 재해 유형(타격, 넘어짐, 끼임 등) 등 분석으로 주요 스마트 안전장비(10종) 선정(‘23.10)
- (중대재해 예방 점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안전점검 시행(50개소) 및 위험요소(82건) 개선 추진
 - 부산항 신항 등 50개 항만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안전 유해·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건설안전 전문가(9명)와 합동점검(상·하반기) 실시
 - * 총 308건 위험요소 개선(상반기 41개 현장 168건 / 하반기 44개 현장 140건)
- (한국형 설계기준) 한국형 설계기준 수립을 위해 외해, 근해, 연안 등 해양의 각 영역 데이터*를 관측하여 우리 해역의 기후변화 양상을 파악
 - * 외해(파랑 데이터) → 근해(해안·파랑 데이터) → 시설물(파력 데이터) 확보
 - ‘23년에 신규 파랑 관측망 8개소를 추가로 설치(10월0)하는 등 근해 설치*(31개소), 외해 설치(30개소**) 관측망에서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랑의 방향, 높이, 주기 등 관측
 - * 既 설치된 해안 관측망(23개소), 파력 계측기(2개소)에서 수리현상, 파력 등 관측
 - ** 기상청(24개소), 국립해양조사원(6개소)의 외해 관측자료 공동활용

□ 미흡 원인 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난이도 등 부합도가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검토 및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낮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안전한 항만 조성 및 중대재해 감소 등 정책효과 우수, 안전한 항만 조성으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기대효과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난매뉴얼 개정) 범부처 매뉴얼 종합개편계획('22.12)에 따라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전면개정*하여 국가 재난관리 정책 신속 반영

* ▲법령·지침에 따른 필수사항 반영,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매뉴얼 간결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 (이행·점검 등)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대비·대응에 활용,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11월)를 통해 매뉴얼을 이행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

*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개정 워크숍(6월), 매뉴얼 관리시스템 교육(8월) 등

- (태풍 위기관리) 풍수해(태풍 등)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사전 점검회의 및 현장점검 등 철저한 대비로 피해 예방에 노력

- (비상대응) 태풍(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50m/s)의 해양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비상기구(8.4~8.11) 구성·가동

* 태풍 발생(7.28, 금)부터 이동경로 모니터링 및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 매일 장관 보고

- (복합재난 현장훈련) 선박사고, 오염, 화재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울산항(5월), 광양항(10월), 울산신항(11월) 등에서 해수부, 해경청, 행안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시행

- (상황전파훈련) 우리부 종합상황실 및 소속·유관기관 합동 설·추석 연휴 기간 및 불시 상황전파훈련*을 통해 상황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6회)

* ▲여객선 침수사고(1월), ▲화물선 부두시설 접촉사고(3월), ▲화물선 침수사고(6월), ▲여객선 기관고장 사고(9월, 2회), ▲낚시어선 전복사고 대비(11월)

- (전기차 화재대응) 선박 내 전기차화재 발생 대비, 관계기관, 선사·선원 등 민·관 합동으로 특수 소화설비를 활용한 소화훈련 실시

- * 목포(7.11), 인천(8.18), 대산(8.21), 포항(9.19), 군산(9.22), 마산(9.25), 여수(9.26), 제주(10.16)
- (화재대응 TF) 소화·선박·구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대응 TF' 운영으로 기술기준 검토, 대응방안 마련 및 종합대책 수립 지원
- (매뉴얼개발) 운항관리규정 개정사항 발굴 및 표준안 작성 지원, 세부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 현장 행동요령 마련
- (대국민 홍보) 핵심요령을 위주로 해양 선박사고 국민행동요령의 내용 및 기능을 보완하여 콘텐츠의 대국민 친숙성 및 활용성 제고
 - * 웹툰 형식 이용, 상황별 구체성 보완 및 취약계층(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 삽입 등
- (재난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 취약계층(어린이, 다문화가정 포함)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6월), 안전보건협의회 운영(매월) 등 23개 사업장(본부+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정기·수시 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 자문위원회 강화(3.22),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8.1), 우리부 중대재해 매뉴얼 개정(11.14)
- (공공선박 컨설팅) 관공선, 국고여객선 등 공공선박(10척)에 대한 민·관 합동 컨설팅('23.7~9)으로 유해·위험요소 발굴·개선
- (영세사업장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등 소개 및 현장 애로사항 논의(8회)
 - * (일시/장소) '23.5~8. / 8개 권역(여수, 동해, 평택, 마산, 인천, 울산, 홍성, 포항) 순회 개최
- 해양수산분야 민간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7종) 제작·배포 및 사업장(2개) 맞춤형 컨설팅(10월),
- 기존 법률자문위원회에 해양수산 민간전문가 추가·확대(5인→10인) 하여 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 지원
 - * (중대산업재해) 해운·항만운송, 어업·수산, 마리나·수중레저, 박물관 등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수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인명피해 저감 등 정책효과 우수, 해양수산 재난관리 선진화로 사고저감 및 위상제고 기대효과 양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강도 안전대책) 선박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대책을 수립(2.13)

하여 취약선박 현장점검 강화, 사고선박 1:1 전담관리 등 역량 집중

* '27년까지 선박사고 인명피해 50% 감축('17년~'21년 평균 118명 → '27년 59명)

- '23년 11월까지 전체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79명으로, 전년동기(93명) 대비 15% 감소, 획기적 저감 성과 달성

* ('20) 126명 → ('21) 120 → ('22) 99 / ('22.11) 93 → ('23.11) 79(잠정)

- (취약선박 집중점검)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과 엔진 고장이 잦은 어선·레저선** 등 대상 집중점검 실시

* 연안여객선 총 160척(설·추석 연휴, 여름 휴가철), 국제여객선 총 22척(4~6월, 9월)에 대해 구명·소화설비 구비 여부, 비상대응실태 등 점검

** 어선보험 가입 어선(전국 800여척) 대상 기관전기설비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KOMSA, 수협), 자가정비 안내서안전운항점검표, 기관추진축계 사고예방을 위한 냉각호수 등 안전물품 보급(9~12월)

○ (간편 구명조끼) 작업 중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자력구조가 어려운 나홀로조업어선에 착용에 불편함이 없는 허리 착용형 구명조끼 개발·보급(6~12월)

○ (국민 안전교육)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23년 교육인원은 10.3만명으로 전년 동기(6.8만명) 대비 51% 증가

- 수도권(안산) 해양안전체험관 운영(6.4만명),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2.7만명), 물놀이 시설*(5개소) 내 안전체험시설** 운영(1만명)

* 여수, 울주, 통영, 남이섬, 음성 / ** 생존체험장, VR체험장, 해양안전 전시관

- 진도 해양안전체험관 신규 개관(12.7)으로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도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교육 인프라 본격 가동
- (현장 검사) 자동차 검사소와 같이 주요 권역 국가 어항에 선박 검사장을 마련*(5개소), 무상 안전점검 제공 등 어업인 편의 제고(7월)
 - * 국가어항 선박검사장(동해, 포항, 울산, 통영, 목포) / '26년까지 18개소 확대
- (원스톱 검사) 목포·인천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원격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
 - * 준공 현황: 서남권(목포) 선박안전지원센터(3.22), 인천권 선박안전지원센터(5.11)
- (스마트 운항관리) 여객선 항로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신속히 식별, 입출항할 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시스템* 도입(11월)
 - * (드론 모니터링) 여객선 항로에 어망·부유물 등을 조기 식별
(지능형 CCTV) 승하선 시 여객이 밀집되거나 입출항 중 충돌위험 감지 시 알람 발생
- (전기차 해상화재) 전기차의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카페리선박 내 적재·예방·탐지 등 전기차 화재예방 및 대응 지침 제작*·배포(6월)
 - * 제조사, 소화·선박·구조 전문가 등이 참여(8.1~11.23)하는 TF 구성하여 화재안전 기술개발, 관련기준 정비 등 안전대책 마련(12월)
- (소화훈련·교육) 연안여객선 대상 전기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훈련*, 여객선 종사자·관계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7.11~10.16. 전 지방청)
 - * 관할 해경, 소방서, KOMSA, 관내 카페리 여객선 운항선사 등 참여
- (관계기관 협업) 선박 구조·운항 기관 간 사고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화재 진화·여객 탈출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12월), 권역별로 화재 대응 지원인력 동원, 특수 소화 장비 활용이 가능한 대피항구 확보
- (IMO 이사국 연임)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11.27~12.6)에서 실시한 이사국 선거에서 A그룹*(해운국) 이사국에 선출되어 12연임('02~'25년) 달성
 - * 최상위 A그룹에 12연속 선출로, 해운·조선 등 해사강국의 위상 재확인 및 국제해사 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주도 기반 공고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고강도 안전대책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인명피해 저감, 안전과리체계 구축 등 정책효과가 매우 우수한 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사고 저감에 성과목표와 정책목표를 동기화 시킬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계획 수립)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체계적·실효적 이행을 위해 '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3월)
 - (대책 마련) 어선건조, 안전장비 개발·보급, 안전조업교육 내실화, 점검·단속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어선 쏙주기 안전대책」 마련(6월)
- (위치발신장치 보급) 원거리(100km↑) 해상에서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3년간('21~'23) 근해어선 총 1,950척*에 보급·의무화하여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관리 기반 마련
 - * 총 1,950척: ('21) 800척 → ('22) 700척 → ('23) 450척
 - (시스템 고도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어선원 조난자 구조를 위해 통신거리 확대 등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시스템 고도화
 - * 휴대성 제고(고리·시계형→구멍조끼 부착형), 통신거리 확대(1km→3.5km), 통신망 연계(D-MF/HF→D-MF/HF, e-Nav, LTE로 연계 확대)로 조난자와 어선 간 정보연계 강화
 - (사고 예방) 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대응을 위해 위치신호 2개 이상 동시 소실 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의 알람표출
- (인명피해 감소)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9명('23.11월 기준) 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동기(77명) 대비 10.3% 저감
 - * ('20년) 2,100건 → ('21년) 1,786건 → ('22년) 1,718건 → ('23년) 1,661건
- (법령 정비) 어선 위치보고율 제고와 함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복잡한 위치통지 횟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관련 「어선법」개정을 추진

-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현행) →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정)
- 「어선안전조업법」개정('22.10)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23.11)
- * 어선의 선장이 승선인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안전 교육) 전복·화재 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 유발 어선사고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실습형·체험형 교육* 확대
- * 가상현실(VR) 교육, 전복·화재사고 시 퇴선훈련 강화, 통신장비 활용법 등 비상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체계 마련
- 안전교육 의무대상 외 일반선원(외국인 포함)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플랫폼 운영하고, 어선사고 현장 영상물, 어선 안전사고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홍보 활성화
- (어선 건조기반) 어선건조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선소가 인적·물적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추진
- (어선 친환경화) 저탄소(하이브리드, LPG) 어선 원천기술 확보하고,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선질 친환경화를 위해 CFRP(탄소유리강화 섬유) 시제선 건조,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어선 개발 착수(5월~)
- * CFRP : 규제특구(전남, '21~'24) / HDPE : 규제특구(전남, '23~'25)
-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연근해어선 신형 기관, 고효율등(LED), 유류절감장치 지원 확대('22. 307척→ '23. 475척)
- (검사제도 개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5톤→10톤 미만) 하여 검사비용 절감 및 조업일수 확보하게 하는 등 어업인 편의 향상*
- (어선임대) 청년층 대상 유희어선 임차료 50% 지원, 어업이론·실습교육 지원을 통해 높은 초기 창업비용(3~10억원) 등 진입장벽 완화
- 임대용어선 125척(누적)과 청년어업인 28명을 모집하여 11건의 최종 임대차계약 체결(전년 대비 83% 증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난이도를 높여 부합도 상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부합도 검토 및 개선·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에 미치지 못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해양에너지 상용화 지원

- (조류발전) 기존 조류발전 규모 대비 10대 규모의 발전기 제작, 실증 추진으로 조류에너지 생산 대량화 기술 확보(1MW급, 500가구)
- 도서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조류 발전기(100kW, 개소당 50가구) 연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기술 확보, 국내 최초 조류발전 부품 및 발전기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조류발전 실험장' 조성(4.5MW급)
- (해양그린수소) 국내 최초 바다에서 청정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관련 기술 확보('23.8) 및 육상실증('23.9)을 진행
- (파력발전) 대규모 방파제 파력발전 단지구축('23~'27, 90kW~150kW, 227억원)을 위한 방파제 연계형 파력 발전 다수모듈 개발 착수

② 첨단 해양장비 개발 및 실증, 해저체류 기술 확보 본격화

- (수중글라이더) 국산화 개발 완료한 부력엔진, 배터리 수조 시험, 국내 최초 동중국해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관측 성공(8.13~9.19)
- (해양그리드) 고해상도 3차원 해양정보를 관측 후 준실시간*으로 제공('23~'28, 210억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개발 착수

* 관측 후 데이터 제공까지 기존 1~2년 소요 → 2~3시간 이내로 단축

- (해양드론)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종자 자격 취득 관련 지침(「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규제 완화*

* (기존) 조종자 증명 필수 취득인력 조종자·부조종자 포함 → (개편) 부조종자 제외

- (해저공간) 세계 2번째*로 해저공간 조성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울진 해역의 지반조사(3.5) 및 플랫폼 기본설계 완료(12.28)

* 세계 최초(美, '86년): 수심 18m, 6인, 10일 체류

② '친환경선박 산업 활성화' 지원

- (전기추진차도선) 세계 최초 항만에서 충전 가능한 선박용 이동식 배터리를 개발하고, 이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도선 실증('23, 18회)
- (LNG-암모니아 엔진*) 아시아 최초 LNG-암모니아 혼소엔진 개발을 위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구축, 운영절차 수립, 엔진 기초시험 평가
 - * 개발과정에서 이중연료 인젝터, 암모니아 공급장치 등 특허출원 3건, 연료공급시스템 운영절차서 수립 및 선급제출 등 성과확보
- (테스트베드) 친환경 선박기술의 시험·실적확보가 가능한 해상 테스트 베드의 본격 건조(용골거치식) 추진, '23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선정

③ 우리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추진

- (수출지원) 해양플랜트 해체 시범사업('22년) 성과를 통해 국내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약 1,630억원 수주달성
 - '한-아세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수출상담회' 개최, 인니시장의 국내기업 진출을 위해 정부간 회의, 기업간 MOU* 체결 지원 등
 - * 인니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니 기업 간 MOU 8건 체결('23.3., 인니 자카르타 외)
- (해외정보 제공) 유망사업 발굴·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지(월간) 발간, 해외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해 6개 협력사업 발굴 등

⑤ 해양심층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

- (해양심층수요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제소금으로 분류된 해양심층수소금을 기타소금으로 변경*하여 학교, 병원 등 판로 개척
 - * 해양심층수소금을 기타소금(암염, 호수염 등 포함)으로 분류('23.8 개정, '26.1 시행)
-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법」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 판매업을 신설하여 신고절차 관련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규모 확대 도모(국회제출, 11월)
- (수질관리) 오염수 방류(8.24)에 따라 긴급 수질검사를 실시(주 1~2회, 8.28~)하여 해양심층수 안전성 사전 확인을 통해 국민 건강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구개발 및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국내 최초 조류 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등의 성과가 우수하며, 차등적 상용화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자원 확보) 동남해 해역(8개 지역)에서 **확증표본 825종**(신규 35종*), 독도·울릉도 등 **미탐사** 지역에서 **생명자원 338종 확보**
 - * 신종(3종) : 세계 최초로 확보한 종, 미보유종(32종) :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종
- (희소자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희소 표본**(1900~1945년, 1,325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액 교체 및 형태학적 재분류(100점, 7월)
- (자원관리) 해양생명자원의 활용을 고려한 **전략적 자원확보 확대** 등 가치 중심의 **확보·관리·활용 연계방안*** 마련(12월)
 - * 산업적 활용 정보에 기반한 자원확보 및 발굴 추진, 자원조사 프로세스 효율화 등
- (종목목화) 국내 서식 중인 **해양수산생명자원 대상 종목목***을 구축하고(6월), **자원의 가치를 고려한 등급부여**(503종, 12월)
 -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외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공유 의무 발생 시 근거 제공
- (기탁등록기관) 자원 **확보율 제고**를 위해 기관 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울릉도, 5월),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지침** 마련(10월)
- (**해양바이오뱅크 확대**) 화장품, 의약품 등 **상용화 유망분야** 중심으로 **뱅크를 확대·개편***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확보 및 제공 확대
 - * (기존) 추출물, 미생물, 미세조류, 유전자원 등 해양생명자원 중심 뱅크
(개선)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항생제(병원성 세균) 등 사용목적형 뱅크('23~)
- 항균 기능이 우수한 소재 1천여점을 발굴하여 **항생제 뱅크**를 구축하고, 해양바이오 원천소재 확보('23년 2,222점) 및 분양 등 **제공 확대**
 - * 뱅크소재 분양실적 : ('18)108 → ('19)150 → ('20)194 → ('21)226 → ('22)302 → ('23)353
- (**상용화 지원**) 해양바이오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업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해양바이오뱅크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 성과 창출**

* ①해양 미세조류의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연구, ②해조류 유래 식물성 조직재생 활성물질(PDRN) 생산공정 개발 및 실용화 기술 개발 등

- (유망소재 발굴) 상용화 유망소재 확대를 위해 R&D 성과물 등 고부가가치 원천소재 1만 9천여 점*(누계) 전략적 확보

* 추출물, 미생물, 유전자원, 미세조류, 화장품·항생제 소재 등

- (산업화) 발굴된 해양바이오 소재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6건), 특허 등록 및 원료등록 등 추진

- (인증지원) 해양바이오 소재 상용화의 주된 장애요인인 식약처 인증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내서 마련(12월)

* 식약처 인허가 시 인증신청 절차 및 서류작성 어려움 호소('21년 산업실태조사),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 인증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건의(기업간담회, '23.2)

- (박람회)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산업투자 확대 및 정책 개발을 위한 해양바이오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6.28~29)

- 기존 연구자 중심의 성과공유 포럼을 확대, 산업계·지자체·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 및 제품화 성과 홍보, 기업 컨설팅, 포럼 등 운영

- (인프라 확충) 지역별 강점 및 특화전략을 고려한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조성(중부권, 서남부권, 동부권)을 통해 산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추진

- (국제협약 대응) BBNJ 협정 타결(3.4) 대응을 위해 TF운영, 환경단체, 원양산업협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BBNJ 협정 설명회 개최(9월) 등

- (교육) 해양생물을 주제로 한 LED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상영, 연구자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복합 전시공간 '사이언스 카페' 설치(12월) 및 해양생명자원 교육 운영(30개교, 1,092명 참여)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산·어촌 학생, 중·고교 동아리 등을 대상코딩 체험과 연계한 융합형 프로그램, 실험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 미흡 원인 분석 결과

- 정책 효과가 다소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바이오 확보·관리·이용 분야 핵심정책의 효과성 확산 방안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자원확보를 위한 바이오뱅크 구축, 해양바이오 상용화 촉진 등은 과학적, 산업적으로는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바는 다소 낮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업발굴) 해양수산 기업발굴과 창업~사업화, 투자유치까지 전담 지원하는 전문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유망기업 40개사 발굴·지원(전년대비 25%증, 유망기업 중 31개사가 청년대표 기업)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멘토링, 투자유치 등 지원

- (집중보육)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선도기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등으로 안정적 시장진출 지원

- (예비오션)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기업 8개사를 발굴하여 해수부 장관이 직접 인증서 수여(8월) 등*

* 인증 기업은 홍보영상 제작, 사업화 자금.컨설팅, 투자기관 매칭 등 집중 지원을 약속(가점)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노력

- (혁신제품 인증)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개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증('20~'23년, 총 29건)하여 공공구매 지원으로 초기 시장 진입 지원

- 혁신제품 제도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을 재평가하여 9건에 대해 1년 연장 완료

- (신기술 인증) 해양수산 우수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해수부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인증마크 사용 등 거래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 신기술 인증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R&D과제 신청 시 가점(2점), 창업·투자 지원 가점(1점)

** 연도별 신기술 건수 : ('21년) 11건 → ('22년) 17건 → ('23년) 24건

- (해외진출) 해양수산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제품을 수출국가의 특성에 맞게 사업화, 해당국 인증 획득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8개사)

- (모태펀드) '23년 11월말기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해양 모태펀드의 투자실적은 158억원('23.11)으로 '22년말 해양모태펀드 투자실적인 119억원을 초과 달성(전년대비 33% 증)
- 또한, 해양모태펀드 조성규모는 '22년말 1,036억원이었으나, '23년말 1,236억원으로 200억원 추가조성 달성(전년대비 19% 증)
- (후속투자) '23년 창업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IR 등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후속투자도 342억원 달성
- (민간투자)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을 위하여 해수부-신한은행간 MOU를 체결하여, 신한은행측에서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3년간('23~'25)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의
- * ('23년 실적)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에서 추출한 원사를 활용한 친환경의류 제작 창업기업에 3억원을 투자
- (네트워크) 벤처캐피탈, 한국벤처투자 등 민간투자기관 48개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개최*
-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 유망기업 IR 실시, 투자기관 피드백 등
-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해양수산분야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역 양성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7,11월)
- (취업박람회) 채용 역량 강화 지원, (채용정보 제공, 채용 상담 등)부터 1:1 채용 면접까지 종합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개최(8월)
- (인력 양성)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방안'을 수립(5.3)하고, 연구자 생애주기별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 추진(5월~)
- * 초·중·고 → 대학·대학원 → 청년연구자 → 산학연 채용·퇴직
- 13개 연구기관 간 협약, 청년연구자 간담회(6.16. 장관)*, 초등생 교육 체험, 대학생 진로상담, 청년연구자 양성과정 운영(8월, 10월)
- * 해양과기원, 수과원, 자원관, 해양학회 등 13개 기관·단체장, 청년연구자 등 참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수산분야 유망 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지속 지원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은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청년기업 육성, 예비오션스타 기업인증, 기술사업화로 해외진출 등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편익증진 효과가 우수하며,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으로 해양산업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주요 관광 테마 중점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 (크루즈) 코로나로 인한 입항 중단('20.2) 후 관광객 선점을 위해 동북아 최초로 입항 재개를 결정하고, 사전 준비

-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 수립(1월) 하고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적용배제(1.9), 출발지 입국심사 시행**(7.3) 등 편의 증진으로 관광객*** 수요 확대에 기여

* 무비자 프로그램상 해당국으로 여행하는데 적합여부를 사전허가 하는 시스템

** 크루즈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 : 1인당 2~3분 → 7초 이내(95% 단축)

*** 크루즈선박 외국인 관광객(만명): ('18) 20.2 → ('19) 26.7 → ('20~'22)실적없음 → ('23) 27(잠정)

○ (해양치유)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한 4개 지역 거점*에 국민건강증진 치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해양치유센터** 조성 중이며,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무료 시범운영('23.9~11) 후 국내 최초 개관(11월)

* 전남 완도(11.24), 충남 태안('24년 完), 경남 고성, 경북 울진('25년 完)

** 생산유발 2,702억원, 부가가치 1,097억원, 고용 13,020명 기대

- (인력 양성) 해양치유전문인력 양성기관 최초 지정(조선대, 단국대, 8월), 치유활동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육성('23년 70명)

- (거버넌스 구축) 현재 조성중인 지역별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정례화

* 해수부, 완도군, 태안군, 고성군(경남), 울진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마리나) 전국 마리나 네트워크의 권역별 중심역할을 수행할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 조성 추진 중

* (울진) 준공('22.8), (창원) 공사중('20.3~'24.12), (여수) 실시계획승인(9.26) 외 3개소 계획 수립 중

- 민자 마리나 2,144억원 유치* 등을 통해 전국 인프라 78.1% 증가**

* 인천 영종도('23.12월 실시협약체결, 1,149억원), 부안 공항('23.8월 신규제안접수, 995억원)

** ('19) 37개소, 2,403선석 → ('23) 54, 4,280(17개소 ↑, 1,877선석 ↑)

- (비즈센터) 마리나 선박 판매, 수리,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마리나 비즈센터 구축 중(통영, 부산)

2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

- (해양레저관광거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수중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올해 2개소를 신규 선정(경주, 보령), 전국 7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

* (기존 5개소) 시흥(도시위락형), 군산(레저휴양형), 보성(관광형), 강원 고성(수중레저형), 제주(수중레저형)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복합거점 조성 중이며, 마스터플랜 수립('23.4~'24.12)을 통해 '24년 사업 대상지 선정 예정

-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남해안권(부산-경남-전남)을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국제적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 중*

* 해수부장관-부산시장-경남도지사-전남도지사 간 전략·계획 연계 및 관련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체결(2.20)

- (쾌적한 해수욕장) 해수욕장 '알박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6.28)을 통해 올바른 해수욕장 이용 질서 확립, 이용객 만족도 향상('22. : 72.4점→'23. : 74.3점)

* 지자체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절차, 제거 요건 등을 명시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개정. 6.28)

- (안심 해수욕장) 휴가철 휴양지인 해수욕장의 방사능 조사*, 정확한 정보 공유 등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해양레저활동 위축 방지

* 대표해수욕장 20개소 대상 개장 전(1회), 개장 후(매주) 실시 → 조사 안전성 확인결과 공표(총 261건)

- 개장 전·후 주요 해수욕장 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시설 운영현황 등을 반복적으로 점검하여 물놀이 사고 사전 차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낮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국내최초 해양치유센터 개관, 코로나 이후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신속한 방사능 조사를 통한 해수욕장 안심이용 등으로 레저관광 활성화 및 신해양경제 창출에 기여함. 향후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산 〉

- (추진체계) 중앙 전담기구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4월, 신규)하고, 지역센터 및 해양교육전문기관 시범운영을 통해 해양교육센터와 연계, 해양교육 확산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추진

* 관련 시설·단체 연계·지원, 정책개발 및 국가 해양교육 정책 지원

- (교육저변 확대) 해양교육 교과서 개발,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확산 등 저변 확대

* (유초중) 유아용(만3~5세) 교육교재 개발(신규), '찾아가는 해양교실, 청소년 진로교육 등 / (고교) 고교학점제('25) 대비, 교육부·마이스터고와 협업하여 해양수산을 포괄하는 '통합해양 교과서' 개발(11월) / (대학) 해양강좌 개설('22. 4개→ '23. 5개 대학)

- (접근성 제고) 일반인 대상 해양강좌 확대(대면)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기반 강화를 통해 해양교육의 접근성 제고

* 수요일엔 바다톡톡, 해양 교육·문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누리집(해양교육 포털) 개편, 공개강좌플랫폼(K-오션MOOC, '23.2 신규개설)

- (해양문화 확산) 해양수산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5.31, 경주) 등 개최, 바다동요대회, 해양사진대전 등 예술창작지원 등

- (네트워킹) 해양 관련 국립 교육·문화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여 참여기관 확대(7→9개), 공동 프로젝트(공동활용 교구 개발) 추진

* ('22) 7개(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수산물과학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재단 → ('23) 9개(+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수산물개발원)

- (거버넌스^{확대}) 정책협의회, 해양 CEO세미나 등을 마련하여 학계·산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해군, 해경 등 해양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

〈 나. 해양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 (수도권) 운영근거 마련(6.20, 「해양박물관법」 개정), 정원(111명) 및 예산(74억원) 확보 등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준비* 완료('24. 개관)

* '23년 전시유물 누적 10,107점 확보('23년 2,746점)

- (내륙지역) 내륙(충북)지역 청소년들도 가까이에서 해양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추진 중('25. 개관예정)

- (여수세계박람회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성과 부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관리주체 변경(재단→YGPA), 사후활용 위원회* 구성(7월) 등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을 추진

*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도시·경관,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지역주민 포함)

〈 다. 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

-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상설전시실 개편 등을 통해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기획전시, 2023 해양교육문화박람회(5월), Insight Into the Ocean 2023(10월) 국제포럼 등을 개최

* 1일 평균관람객(명): ('21) 525 → ('22) 2,528 → ('23) 3,239

- (사회공헌) 찾아가는 국립해양박물관(1,250명), 진로캠프 2회(39명), 문화 교육사 양성(22명) 및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실시

* '영도를 부탁해', '강아지를 부탁해' 등 주민과 함께 정화활동 등 사회 프로그램 운영

- (국립해양과학관) 어린이를 위한 '바다탐험대 옥토넷!' 기획전 개최(7월), '제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산업 축전(10월)', 해양인재캠프 등 지역 연계, 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해양과학문화 확산 및 해양과학 대중화

* 1일 평균관람객(명): ('21) 349 → ('22) 644 → ('23) 960

-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 전국 해양수산 분야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등 19개 기관 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활성화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품 순회 전시(4~10월 8개 기관 참여), 합동 해양환경캠페인(10~12월)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교육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접근성 제고 및 콘텐츠 등 개발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해양교육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경제사회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도개선) 관리유형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위 제한 완화,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위한 무인도서법 일부 개정*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토지소유자 시설물 설치 허용 등('23.8 공포, '24.2 시행)

- (쓰레기 처리) 보전형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여 수거 사업 추진 및 예산 증액 등 제도 기반 마련

- 11개 무인도서에서 약 4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23년 시범사업)하고, 사업 확대 및 오염원인 분석을 위한 예산을 확보(45억원)

- (영해기점) 해양영토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최외곽 도서에 영해 기준점 표지 설치 완료('16~'22년)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 영해기준점 표지 설치를 위해 개발가능으로 변경('15)되었던 것을 절대보전으로 변경

- (홍보강화) 올해의 섬*으로 “가거도” 선정(행안부 협업, 1월) 및 KBS 다큐멘터리* 제작·방영('23.8.5.), 섬 관련 정책 기고('23.8.8., 한국일보)

*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23년부터 매년 1월 영해 기점 도서(유인도 7개)를 대상으로 “올해의 섬” 선정

- (소통강화) 보전형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처리*, 민(NGO)·관 합동 현장조사 및 주민간담회** 실시

* 11개 보전형 국·공유 무인도서 해양쓰레기(약 45톤) 수거·처리

** 거문도 주변 준보전무인도서 해양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 2회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23.6, 9월)

- (정보연계) 해양수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무인도서 주변 관광 정보, 어장정보, 사고현황 등을 지도 기반으로 가시화
-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사용자 맞춤형 POI기반 시각화 기능 제공과 무인도서 실태조사 자료 표출 기능을 개선하여 실태조사 구축 연도별 결과 서비스
- (관리자 서비스 개선) 지형도면 고시 도면을 PDF로 다운로드 하고, 최신의 연속지적도 제공과 도면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만족 분석결과를 반영한 메인화면 구성변경 및 실태조사 기반 시청각 자료 개선 등 홍보기능 강화
- (도서 홍보) 매달 이달의 무인도서를 정하고 관련 포스터, 카드뉴스,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무인도서 관련 홍보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무인도서 관련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소통강화나 홍보강화 등 정책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과학기지) 동해(왕돌초)에 첨단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여 동해의 지리적·과학적 특성을 연계한 해양관측 및 연구 활성화
 - 동한난류 변동, 수중 해양생태 환경 변화, 기후변화 기인 해양환경 변화 등 동해에 특화된 장기 해양관측 및 연구거점으로 활용
- (이안류 감시서비스) 실시간 해양관측정보를 이용한 이안류 지수 산출 및 해수욕 시즌 이안류 감시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이안류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지원
 - 이안류로 인한 하계 해수욕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대상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10개소*)

*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임랑, 속초, 망상, 고래불

- (독도 가치 제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독도생태·지형·환경 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연구 수행 및 국외 성과 확산
 - 국내외 독도 관련 연구 논문 18건 발표(SCI급 11건)
 - 독도 해역 퇴적토에서 분리한 유용 균주에서 항암효과가 우수한 신물질 미국 특허 출원(11월) 등 특허 1건 등록, 3건 출원
- (독도방문확대) 사회적 배려층·외국인 유학생·원어민 교사 등 1,085명* 대상 독도 방문기회 제공, 국·내외 독도 영유권 인식 확산에 기여

* '22년 901명 대비 20.4% 증가

- (민간홍보사업지원) 독도 관련 영문 학술서적(세계국제법협회 한국 본부) 발간·배포 및 독도의 날 문화행사, 독도 교육·홍보 등 다양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 사업 공모요건 완화를 통한 지원 다변화 : ('22) 4개 단체 → ('23) 9개 단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검토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 강화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정책효과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을 통해 우수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우수성과) '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남극 빙하가 녹는 메커니즘에 관한 2개 성과 선정, 빙하가 녹는 속도 예측에 활용 기대
* (대상)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선정
- (극한지 탐사) 극한지 사물인터넷 기반 통신·관측·무인이동체 기술 개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근(해발 2,733m 등)에서 지능형 관측 및 무인이동로봇의 자율주행 테스트 등 실증 성공(11월)
- (해수면 상승·한파) 남극 빙붕(대륙빙하)이 급격히 녹는 원인을 규명하여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개발 착수, 이상한파 관련, 북극 해빙·해양 변화 관측자료가 결합된 기후예측모델 개발
- (대양 기인 재해) 인도양, 북서태평양 등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 탐사를 통해 태풍 등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 강화
- (해양자원탐사) 개발유망광구 선정을 위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서태평양 망간각 탐사를 통해 신규 열수광체 발견(3곳), 망간각 시추코어 획득(63개)
- (차세대 쇄빙연구선) 기본설계*(~'23.2)를 통해 아라온호(1m/3노트) 대비 강화된 쇄빙능력(1.5m/3노트)을 만족하는 초기 선형 개발
- 영하 60도에서도 작동가능한 선박 기자재(선박용 통행로) 개발, 아라온호 북극항해(척치해) 중 1차 실증 완료(10월)
- (실용화센터) 영하 40℃ 극한 환경을 재현한센터 완공(11월, 인천), 생명자원·퇴적물 등 극지 특수 시료를 민간에 개방*, 센터 내 산업체 지원 시설(산·학·연), 오픈 랩(학생 및 교사)을 운영하여 연구·실험을 지원
- (공동활용) 민간 연구자들이 극지 인프라(남극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북극해 영구동토층 모니터링 등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

- (극지 정책협의체) 극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제 회의 의제 대응, 과학연구 추진방향 논의를 수행하는 부처 간 협의체 구축
 - * 해수부, 외교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등 참여
- (인력양성) 극지 관련 강의 수강, 컨퍼런스 참석, 관련 연구 수행 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북극항로 운항인력(선원·연구원 등 35명), UST-School**을 통한 극지 자연·사회과학 전문가(3명) 등 양성
 - * 연간 2인 내외 선발, 1인당 1학기 최대 10백만원, 최대 4학기 지원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출연연에 설치, 특화 분야 학제 중심 교육
-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직접 북극에서 빙하 관찰 등 연구활동을 체험
 - * '23.7.30~8.6 / 북극 다산과학기지(노르웨이 스발바르) / 북극연구체험단 4명
- (북극권) 북극 원주민*(8명)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북극대학 교류 프로그램**(42명 수료)을 통해 북극권 미래세대와 네트워크 구축
- (북극협력) 북극협력주간 개최를 통해 북극 관련 기관 간 MOU체결(4건), 극지의학·북극경제활동 등 세션 주제·참여기관 확대 및 대중강연, 푸드세션 등 다양한 시민참여 부대행사를 마련
- (협력 확대) 북극권 국가와 협력의제 확대, 비북극권 국가로 북극협력 채널 확장
 - *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코틀랜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인도
- (남극조약 대응) 제4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우리나라 극지활동전략*을 소개하고, 남극 감염병관리방안을 제안
 - * 「제4차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3~27)」
- (국제협력)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총회('23.3,7,11월) 대응,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국제 워크숍(11월) 개최, 국제중앙해령연구협의체 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협력 확대
- (극지 홍보) 북극협력주간, 극지예술전시회, 극지체험전시회, 청소년 대상 극지논술공모전 등을 통해 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및 정책 효과 등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북극협력주간 개최를 통한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정책효과 확산 방안 제고
- 성과지표 개선·보완 반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 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극지 연구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임. 다만 대양연구기반 구축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균형을 맞추어 필요가 있어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FTA/한-UAE*) 수입 민감품목인 새우를 비롯하여 주요 생산품목인 갈치, 오징어 등을 양허 제외하여 국내 생산자 영향 최소화, 김, 건조멸치, 전복 등이 즉시~10년 철폐되어 중장기 수출 확대 기대

* 우리측 품목수69.1% 수입액28.0% ↔ UAE측 품목수98.1% 수입액85.4% 개방

** 즉시철폐(김, 건조멸치, 한천, 냉동전복) / 5년철폐(조미김) / 10년철폐(소금, 냉동고등어)

- (FTA/한-에콰도르*)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우려가 큰 새우에 대해 TRQ 방식으로 개방하여 수입시 피해 최소화, 품목에 따라 즉시철폐~5년 철폐***로 협상하여 대외경쟁력이 높은 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기대

* 우리측 품목수 83.4% 수입액 3.2% ↔ 에측 품목수/수입액100% 개방

** 즉시철폐(다랑어류, 건조김, 냉동삼치 등) / 5년철폐(조미김)

- (WTO)'22.6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정 채택 시 합의되지 못한 면세유·원양보조금 등 민감쟁점 관련 후속협상 대응

- 수산보조금 정례협상에서 제안서 제출 및 발언 다수, 유사입장국과 공조하여 우리 입장 반영 추진

- (IPEF) IPEF 출범('22.5월) 이후 각료선언문 합의를 거쳐 협상 개시('22.12.),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공급망협정(필라2) 및 청정경제협정(필라3) 타결

* 무역협정(필라1)은 농업章 등 일부 조항만 부분타결

- (탄력관세 연장) '24년도에도 수산물은 '23년과 동일하게 탄력관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산업계 보호

- (수시 할당관세 운영) 고등어 등 대중성 수산물에 대한 수시 할당관세를 적용(2월, 5월, 10월 총 3회)하여 물가 안정 추진

* 냉동고등어 할당관세(10%→0%) 적용

- (조정관세 개선) 갈치어업 경비의 40%를 차지하는 쾡치에 대한 조정관세를 폐지(미끼용에 한함, 24%→10%)하여 갈치어업계 경영난 완화(5월)
- (일본 김 IQ 대응) 일본 내 김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품목별로는 일본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마른김, 김조제품의 비중을 높이고, 수출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우리 수출업체에 유리한 수요자 할당* 비중 확대
 - * 수입(日)·수출(韓)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들이 양국 단체가 주관하는 입찰상담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
- (환산율 개선) 단위 환산시 첨가물 무게까지 포함하여 계산됨에 따라 실질쿼터가 감소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일측에 김조제품*의 환산율 변경을 지속 제안하여 일본측 동의
 - * 마른김, 무당조미김 外 자반김, 구운김, 김가루, 김스낵 등은 3g을 1장으로 환산하여 수출 쿼터 소진을 계산
- (입찰상담회) 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역대 최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대일 김 수출 증가***에 기여
 - * 전년 650억원보다 61.5% 증가한 1,0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달성
 - ** ('22.10) 25,976톤 / 55.7백만불 → ('23.10) 30,446톤(17.3% 증) / 67.1백만불(20.4% 증)
- (어류 명칭개선)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큰민어'를 추가하고 '남방먹조기'명칭을 병기 적용(2월)
 -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의 민어과 명칭 개선을 건의 및 반영을 통해 국내산 민어와 혼동될 수 있는 수입산 민어과 어류 명칭을 개선
 - * '큰민어'→'남방먹조기', '홍민어'→'점성어'가 대표명칭으로 반영
- (소통강화) 어업인·전문가·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통상협상(WTO 수산보조금, IPEF, FTA 협상 등) 동향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통상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 통상 정책 방향을 점검
 - 업계 대상 수요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할당관세(관세인하)·조정관세(관세인상) 제도 적용이 필요한 수산물에 대한 의견수렴
 - * 수요조사 : '23.8.23~9.5, 수협, 원양산업협회, 전국 지자체 등 대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통상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수산분야 통상협상에서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들(수산업 종사자, 수산물 소비자 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략적 ODA 확대) “K-Ocean Economy Initiative*”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수산업 발전 등 관련 해양수산 ODA 확대

* 블루 이코노미, 청색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연안국가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확대, 국제 현안 공동 대응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규제 대응 역량이 미흡한 개도국에 선박 온실가스 저감 체계 구축(필리핀·베트남), 해수온도차 발전 기술(마셜) 등을 지원
- (수산업 발전) 어촌 뉴딜 사업 확산(투발루), 스마트 양식 기술 지원(인나) 등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기업 진출의 발판 마련

- (다자협력 강화) 해양환경 보호, IUU어업 근절 등 국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23, 4개→’24, 6개*)

* (‘23) FAO·IUCN·IMO(국제해사기구)·PEMSEA(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 (‘24) FAO·IUCN·IMO·PEMSEA·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WMU(세계해사대학)

- (해양환경 보호) IMO, PEAMS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23년 신규 사업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저감(동티모르·필리핀 선박 해양폐기물 저감(베트남 등)

- (IUU 근절) WMU와 개도국의 IUU어업 근절 관련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FAO와 협력하여 부산을 아·태지역 PSMA 교육 허브로 육성**

* 지중해 지역 개도국 공무원 대상 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개최(‘23.8.14.~25. 스위스 말뚝)

** 항만국 검색(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 '24년 신규 예산 반영

- (ODA 체계 개편) ODA 전문기관(KMI)을 통해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수원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 (바다프로그램) 수원국 공무원, 전문가 초청, 국내 ODA 전문기관과 매칭, 신규사업화를 위한 필요한 절차 등 상세 안내('23.10.17.~20.)

- (사업 점검·평가) 사업별 주요 추진 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점검, 현장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해양수산 실무협의회*** 개최, **외부 전문가의 현지 조사·평가 결과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 도입 등

* OCEAN AID 1차('23.7월) 2차('23.7~8월 4섹션으로 분할 개최), 3차('23.12월)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및 양자면담) 대통령 특사, 국제행사 계기 등 국내외 접촉 기회를 활용, 41개국·103회 양자 면담 실시

* (대통령 특사) 2회(뉴질랜드, 통가 출장 5.14~20 / PIF 정상회의 계기 쿡제도 출장, 11.6~10)

** (국제 행사) 2023 해양수산 국제협력컨퍼런스(5.30, 부산), CARICOM 정상회의(7.3~7.6, T&T), 2023 세계어촌대회(9.19~21, 부산),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0.10, 서울) 어촌특화개발사업 착수식(11.3, 투발루) 등

- (태도국) 장관 등 고위급의 연속적인 교류*를 통한 한-태도국 간 유대관계 강화, 실질적 협력사업 발굴, MOU체결 등을 통해 태도국 협력 구심점 확보

* PIF 정상회의 계기 태도국 12개국 정상·각료급 면담 등

** '한-투발루 어업협력 MOU(5월), '한-피지 해양수산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5월) 체결 등

- (G2) 美·中와 양자협약체 활성화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해양환경·해양경제·수산 등 한-미, 한-중 해양수산 현안과 국제규범 논의

* 2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 개최(4월, 미국) 등

** 중국 자연자원부 주최 해양협력 포럼('23.10, 베이징) 참석 등

- (아프리카) 아프리카 청색경제 회의('23.6, 코모로)에 참석하여 서아프리카 연안 청색경제 논의 동향 파악 및 협력사업 확대 노력

- (아세안) 인니·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면담, 국제행사 참석 등을 통해 유대 관계 강화 및 부산박람회 유치교섭

- (국제규범) G20, OECD, APEC 등 주요 국제 협의회 해양 규범 논의 적극 참여, (국제회의) 제8차 아워오션 컨퍼런스(OOC) 개최(3월) 및 유엔 오션 컨퍼런스(UNOC) 유치 준비 등 국제회의 대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략적 ODA 추진전략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주도적인 제안서 발의를 통한 협상력 확보】

- (협상력 강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쿼터 확보를 위해 태평양 참다랑어, 북태평양 꽁치 등 주요 어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안서 발의
 - NPFC 꽁치 어획노력량* 감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우리나라가 논의 주도, 회원국 중 유일하게 현 수준 유지
 - * 어획노력량 : 조업일수, 조업선 수, 낚시바늘 수 등 조업을 위해 투입된 노력량
 -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확보를 위해 제안서를 발의하여 우리나라 '24년도 쿼터 약 135톤 증가 효과
- (해양생태계 보호) 조업 규제조치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발의하며 균형있는 조업국가로 위상 확립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에서 고래보호조치가 부재한 것을 확인, 금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최초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
 - NPFC에서는 어족자원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회원국의 공감을 받아 상설 의제로 채택
- (협력정신 독려)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열되고 있는 IOTC에 「협력강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의하며 협력필요성 강조
 - * 국제수산NGO인 ISSF는 논평(5.16)을 통해 "IOTC가 협력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평가
- (전문역량 강화) 협상 전문가 대상으로 국제법, 통상, 수산자원 정책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대표단 협상력 강화에 기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책소통 확대로 정책 이해도 증진】

- (의견수렴)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전 사전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향 수립 및 제안서 마련
- (동향공유) 회의 종료 후 결과설명회를 진행하여 유관기관 관심사항, 조치 제·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차기 회의 대응계획 논의
- (규범안내) 원양선사에 국문본·비교표 제공, 발효일자 알림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여 우리나라의 준법조업국으로서 위상확립에 기여

* 우리나라는 CCAMLR 회원국(27개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한 회원국으로 평가받아, '23/'24년 어기 회원국 최다 척수인 11척 입어를 승인받는 데 도움

【국제수산기구 회의 국내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 제고】

- '23년 두 차례 국제수산기구 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하며 기여도 제고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국내 개최*로 불법어업 근절 및 연어 방류 등을 통한 국제 소하성어류 관리 및 연구에 기여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 국내 개최 계기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양 기관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논의

*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대면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

【주요 기구 의장직 수임으로 우리나라 입지 강화】

- 우리부 인사가 6개 기구에서 총회 및 하부위원회 의장·부의장으로 활동하여, 우리나라 대표단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
-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재선임, 신규 의장직 선출 등** 우리나라 위상제고에 긍정적 선순환으로 작용

* ('23.12월 기준) IOTC·CCSBT·SIOFA 총회 의장, NPFC 총회 부의장, SEAFO 이행위 의장, WCPFC 기술이행위 부의장

* IOTC총회(5월에서 의장 재선임 NPFC(3월) 및 CCAMLR(10월) 총회 계기 총회 부의장 및 작업반 의장으로 선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대표성, 적극성, 난이도 등을 검토 후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보통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인 제안서를 발의하는 것은 협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협상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커리큘럼 개발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전(全)주기 관리 정책 혁신

- (정책혁신) 해양폐기물 발생 네거티브(순발생량<0) 전환, 전주기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해양폐기물 저감 혁신대책' 수립·발표(4.20)
- (발생예방) 하굿둑 수거시설 확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대책' 마련·관계부처 심의(12.8)
- (수거확대) 바다환경지킴이('21: 1,000 → '23: 1,200명) 확대 배치로 1,404개 취약해안 폐기물 상시 수거체계 구축, 13,597톤 수거('23.11. 기준)
- (사각지대 관리)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7척*을 신규 건조하여 사각지대 수거·관리 수단 확보
- * 정화운반선(총7척): 충남1·경남1('22), 전남1·전북1·경남1·경북1('23), 인천1('24예정)
- (집하·재활용) 권역 중간집하장 2개소 신규 설치(목포·부산), 인증마크 개발(11월), 재활용 예술작품 시상 등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②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부처협력)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총 6회)를 개최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혁신대책 이행점검 철저, R&D 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 (민간협력) 대국민 알줍 캠페인, 반려 해변 입양 기업·기관 확대*, NGO·전문가 등과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2회)하여 의견 수렴
- * ('20) 시범사업(제주) → ('21) 15개소 / 16기관 → ('22) 70 / 104 → ('23) 132 / 202
- (국제협력)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규범 적극 대응, '23년도 ODA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IMO(7.17), PEMSEA(1.20)와 협정 체결, IUCN '24년도 협력사업 신규 예산 약 8억원 확보 등 가시적 성과 도출

③ 해양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성 검토제도 혁신 본격화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現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 협의·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분법하고, 스코핑, 공탁제 등 신규제도를 담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12.8)
- (평가항목 사전조정) 일률적용 중인 평가항목(14종)을 사업유형 및 대상지역에 따라 사전에 조정(scoping)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 (가이드라인 마련)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6개 지침*을 평가 단계별로 각각 제정(12월)

* 바다골재·해상풍력 각 평가서 ①작성 ②검토 가이드라인, ③해양환경영향조사 작성요령

④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

- (해양오염퇴적물)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약 58,000만 m³ 수거(11월 기준)와 더불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을 마련(11월)하여 오염 원인자 중심의 대응체계 확장 추진
- (선박기인 오염물질) 항만 오염물질저장시설(13개소) 운영으로 선저폐수, 폐윤활유 등 8,200여톤 수거·처리(11월), 노후시설 순차적 현대화*, 소형 어선 대상 선저폐수 230여톤 무상수거 지원(무상수거 용기 설치·운영)

* 마산·광양·목포 사업소('23년 준공), 평택·통영·군산·서귀포 사업소('23년 설계완료)

- (괭생이모자반) 양식 피해, 해안가 악취 등을 유발하는 괭생이모자반에 비상대응체제 운영(1.9.~7.4, 176일간)으로 금년 피해 제로 달성

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개발, 법·제도 정비

- (법·제도) CCS 산업 육성 및 정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CO₂ 해양지중저장 해역이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술개발) 해외 CCS 저장소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R&D 신규 추진, CO₂ 해양지중저장의 해양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CO₂ 누출경로 예측, 감지, 모니터링 등 기술개발 지속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목표 달성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4년 성과지표 개선·보완, 대국민 홍보 등 정책효과 확산 방안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이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일부 지표에 대해 자체평가 시점(12월말) 기준으로 평가가능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미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 및 육상유입 저감 협력 대책 추진 등 해양쓰레기 관리 패러다임 변화 등 우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확대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기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응체계 개선

- (국가 목표 수립) 해양수산분야 주요 과제 및 2030 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여 최상위 국가계획 수립(부처합동, 4.11)

- (신법 제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10.24)을 통해 해양·극지 기후변화 관측·예측을 고도화하고 법적 추진 근거를 부여

* (주요 내용) 해양·극지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운영, 감시 및 예측 정보 생산 등

- (통계 개선) 해초대의 탄소 흡수·저장량을 산정('21년 약 1.1만톤)하여 온실가스 국가통계에 신규로 반영('23.12)하여 해양흡수원 통계 개선*

* (의의) IPCC 지침상 통계 산정이 가능한 해양흡수원(염습지, 해초대, 맹그로브) 중 국내 생태계 여건상 통계 산정 가능성이 있는 염습지와 해초대 흡수저장량을 모두 산정

- (감축사업 대상 확대) 해양흡수원(갯벌·바다숲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대상에 해양 흡수원을 추가

- (산·학·연·관 소통) 기후산업국제박람회('23.5, 부산) 계기 기획 전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실시하여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안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방안 논의

- 항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및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7.14, 9.6)하여,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외부사업 활성화

② 해양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저변 확대

- (국제감축 신규 추진) 국제감축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국제 감축실적('30년 국제감축 3,750만톤)을 활용한 2030 NDC 달성 기여

- '24년 사전타당성조사 희망기업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 및 개별 컨설팅 지원(11.21)하여 민관협력 사업 수요 발굴 및 민간 이해도 제고
- (국제기구 협력) 해수부-GGGI MOU 체결('22.11)에 후속하여 분담금을 신규 편성('24년 4.24억원)하고 유관기관(해수부-인나-GGGI-해양환경공단) 다자 회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감축사업 협력 저변 마련
- (국제교류) UNFCCC COP28(12월)에서 친환경 해운, 블루카본 등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IUCN, IPCC, 美 국무부 등)와 아국 핵심 의제* 논의
 - * (해운) 한-미 탈탄소항로 구축 (블루카본) IPCC 지침상 비식생 갯벌의 탄소 흡수·저장량 산정기준 마련

③ 해양오염 예방 및 환경 정비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확립

- (관리체계 개선) 해양오염 방제 형태와 해양환경 감시 주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월)
 - 새로운 유형의 방제장비(방제로봇 등)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양 오염방제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이 가능한 어업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
 - * (기존) 수협 조합원 또는 어촌계장 → (추가) 어업 경력 5년 이상이고 해양환경교육을 이수한 자
- (관리해역 개선) 환경관리해역의 환경개선대책 등을 반영하여 「제4차('24~'28)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12월)
- (연안오염총량관리) 중금속 오염개선 필요성이 높은 온산항부두 인접 해역의 오염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울산연안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12.7)에 반영
 - * 「제4차('24~'28)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에도 동 내용 반영
- (해양환경 인식개선)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등을 주제로 초·중·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약 84천명 대상 교육 제공
 - * 직장인들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도록 저녁시간(20:00)에 바다의 미술관 갯벌 등 친숙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해양환경 온라인 특강 개설(총 8회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학·연·관 소통 지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대응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보통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 등 해양환경분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해상경계 분쟁 해결 소요기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분쟁지속) 지자체의 관할구역 범위에는 해상도 포함되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하여 관련 분쟁 지속, 특히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 이용·개발 행위 증가에 따라 분쟁 확대 추세

* 해상경계 분쟁의 대부분은 대법원, 헌재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최종결정까지 장기간(약 10년)이 소요되고 경계 설정이 분쟁 구역에 한정되고 추가 분쟁 가능성 상존하여 근본적 해결에 한계

- (법제도 마련)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해양관할구역 확정법」을 마련(전체회의 상정, 9월)
 - 지자체 간 합의를 우선하고, 사무처리 현황, 등거리·중간선 등을 종합·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정, 해양관할구역 확정안 마련에서 관할구역 결정까지 최대 3년 내외(전당) 소요로 신속 결정

② 해양환경·수산과 상생하는 질서있는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 (갈등심화) 「풍력발전 원스톱잡법*」 발의(21) 등으로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우려 제기 및 어업인 등 기존 해역 이용자와의 갈등 심화
- (관계기관 협의) 산업부 및 국회와 제도개선 협의(19회)를 통해 경제성·사업성 뿐만 아니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다양한 이용자 간 상생 등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 (합의 도출) 해상풍력 주요 이해관계자인 수산·풍력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지정, 해양에 특화된 환경성 검토절차 마련, 어업인 참여 보장(우대) 등 합의안 도출
 -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해상풍력 특화 환경성 검토 절차 마련, 수산업 지원 방안 등 공공성 확보방안을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 발의(2월) 지원

-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EEZ)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 추진*,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한 이익공유 모델 개발 추진 등 지원
- * 「교통회계특별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5월)

③ 해양공간의 이용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패러다임 전면 전환

- (법제개편) 보전·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정책계획 신설 등 「공유수면법 전부개정안*」 발의로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한 보전의 대상'으로 전환
- (이용질서 확립) 국가 주도의 공유수면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전국의 공유수면 불법이용 등 실태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제공하여 지자체·지방청의 철저한 공유수면 관리를 정책적으로 지원
- * (1단계, '23) 경기·인천·충청 → (2단계, '24) 전라·남해 → (3단계, '25) 부산·동해안
- 관리청 정기 업무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실제 공유수면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지방청 담당자의 인식개선도 병행
- * 1분기 : 1.30, 3.7 / 2분기 : 6.28 / 3분기 : 7.20

④ 이용자 중심, 능동적 활용 중심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정책 대전환

- (패러다임 전환) 공공데이터 단순 수집·개방→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증거기반 정책지원 등으로 국정 방향 전환
- * 국정과제 11.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22.7월)
- (소통강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구성(3월), 전문기관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그간 활용이 곤란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 발굴 및 활용 가치 재창출
- * 선박 통항정보, 어선 V-Pass 정보, 어선 조업정보, 수심 등에 포함된 개인·보안정보 부분 제거 등을 통한 활용성 창출
- (기술개발) 가상 해양공간 구현 디지털 트윈 플랫폼 및 정책효과 사전진단 기술(8종) 설계 완료*에 따른 국제교류** 추진(11~12월)
- * 어업환경 변화 예측 /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 해양공간 적정활용 모니터링 등
- ** '해양 데이터와 행동 공동체를 통한 SDG14' 국제워크숍 사례발표(UN 경제사회처 주관, 11.14)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대상 해양디지털 트윈 성과 설명회 개최(부산, 12.19)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 의견수렴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상경계 설정, 해상풍력 개발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갈등이 복잡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23년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10월) 및 제주 오조리 갯벌(12월)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보호구역에 접근과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접목하여 생태관광까지 이어지는 적극적 방식으로 변화 도모
 - * 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적근거, 추진절차,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생태계법」시행령 개정('23.6시행) 및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 수립('23.7)
- (갯벌세계유산 통합관리) 5개 지자체*에 걸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의 통합관리를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신안)' 설계공모 및 계약체결(12월)
 - *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 세계유산으로 우선 등재된 와덴해*와 양해각서(MOU)를 갱신(5월)하여 갯벌유산 관리방식 공유, '유산지역 내 바닷새 모니터링' 추진(7월~)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세계유산등재기준 충족 관리
 - * 네덜란드·덴마크·독일 3국에 걸쳐있는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 중('09~)
- (갯벌복원 확대) 폐염전, 폐양식장 및 방치된 간척지 등을 갯벌로 복원하고 탄소흡수 기능을 회복('23년. 3개소 신규선정)하여 향후 갯벌 블루카본 IPCC 인증 시 2030 NDC 달성 기여 기대
- (블루카본 추진전략)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블루카본 추진방안을 마련(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5.31)
 - 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숨쉬는 해안」조성으로 기후재해 대응 강화, 민간, 지역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의 ESG 연계 및 지자체의 참여기반을 마련

- (수족관 동물보호) 수족관 허가제 도입에 따라 시설·인력·질병관리·체험활동 기준 등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 개정·시행(12월), 수족관 운영 관련 세부지침 마련(12월)
 - 고래류 보유 수족관의 운영 및 동물복지 실태 등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수족관** 과태료 처분(9월, 10월)
 - *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전문기관 등 총 12개 기관 참여('23.6.9~6.23)
 - ** 해양보호생물 보관 신고 미이행 수족관(2개소) 적발 및 과태료 처분
- (법정관리종 지정) 참돌고래, 닳돌고래, 해마 등 보호가 필요한 생물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호기반 마련(2월)
 - * 해양보호생물 지정현황(종) : ('16) 77 → ('20) 80 → ('21) 88(+8) → ('23) 91(+3)
 - 양식장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부유성 갯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제거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12월)
 - * 유해해양생물 신규 지정은 2016년 2종(갯줄풀, 영국갯끈풀) 지정 이후 최초 사례
- (해양포유류 보호) 돌고래 50m 이내 선박 접근 금지, 접근 거리 별 선박의 속력 제한 등을 반영한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4월)
 - 시민제보체계 구축 및 홍보, 단속·처벌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사례 적발(총 8건) 및 과태료 부과(총 3건)
- (인공증식·복원) 멸종위기 해양생물 인공증식·복원을 통한 종다양성 보전
 - 세계최초로 유성생식 기술을 적용한 밤수지맨드라미(산호류) 인공증식 성공 및 해양방류(9월, 300개체), 인공증식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매부리바다거북 인공부화(총 37개체) 성공(9월)
- (해양동물 구조·치료 확대) 해양동물 구조·치료 확대('22. 7→ 19개체),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2개소 추가 지정(총 12개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세계유산등재기준 충족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신규 해양보호구역 2개소 지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전기준 설정) 해양방사능 국제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안위와 협의하여 WHO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엄격한** 안전기준 설정

* WHO 먹는 물 기준 : (세슘) 10 Bq/L, (삼중수소) 10,000 Bq/L

- (해양 모니터링) 日 오염수 방류 이슈에 따른 국민적 우려 증가로, 우리 바다 안전성에 대한 **이중·삼중 촘촘한 감시망 구축***

*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확대(해수부) : ('22) 45개소 → ('23) 127 → ('24) 143

- (정밀감시 확대)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 등을 중심으로 해양방사능 정밀 조사정점을 **15% 확대**(45 → 52개* / 원안위 포함 시 78 → 92개)

* 연안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의 표시체계를 개편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고시 개정(9.5)

- (긴급조사 실시) 우리 바다·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108개 정점 긴급 추가조사 실시**(해수 75 + 원안 33)

* 긴급조사는 신속한 '채수-이송-분석-결과공개'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2~3개월의 분석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 순차적으로 일일브리핑과 정부누리집에 분석결과 공개

- 1회 조사 평균 이동거리 약 5,200km(약 15일), 높은 파고, 기상 악화 등 쉽지 않은 여건에도 **매월 출항하여 총 99개 시료 채취·분석**

⇒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 결과, 쏘시료 WHO 먹는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농도

- (모니터링 역량 확충) 신속·정확한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해양방사능 분석장비(2배↑) 및 인력(3배↑) 대폭 확충*

* 해양방사능 분석장비: ('22) 6종 13기 → (10.10) 10종 29기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인력(해양환경공단, 명) : ('22) 11 → (7.25) 30

- (시뮬레이션) KIOST·KAERI에서 오염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발표하여 오염수 방류의 국내 영향에 대한 과학적 논의 기반 마련

- (정보 공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일 단위) 결과 공개 및 일일브리핑(6.15~),
 - 우리 바다의 안전여부를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포털에 **해양방사능 안전신호등** 제공, '**해양·수산물 방사능 정보 누리집**' 구축·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정보공개
 - * 해양 방사능, 해수욕장, 선박평형수, 국내·수입 수산물, 천일염, 유통관리, 팩트체크 등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
- (현장점검) 장·차관(총 60회)이 직접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등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 및 수산물 소비동향 점검**
 - * (해양방사능 안전관리) 부산 방사능 조사·분석 현장(차관 7.7, 장관 9.14)
- (대규모 오염사고 대응) 악천후 및 먼바다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5천톤급 대형 방제선 운영('22.5~)
 - (긴급 대응) 선박운영비 확보를 위한 준설참여 중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현장에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준설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한 임대사용 표준계약서 마련 및 운영(6월)
 - (대응 역량 강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실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훈련(3회*)을 실시
 - * (6월, 여수) 여수해경서, 여수해수청, 석유공사 / (8월, 마산) 창원해경서, 마산해수청, 송유관 공사 / (10월, 포항) 포항해경서, 포항해수청, 민간 2개사
- (침몰선박 관리) 침몰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68척 중 잔여 12척에 대해 영상촬영, 인근 어장 여건 등 현장조사를 토대로 위해도 평가
 - (정보 관리) 침몰선박 조사보고서(해경·심판원 제출) 취합·검증을 통한 분기별 침몰 선박 현황정보 DB화* 및 지자체 등과 공유
 - * 침몰위치가 불분명한 선박을 제외한 1,300여척에 대해 선박 침몰위치, 선종 등
 - (잔존유 제거) 선박규모, 침몰 해역 여건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선박 12척 중 2척에 대해 잔존유 제거 (누계 6척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높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어촌관광 활성화) 민간비즈니스 모델 연계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체험객은 148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

* 체험객 : ('22.11) 124만명 → ('23.11) 148만명

-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업하여 어촌체험관광 할인전을 실시하여 매출 1.57억원을 달성, 어촌에 공유 사무공간, 숙박 등을 지원하여 '漁케이션'을 11개 어촌에서 시행, 이용자가 전년 대비 30.6% 증가(333명)

- (특화 육성) 어촌자원을 활용하는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어촌마을 육성으로 新관광모델 개발 및 소득 다각화 지원

* 체험마을 특화조성 컨설팅(4개소, 마스터플랜 및 관광시설 조성 지원), 민간관광기업(11개사)과 체험마을(21개소)을 매칭한 민간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 (관계 촉진) 유·청소년 및 다국적 청년을 대상으로 어촌체험, 생태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한 도시-어촌 교류촉진 및 관계인구 형성

* '바다가 보이는 어촌교실' 총 7개 마을 대상 23개 학교, 1,368명 참여(바다해설 연계 프로그램 총 39회 진행), '어촌마을 국제교류봉사단' 총 3개 마을 대상 80명 참여

- (유입촉진) '귀어인의 집' 개소 수 100% 확대(6→12개소)*, 청년정착금 및 귀어 창업·주택 지원사업 규모와 대상 확대,** 귀어학교 신설(1개소, 충북)

* '22년 6개소(강원, 전남, 경북, 경남) → '23년 12개소(강원, 전남, 경북, 경남, 충남)

** ('22)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23) 110만원 / ('22) 어업양식업인 → ('23) 수산물 유통가공업자 포함

- (정착률)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효과로 높은 귀어(약 40% 수준)* 및 정착율(97.9%, '18~'21 평균)*을 유지하고 있음

* 전남 귀어학교 수료생의 44.5% 귀어, 강원 귀어학교 수료생의 42.1% 귀어

** 정착률(%) : ('18) 98.0 → ('19) 96.6 → ('20) 98.1 → ('21) 98.7 → ('22) 조사 중(24.1 확인 가능)

- (박람회) '관심, 준비, 실행, 정착' 단계별 동선 구성, 콘텐츠 내실화로 귀어귀촌 박람회 방문객 수 및 상담건수 증가

* 방문객(명) : ('22) 30,269 → ('23) 39,961 / ** 상담(건) : ('22) 2,093 → ('22) 3,507

- (기반시설 확충) 어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배후도로,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한 방파제·부잔교 및 어구·어선수리장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
 - 어항시설에 관광·레저 기능 보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물건항 등 다기능어항 2개소 확충

* (물건항) 마리나 계류시설, 해안산책로 / (안도항) 낚시잔교, 피싱클럽하우스 등

- (관리선 운영) 국가(지방)어항에서 19,716톤의 부유·침적폐기물 및 항행 장애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어항 조성 및 어선 통항안전 확보
 - 또한, 팽생이모자반 수거, 폭우 피해복구 등 긴급지원(14회)을 통해 어항구역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의 보전·개선에도 기여

- (노후·유휴시설 정비)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어업환경 개선,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국가어항 친수성 강화 등

* 안흥항, 격포항, 녹동항, 남애항, 다대다포항 등 5개소에 대한 개발전략 및 지역별 개발계획 확정 (11월),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토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재정투입 시너지 효과 증대

- (안전점검·유지보수) 국가어항(115개항) 기본시설(1,034개) 안전점검* 실시, 취약 시설(C·D 등급 시설)에 대한 적기 유지보수('23년 118억원)를 통해 A·B 등급 비율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안전한 어항 이용 여건 조성

* '23년 기준 86개항 214개 기본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신설

** A·B 등급 비율(%) : ('19) 97.3 → ('20) 97.0 → ('21) 97.9 → ('22) 98.2 → ('23) 98.2(목표)

- (스마트 어항) 지능형 CCTV가 설치된 3개항*에 계측 센서 설치, S/W 개발 등으로 원격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운영(12월)

* 도서지역 국가어항 3개항(현포항, 우이도항, 능양항)에 우선 구축하여 시범사업 수행 중

- (어항 홍보) 국가어항 사진·영상 공모전(7.24~10.4)을 개최하여 최종 수상작 37점 선정하는 등 국가어항에 대한 홍보 효과* 창출

* 국가어항 이용 만족도(%) : ('19) 75.0 → ('20) 76.1 → ('21) 76.8 → ('22) 77.4 → ('23) 77.9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추진계획, 정책 소통·확산 노력방안 원점에서 재검토·계획수립 필요
- 정책효과 증진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접근성 제고, 친수시설 조성 등 가기 쉽고, 찾고 싶은 어촌 조성

-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제주한림-비양도 접안시설 개선 등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접안시설 확충 및 선착장 주변 항포구 시설 정비
- (여객편의 증진) 사랑도 여객선터미널 조성 등 열악한 도서 지역에 여객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등) 개선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 여객복합시설(누적) : ('19) 18개 → ('20) 68개 → ('21) 92개 → ('22) 100개
- (매력성 제고) 경관개선, 친수시설·관광시설 조성 등 어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어촌뉴딜 완료 지역 71개소 관광객 61만명, 여객선 편의시설 개선 등 접근성 및 집객력을 강화하여 섬 어촌 관광객 29.6만명 유입 증가

② 어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소득사업) 다양한 어촌 관광자원을 활용해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4개 소득사업에서 신규 일자리 21개, 소득 9.66억원 창출
- (특화지원) 수산물 밀키트 등 개발, '유튜버(인어교주해적단)' 협업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체계 구축 등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178억원 소득 창출
- 전국 10개 어촌특화지원센터*(전남, 경남, 강원, 충남, 부산, 인천, 제주 등)를 활용한 전문가 컨설팅, 마을 브랜드·특화상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

③ 어촌 재해·안전 관리 강화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재해·안전) 상습 월파 및 태풍 피해 지역에 월파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금년에는 태풍 “카눈(23.9)” 같은 대형 태풍 내습과 악천후 시에도 ‘無 피해’ 달성, 재해에도 안전한 마을 조성

* (청사포항) 외곽시설 설치로 태풍내습시 어선 내륙 양륙으로 인한 휴무일 감소(4~5일→2~3일) 및 해양쓰레기(목초 등) 항내 진입 피해 감소(평균 20톤→1톤 미만)

- (어업 안전·효율 개선) 노후화되어 어업 안전을 위협하거나, 기초 작업 시설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항에 안전성·효율성 개선
 - * (영광 법성포항) 부유식 계류시설을 보강하여 간조시 어선의 갯벌 좌초 문제 해결
- (빈집관리) 장기 방치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어촌 빈집관리를 위해 관계부처(해수부·국토부·농식품부) 협업 등 관리체계 마련 추진

④ 사업관리 강화, 홍보 등을 통해 어촌재생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

- (사업관리 강화) 집행신포등 도입을 통한 부진사업지 집중 관리, 주민 갈등관리 자문단 운영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2.27)
 - (소득사업) 소득시설의 유희화를 방지하고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운영, 환류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3.23)
 - * 아이템 발굴부터 상품판매까지 안내해주는 '어촌소득사업 길라잡이' 배포(10.27)
 - (성과관리) 사업의 경제·정책적 효과 검증을 위해 완료된 사업지 대상 사업 전·후를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 발굴
- (홍보노력)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나만의 어(漁)행기' 이벤트 등 SNS를 활용한 다방면 홍보 추진

⑤ 어촌을 살맛나게, 300개소에 3조원 투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본격 착수

- (신규사업) 소멸 위기의 어촌에 경제거점 구축, 정주 여건·안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3년도 대상지 65개소* 선정(1.18)
 - * 11개 시·도에서 유형별 124개소 신청, 유형1 5개, 유형2 30개, 유형3 30개 선정
- (선도사업) 새롭게 추진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유형2)의 선도사례를 창출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도 사업지 5개소* 선정(6.19)
 - * 부산 기장 문동, 인천 강화 장곶, 충남 보령 송학, 전남 고흥 취도·금사, 경남 창원 옥계
- (생활서비스) 스마트 장비를 통해 의료·문화 등 섬·어촌의 낙후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범 사업지 2개소* 선정(9.27)
 - * '23년도 유형2 사업지 중 공모를 통해 2개소(사천 안도마을, 서산 지곡생활권) 선정
- ('24년 대상지 선정) 사업 첫째 애로사항 개선 및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응모 절차를 개정*하고, '24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 추진
 -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6.27) 권역별 공모설명회(총 4회)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낮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 (수산계 고교 활성화) 공동실습선* 건조 착공을 통해 실습환경 개선, 해양 수산분야 마이스터고 전환(포항수고→한국해양 마이스터고, 3월)을 통해 지원을 제고
 - * 승선인원 110명, 해수부·교육부·교육청 협업
- (법령 제정) 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2월) 및 시행령* 제정을 추진(∼24.2)
- (정책자금 상환유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원금(619억원) 상환을 1년 유예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정책자금개선) 사업 초기 창업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 해소 등을 위한 어업인 후계자 사업자금 융자 조건, 규모 등 자금 확대 등*(1월)
 - * ①금리 20→1.5%(연 27.2억원 이자부담 감소)/ 변동금리 선택 ②대출한도 최대 3억→최대 5억원 등
- (외국인 근로자 확대) 외국인 어업근로자(E-9) 7,620명 공급(전년 대비 58% ↑), 생산량이 급증하는 시기 단기간 활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5~8개월) 5,043명(전년대비 80% ↑) 확대 등을 통해 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
 - (숙련인력 확보)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숙련기능 비자(E-7-4) 보유자 도입 규모 확대(150→ 600명), 비자 전환(E9→ E-7-4) 가능 조건 완화(소득요건 100만원 ↓) 등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 지원
 - (고용 한도개선) 선원노련과의 협의를 통해 내국인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개선과 함께 사업장 고용 한도개선을 추진
 - * (연근해어업) 척당 4→7명·승선비율 60→70%, (양식업) 면적별 5→10명·7→15명 등
 - (생활환경 개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불법 이탈 방지, 어촌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외국인 어업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9개소, 누적)
- (양식재해보험 지원 확대) ‘제1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3월)하고, 지원 확대*를 통해 보험 가입률** 39% 달성

- * 고수온 특약 국비 지원 확대(50 → 60%) 및 할인제도 확대, 보험 목적물 확대(강도다리 100 → 50g) 및 명확화(부화 이후 → 전장 크기) / ** 가입률(%) : ('20) 28.0 → ('23) 39.0
- (어선원 및 어선보험) 제도개선*, 소통강화,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가입률 제고(86.5% → 91%)
 - * 보험 해지 환급률 확대(70 → 어선 90%, 어선원 100%), 보험료 청구 절차 간소화 등
- (어업인 안전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보장 확대(200 → 5,000만원) 상품 도입(6월)
-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수산공익직불제, 어민수당 등 어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혜자의 자격요건 간편 확인 지원*
 -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주지역에 가까운 읍면동에서 즉시발급 가능('24년~)
- (어업법인 관리 효율화) 어업법인 사전신고제 운영 및 실태조사 강화(주기 단축 3년→1년) 등을 위해 어업법인 정보시스템을 구축(12월)
- (건강관리지원) 어촌(낙도)지역 등 의료지원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추진(160.7%↑), 질환 예방 교육 신설(해수부, 수협)
- (건강검진) 주로 맨손·나잠어업 종사로 근골격계 등 질병 발생에 취약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및 활성화* 추진
 - * 신청 절차 간소화(검진 대상 증빙 : 수검자 직접 → 우리부 일괄 확인), 검진 병원 확대(9 → 12개소), 홍보 강화(포스터, 교육 등)
- (수산 기자재) 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해남군) 및 시험·인증센터 건립(부산시) 착수, 수산장비*임대(용자)사업, 이동수리소** 운영(취약지역, 53개소)
 - * 해상크레인, 선별기, 해상작업대 등 / ** 어선용 기관(엔진), 어업용장비(무전기, 어탐기) 등
- (어업활동 인력 지원) 지자체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대체 일손 지원(연간 3,600명)
 - * 1일 기준 최대 8만원 지원 / 연간 최대 30일 지원(단, 임신·출산 등은 최대 60일 지원)
- (안전쉼터 조성) 어작업 환경의 안전성 및 어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22. 82→'23, 누적 91개)
- (건강·연금보험) 건강보험료(13,864세대) 지원, 어업인 기준소득월액*을 인상을 통한 연금보험료 단가상향(45 → 46.4천원) 등 연금보험료(13,130명) 지원
 - * 기준소득월액(복지부 고시) : ('14) 85 → ('15~'18) 91 → ('19~'20) 97 → ('21~'22) 100 → ('23) 103만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선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추진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높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익직불제) 어업인이 창출하는 공익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소득안정을 통한 어촌사회 유지 등을 목적으로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 운영

* 안전한 수산물 공급,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사고 구조 등

** ❶조건불리지역 직불제 ❷경영이양 ❸수산자원보호 ❹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 (신규 직불제 도입) 기존 직불제에서 소외된 어업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시행(4월~)

* (지급대상) 소규모어가 23천호, 어선원 15천명 / (지급액) 120만원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규 시행으로, '23년 약 1만 8천여명의 어업인 등이 추가적으로 직불금 수령하여 소득·생활 안정 기여도 향상

- (관리시스템 개발) 기존 운영 중인 수산직불시스템에 신규 직불제 (소규모어가·어선원)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1월1)

- 각 단계별(신청·선정·이행점검·확정) 업무처리시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활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수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

* 어촌지역 거주, 수산·농·임업 기본직불금 중복수급, 소득 상한액 초과, 사망 여부 등

** 지방청(어업경영체), 해양경찰청(어선 입출항 정보), 한국어촌어항공단(교육 이수정보) 등

- (직불제 개선 등) 어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 및 어촌계 자격 유지 기간 등 신청요건 완화 및 지급기간 확대하여 전체 신규 신청인(19명)의 52.6%(10명)이 신청요건을 충족

* 「수산직불제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23.4.1)

- `적극행정위원회(제8차, 11.8~10)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지침 개정 전 반영해서 **상속으로 어업허가를 승계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 상속·매매·증여의 사유 발생으로 어업허가자가 변경되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대해 신청부터 지급요건 이행, 직불금 지급까지 참여 어업인 대상 전주기 컨설팅 지원**(‘23.1~9)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신청 단체(120개) 대상 컨설팅 추진(한국수산자원공단)

⇒ 제도개선과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이양 및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신청) 증가**(경영이양 171.4%↑, 수산자원보호 65.6%↑)

* 경영이양 직불금 : (‘22) 7명 → (‘23) 19,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 (‘22) 1,217척 → (‘23) 2,015

- (교육 편의)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교육과 지자체 자체 교육을 병행 실시를 통한 **교육방식 다양화로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

-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모바일) 교육 개설**(‘23.4월), IT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24개 지역 589명)

- (수산빅데이터 플랫폼) 우리부 및 관련기관(지자체·해경·수협 등)의 수산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어업인을 위한 **수산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

* 어업허가면허신고, 어업경영체, TAC, EEZ조업, 원양어업 허가관리, 낚시해 등(32종)

- (RPA^{업무자동화} 지원) 지방행정시스템의 내수면어업 정보를 실시간 연 계받아 **현황통계를 자동 생성**하고 담당자가 바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효율 향상 및 데이터 오류율 감축

* (前) ①현황 요청(해수부) ②조사표 전달(사도) ③조사표 작성(시·군·구) ④조사표 취합 및 제출(사도) ⑤현황통계 작성·보고(해수부) ⇒ (後) ①**시스템에서 현황통계 확인 및 보고**(해수부)

- (수산 ICT) 육상양식장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폐사율 감소 및 운영비·노동력 절감,

- 수산물 가공 수작업 공정들을 시스템화**하여 생산현황·재고 관리 비용절감, 납기준수 등 **제품 경쟁력 강화**

* 뱀장어양식장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구축(전북 고창군) 등

** ICT 기반 스마트 청정 제주수산물 가공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제주)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목표 달성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개선·보완
- 성과지표에 적합한 목표 달성도를 설정하고 정책효과 등 개선·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낮음 ○ (목표(지표) 달성도) 일부 지표 미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외도서 제로화) 여객선, 도선 등이 들어가지 않는 소외도서(총 40 개소)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외도서 운항 선박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사업 10개소* 신규 추진(5월~)

○ (도서민 운임 지원)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하여 연간 섬 주민 3,077천명 대상 여객·차량 운임을 지원*

* 여객운임은 섬 주민의 실질 부담이 최대 7,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차량운임은 비영업용 차량 대상으로 20~50% 지원

○ (운송비 등 지원) 전국 8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서민 약 7만명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기초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필수품 (유류·LPG 등) 해상운송비 16억원 지원

- (택배비 지원) 택배요금 부담이 높은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육지 대비 추가되는 배송비(1천원~1만원)를 신규 지원

○ (공영제) 사업성이 없어 단절 위기에 놓인 항로에 대해 시장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보조항로 개편방안* 수립(9월), 국가 보조항로의 공공기관 운영 등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마련(9월) 등

* 수익개선이 가능한 항로는 민간운영(민간이양)을 지원하여 시장논리를 가미, 항로단절 예방 등 공적기능이 필요한 항로는 기관위탁으로 공공성 강화

○ (지역주민 불편해소) ①해양사고 예방 및 1일생활권 조성을 위한 항로분리(군산-연도, '23.2) 및 ②사업자 폐업으로 인해 단절위기인 항로의 보조항로 신규지정(대천-외연도, '23.7)을 통해 이동권 적극 보장

○ (선박 현대화) 선사 영세성·수익성 부족 등으로 안전투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대화펀드, 건조비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차보전*)을 통한 신규 건조 지원 등

* '23년 12월 건조실적: 여객선 1척, 화물선 1척, 유조선 3척 등 5척

- (교통약자 편의)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 확충지원*을 통해 노약자 등이 많은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 * ('21년) 설치율 16%(26척 설치) → ('22년) 52%(46척 설치) → ('23년) 91%(155척 중 141척 설치 예정)
- (선사 경영안정) 고유가 지속 상황을 고려, 218개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경유가격이 일정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보조하는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및 지원 확대 실시
- (준공영제 확대) 민간선사가 운영 중인 일반항로의 단절 방지를 위해 연속 적자항로 대상 적자 만회계획 평가를 전제로 운항
 - * ('22년) 8개 항로 지원(24억) → ('23년) 11개 항로 지원(33억)
- (신종 위험 대비 제도개선) 여객선 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TF 활동(5.24)을 거쳐 및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
- (현장중심 안전강화) 해양사고 고위험 선박 중심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밀착 안전관리 방안 수립(2월)
 - 권역별 안전기관 세미나(9회) 및 선사 간담회(10회)를 통해 지역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안전 관련 애로사항** 청취
 - * 24척 점검(승선점검 9척, 출항전점검 15척)
 - ** 건의사항 38건(안전 관련 17건) 중 18건 개선 추진(수용곤란 15건, 중장기검토 5건)
- (국민안전감독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3회)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연안여객선 점검) '23년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설·봄철·여름철·추석·겨울철)등을 실시
 - * (대상) 연안여객선 전체(약 156척) / (점검내용) 항해·통신 등 장비 관리 실태,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 실시 등 / (점검결과) 총 1,023건 모두 조치완료
- (안전교육) 여객선 감독·관리자인 운항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대상 여객선 안전제도·법규, 소방·구명설비 기준 등 교육 실시(11회)
- (중대재해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기 국가관리 연안여객 터미널(8개소) 및 국고여객선(28척)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 *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개선, 매뉴얼,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 이행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일부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거의 목표치에 근접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섬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등 정책효과 우수, 공영제 전환 및 도서민 지원 강화로 도서민 생활여건 개선 기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TAC 확대) 참홍어·바지락 TAC 적용 해역과 업종을 확대*, 오징어·갈치 TAC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시범운영 중

* (참홍어) 근해자망 추가, 전남·인천 일부 → 서해 전역, (바지락) 경남 일부 → 전역

** TAC 정책의 수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소통 강화('23년 설명회 24회)

- (생산량 회복) 연근해 생산량은 지속 감소('86년 173만톤 → '22년 89만톤)하였으나, TAC 기반 자원 관리로 '23.9월 생산량은 증가(전년동기 대비 30% 증, 누적생산량 12% 증)

- 바지락(96.2%), 고등어(65.3%), 삼치(52.9%) 등 주요 TAC 적용 어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최대 96.2% 증가

- (생태계 회복) 바다숲 조성을 통한 갯녹음 해소(△46.1%)로 최근 5년간 해조류 생체량은 평균 94.5%, 종다양성은 전년 대비 19.5% 증가

* 5년 평균 해조류 생체량(g/m): 401 → (조성 후) 780 / 종다양성 지수 (최근 5년 평균) 236 → ('23) 282

- (갯녹음 해소) 전국연안 갯녹음 현상 최초 조사 대비 지속 감소

* 초분광항공영상 촬영조사에 의한 전국연안 갯녹음 현황: ('16) 187.92km² → ('22) 152.71km²

- (친환경조성) 인간단공어초 시설 위주의 기존 조성방식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생태친화적 조성방식*으로 개선하여 생태계 영향도 최소화

* 드론활용 포자 확산 유도 기법, 자연암반 해조이식, 친환경인증부이 사용 등

- (자원증대) 연안어장 복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은 전년 대비 57.8%, 비조성해역 대비 123.1% 증가

* 전년 대비 CPUE 실적: ('22) 3.79kg/척 → ('23) 5.98kg/척(3분기 실적 기준)

** 비조성지 대비 CPUE 실적: 조성해역 5.98kg/척, 비조성해역 2.68kg/척

- (수산종자 관리) 방류종자인증제를 통한 방류종자 유전적 다양성 향상 및 생태친화적 연어 자원관리로 국제 생물주권 강화

*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PIC, %): ('16) 67.53 → ('20) 68.50 → ('23) 69.37 / **

지자체 보유어미 유전적 관리(품종): ('17) 3 → ('20) 5 → ('23) 9 / *** 어린연어

방류량(만 마리): ('18) 820 → ('20) 680 → ('23) 890

- (대외협력)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 연례회의 참석(5월) 및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업무협약(6월)을 통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보유기술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체계 강화
- (민간협력)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간기업 협력사업으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탄소중립의 ESG 경영 실천
 - * (현대자동차) 바다숲 조성 '24년도 15억 투자예정 (호성그룹) 잘피(가마말) 군락지 조성 '24년도 5억 투자예정
- (바다생태계 복원) 바다사막화 등에 따른 바다숲 복원 및 자원조성 관리 기술 공조를 통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
 - *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 참석(ISS/ 24회), 글로벌 바다숲 로드맵(미국, 캐나다 등 8개국) 선포
 - ** (호주 바다숲 공동 점검) 우리나라 전문가 호주 바다숲 후보지 공동 점검 및 기술 전파
- (인프라 강화) 노후 조사선을 첨단 과학장비를 탑재한 친환경선박으로 대체*('23. 1척 준공)하여, 해양·수산자원조사 정밀도 제고
 - * 조사선 건조(누적) : ('19~'23) 준공 5, 건조 중 2척→ ('24) 준공 6, 건조 중 1척
-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평가) 자원평가 주요 대상종을 확대하고 ('22. 60종→'23. 65종), 생태계 기반 위험도 평가모델*을 이용한 평가체계 고도화, 바이오로깅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 *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어업·생태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자원회복대상종(총 25종)을 중점연구종·모니터링종·해역관심종으로 세분화하여 과학위원회 전문가 검증을 통해 어종별 맞춤형 자원관리
 - * 중점연구종(8종)은 어업현실을 반영한 '24년 회복권고안 도출, 모니터링종(15종)은 어획동향 및 현장점검 강화, 해역관심종(2종)은 자체 권고안 마련을 위한 생태 특성 연구 강화
- (소비자 참여) 별칭으로 판매되는 어린물고기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생산유통업체 모니터링 추진으로 건전한 수산물 소비 및 어린물고기 유통 근절 기여
 - * 찾아가는 체험 교육체험교구 제작(배포)전시 등 치어럽 홍보,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1회) 등
- (정책 홍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비어업인 해루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주제로 합법적인 해루질 도구, 안전한 해루질 수칙 등 개정내용을 홍보
 - * KTX, 레저활동이 집중된 지자체(강원충남제주), 수협 등 자체 제작한 '착한 해루질 캠페인 영상 홍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TAC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감척 확대) '24년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65척, 연안어선 152척 감척, 연근해 어선 척당 생산량 회복세에도 기여

* 근해어선 감척 수(척): ('19) 13 → ('21) 86 → ('23) 65

** 어선척당 어획량: ('92) 21.5 → ('04) 16.29 → ('08) 22.47 → ('21) 23.8 → ('22) 22.7

- 전략적 감척 등 자원관리정책을 통해 근해·연안어업의 어선당 어업 이익이 '17년 대비 각각 25%, 49% 증가*하는 등 어업경쟁력 제고 기여
-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타 어류의 먹이어종인 멸치 자원의 보존·회복을 위해 기선권현망어업 6선단(30척)을 선제적으로 감척

* '23.10월 기준 멸치 누적 생산량은 130,335톤(전년 대비 13.9% 증가)

- 어린물고기 혼획율이 높은 정치망어업을 신규 감척 대상업종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 추진, 정치망 어업 2통(3척) 감척 완료

* 대상업종 확대 : (기존) 어선어업(허가) → ('19)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 ('23) +정치망(면허)

- (절차 개선) 감정평가 기관 일원화로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수령' 간 소요기간을 단축(4~6개월→2개월) 및 2차 감정평가 신속 실시하여 감척 포기 방지

- 또한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 시, 대상자의 50%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사전감정평가제도를 실시*('24년~)하여 사업절차 신속 진행

* 감척 예비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폐업지원금 감정평가 선제 실시, 감척대상자가 감척을 포기하는 경우, 2차 대상자 선정 없이 신속하게 감척지원금 지급

- 어업자가 감척 사업에 참가할 목적으로 선정통보일 이전 조기에 조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생활안정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 개정(8.7)

- ('제3차 연근해 구조개선 기본계획('24~'28) 수립)

- (감척 목표) ▲어획강도, ▲자원량 회복, ▲경영여건 개선, ▲수산물 자급률 목표(‘25년 79%) 등을 고려, 근해 524척, 연안 1500척 목표 설정
 - *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부산대, '23.)/ 현 자원량 338만톤
- (제도개선) 폐업지원금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준가 선택제
 - * 등 제도개선 추진
 - * 매년 업종별 폐업지원금 하한액을 사전 고시하고, 어업인별 폐업지원금 감정평가를 실시하되, 평가한 폐업지원금이 하한액 보다 낮을 시 하한액 지급(기준가vs감정평가액)
- (관련정책 연계) 과잉어획을 사전에 차단하는 면세유 공급 제한 등 실효적 불법어업 제재 강화, 어획물 운반선 규모 관리 등과 연계 추진
- (집중 감척) 오징어 어획 급감 및 회복 부진 예상에 따라, 오징어를 주로 포획하는 업종(근해채낚기, 동해구트룰, 연안복합)의 생활지원을 위한 집중 감척
 - * (긴급 감척) 오징어 생산업계 중 타 어종 어획이 불가능한 근해채낚기 어선(11척)
- (제도개선)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TAC 제도를 기반으로 한 어업규제 완화와 폐어구 관리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수산업법」 전부개정(1.11 시행)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 개정안에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시도 자율권 확대 등 반영으로 어업인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체제 마련
 - * 수산업법 제86조(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제87조(시도 연안자원관리)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형망어선 감척과 병행하여 어구개선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조업구역 표기 개선) 수산업법 시행령 등에서 일부 조업(금지) 구역 표기가 육상(지명) 기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경위도 좌표로 표기방식을 개선
 - 명확한 조업(금지) 구역 설정으로 안정적 조업 기반을 조성하고, GPS 플로터 등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어업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근해 자원량 회복을 위한 감척사업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 제정)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형 어획증명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추진('23.3~)
 -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적 조업보고(어획·양륙) 및 어획확인서(생산자, 합법유무) 발급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안 마련**
- * (투입규제) 어구사용 폐지, 금어기·금제체장 등 완화 → (산출규제) 모든 어선 TAC, ITQ 적용('27~)
- ** 제정안 마련('23.3월)→ 입법예고(5월)→ 법제처 심사(8월~11월)→ 차관국무회의(11월)→ 국회 제출(12.1)
- (시스템 구축)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형 어획증명제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22~'24)
 - 어선 위치모니터링, 전자적 조업보고(어획·양륙 등) 이행·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불법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년차) 계획 수립*(3.30)
- (감시체계) 연·근해 조업감시센터(FMC) 구축 등 어선의 전자적 보고(위치·어획량 등) 이행·관리를 감시·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구축 방안 마련('23.12)
 - 어업 전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구축·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및 예산확보('24, 15억)로 불법어업(IUU) 관리강화 기반 마련
- * 연근해 FMC 연구용역 완료('23.5~10) → 연근해 FMC 구축운영 방안 마련('23.12)
- (한·중 어업협상) 중국어선 위치발신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합의(10년만에 합의) 등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리 강화 기반 마련
 - (입어규모 축소) 한·중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규모 감축('17. 1,540척 → '24. 1,200) 등 8년 연속 입어규모* 감소
- * ('17) 1,540척 → ('19) 1,450척 → ('21) 1,350척 → ('23) 1,250척 → ('24) 1,200척

- (제도개선) 어장 확장을 위한 국방부·해경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11.7)을 통해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

* 60년만에 강화해역의 창후어장(2.2km²) 및 교동어장(6.0km²) 신설

- (어업질서) 고질·반복적인 주요 불법어업 체감형 집중단속 및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을 유도

- 주요 지역별 어종(오징어·실뱀장어 등) 및 업종(공조조업, 정치망)에 대한 특별단속 추진, 영세어업인들의 생계형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 등

- (불법조업)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무허가 조업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체계적 단속 강화로, '23.11월까지 불법어업 단속건수(95건)가 '22.11월(65건) 대비 30% 증가

* 중국어선 단속건수(건): ('20) 35 → ('21) 108 → ('22) 88 → ('23.11) 95

** 무허가·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체계 강화('22. 12건 → '23.10 19건)

- (불법어구) 전문 수거물 폐기선을 활용하여 중국어선 불법어구 강제 철거

- 제주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철거사업('23.10~12)을 통해 불법 범장망 10톤을 철거*하고, 조가갈치 등 남획어획물 약 1톤을 현장 방류
- 우리나라 어선(65척)을 활용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조사를 통해 자원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리어선 조업권 보호에도 기여

- (지도·단속 역량) 노후 지도선 대체건조('23 5척, '24 3척 준공) 및 3천 톤급 대형지도선 신규건조('25 3척 준공) 등 대형·첨단화를 통한 불법어업(IUU) 관리역량 강화

* 국가어업지도선 확대 : ('22) 40척 → ('23~'24) 40척(대체건조 8척) → ('25) 43척(신규건조 3척)

- (한·일 어업협상)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양국 간 입어협상이 '15년 어기 이후 6년째 협상 중단 상황으로, 양국 간 실무협의 재개 및 수산 전반의 협력 확대를 위한 장관 서한 발송(3회), 주한일본대사관 日수산청 면담(9회) 추진

- 한일 중간수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수립('23.3)을 통해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소득 향상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재검토 및 개선·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어업선진화 추진] ▲거미줄 어업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 ▲'어획증명제도'로 불법 수산물 시장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① 어업규제 대폭 개선을 통해 어업인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

- (규제 개선) 1,500여 건의 거미줄 규제 중 절반 가량의 규제를 대폭 철폐, 어업인 조업 편의·효율 제고로 연간 78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 *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23.11), 어선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확대('23.12), 서해 강화도 조업한계선 조정('23.11) 등 규제 정비
- (어업생산성 개선) 계획적 어획과 비용(출어횟수) 감소로 어업 수익 극대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 (단속체계 효율화) 해상에서 육상으로 단속체계가 효율화되면서 유류비, 인건비 절감, 연간 300억원 행정비용 절감

②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수산물 안전공급 대책 활용

- 공급분야 혁신정책(어업 선진화)은 생산심리 안정에 긍정적 영향, 특히 국제어업관리체계 도입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가 강조되면서 수산물 물가 및 소비 정책과 상승 작용
 -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물 수요정책(소비활성화 캠페인)에 수산업계도 적극 동참하면서 과거와 달리 굳건한 소비 실현
 - * ①2011년 원전사고시 노량진 수산시장 3개월간 12.4% 거래감소, ②2013년 오염수 유출사고의 경우 전통시장 40%, 대형마트·도매시장 각각 20% 감소
 - 공급·유통업계와 정부간 MOU 체결과 수산물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수산물 물가 상승세는 크게 둔화

- 언론의 긍정적 보도는 물론 '수산물 소비', '물가'에 대한 국민 여론도 원전 오염수 방류(8.24) 이후 오히려 점차 개선 양상

③ 115년간의 틀을 깨는 과감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적 호응 제고

- 지속적 수산자원 감소,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어려운 정책여건 속에서 민·당·정의 어업 선진화 방안 논의(8.2)에 언론도 관심
- 오염수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어업관리방식 모니터링을 통한 수산물 안전 강화 등을 소개하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도 주목
 - * "안전점검을 강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로"(8.2 문화일보 등)
- 어업관리 방식 대전환 등 정부의 구체적 어업 선진화 방안을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보고
- 언론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국제어업관리체계 도입 등 정부 정책 메시지를 인용·활용하며 긍정적 조명

【[어구전주기관리] 바다에 버려진 침적어구 수거 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성 제고('22. 138→ '23. 659톤)]

- (일제수거) 수산자원의 보호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연중 설치된 어구(자리선점 등) 등을 지자체, 관련단체(협회, 어업인)와 협의하여 폐어구 수거 추진(457톤)
- (참여수거) 유령어업 예방에 대한 어업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폐어구 수거에 참여함으로써 연근해어장에 침적된 폐어구 효율적 수거(150톤)
- (민간수거) 민간 기부금 활용(WWF, 1억원) 및 폐어구 수거 NGO 활동 지원(3개 단체, 동·남·제주)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참여형 수거 확대(52톤)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폐어구 수거 추진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 (한-러 협상) 제32차 한-러 어업위원회('23.4) 타결을 통해 '23년 러시아 수역 명태, 대구, 오징어 등 조업쿼터량 36,331톤* 확보

* (명태) 28,500톤 / (대구) 4,046 / (오징어) 3,000 / (기타) 785

- (협력강화) 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어촌인프라 개선, 주민 기술훈련 등 전략적 ODA를 추진, 핵심 원양어장* 안정적 확보

* 우리나라 전체 원양생산(40만톤) 중 투발루·키리바시 등 태도국 어획량이 50% 이상

- 입어료 동결(당초 5% 인상 예상), 어선간 조업일 거래 무료화 등을 통해 연간 100만불 이상 입어경비 절감*, 핵심어장 확보에 기여

* 100만 불 = 입어료 동결 약 30만불/연 + 조업일 무상 거래 약 70만불/연

- (어장확대)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에 따른 원양생산 감소*에 대응하고 신규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연근해어장까지 조사 범위 확대**

* 원양생산량(만톤) : ('90) 92 → ('18) 46 → ('19) 51 → ('20) 44 → ('21) 44 → ('22) 40

** (기존) 태평·대서양 등 → (확대) 러시아(명태 등),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민어·조기 등)

- 러시아 수역, 서아프리카 연안 등 명태·오징어, 민어 등 조사를 통해 한-러 어업협상 기초자료 확보 및 서아프리카 어장개척 기반 마련

② 조업안전 역량 강화

- (제도정비)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 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23.10.24.)을 통한 자금조성 법적 근거 마련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신설

- (신조대체) 원양어선안전펀드('19~)를 통해 선박 안전·추진효율, 선원복지 등을 개선한 신규 트롤선 2척 건조·취항 완료('23.10월)

* '23년까지 총 8척 대체 건조 지원(7척 완료, 1척 지원 중, 총 660억원)

** (선박명) 술에스테701호, 술에스테703호 / (조업수역) FAO41 / (조업품목) 오징어

- (합동 점검) 장기 조업, 선박 노후화 등에 따른 원양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 **합동 안전점검**(해수부부산청) 실시(연 3회**)

* 현황 : ('18) 2 → ('19) 2 → ('20) 3 → ('21) 2 → ('22) 0 → ('23.10월 기준) 0

** (1차, 3월) 참치연승 1척 → (2차, 5월) 명태트롤 1척 → (3차, 11월) 참치연승 1척

- 비상통신, 소화·구명장비 등 **선박관리 실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점검을 통해 2년 연속 사고 「0」 달성

* '23년 전체 안전점검계획(부산청) : 원양어선 65척, 사업장 20개 대상 150회 점검

③ 조업질서 유지 및 친환경 조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조업감시 강화) 조업 전 과정 녹화·분석을 통해 IUU 어업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도입 체계 마련

* 조업감시센터 운영을 통해 어획~양륙 원양어선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 중이나, 조업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에 한계, 신기술 도입을 통해 감시체계 강화

** △포획금지 어종·체장 △사용금지 어구 사용 등 국제 조업규제 준수 여부 확인

- EM 시범사업('21~'23년, 연승 5척)을 통해 장비 운용방식 개선 및 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영상분석**(64TB 규모) 수행

* ('24) 시스템 개발 → ('25~'26) EM 시범운영 → ('27) EM 감시체계 도입·운영

** 눈다랑어·황다랑어 등 어종, 어체 크기 식별 등 생물학적 조사 가능 여부

- (항만국검색) 'IUU 어업 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23.11월), 국내 입항 IUU 어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국제인증) 국내 원양선사가 지속가능한 책임 조업 관련 유일한 국제인증인 MSC*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동원·사조 등 3개사)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 세계식량기구(FAO)와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ISEAL)에서 정한 모범지침을 충족한 어획활동에 발급하는 유일한 인증

- 수산자원 유지,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요구하는 MSC 인증을 통해 원양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모범조업국 지위 강화

* MSC 인증 수산물은 미인증 수산물 대비 4~6% 고가에 판매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검토 및 정책효과 확산 방안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化)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스마트기술 실증 및 가공·유통·기자재 등 연관산업 집적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부산('19 연어), 경남 고성('19 바리류), 전남 신안('20 새우), 강원경북 포항('21 연어), 제주('22 넙치)
- ICT·자동화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 착공 등 권역별로 활발히 사업 진행 중(개소별 400억원, 테스트베드+배후부지 조성)
 - * (전남신안) '23.4월, (경북포항) '23.11월, (강원 강릉·양양) '23.11월 착공
- 스마트 양식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담당할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23.2.~)
 -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지자체 협의회(2.24, 6.29, 9.19)
- 빅데이터 수집·분석 → 최적 사육조건 도출 → 생산성 향상 및 보급의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 * '23.8월 사업자(부산) 선정, 부산시에서 구축할 데이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 (규모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개체굴·멍게 공동생산시설 등 품목별 집적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소득증대 도모
 - * (참조기) 스마트양식, 가공·유통·수출, R&D, 창업교육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한 산업화센터 사업자선정(4월, 전남 영광)
 - * (개체굴)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 추진(전남 신안, 3개소)
 - * (멍게) 목재·스티로폼 재질의 노후화된 멍게공동생산시설의 위생개선사업 추진(25개소)
- (one-stop 창업지원) 청년창업, 귀어인 등 양식업 진입희망자 대상 단계별 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진입장벽 완화
 - 스마트양식 보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양식 교육과정 개설('23)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대상자 확대(예비창업자+창업 1~3년차)
 - * (지원성과) 흰다리 새우 취업(20명), 창업(10명)

- (스마트양식시설 확산)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시설 보급을 위해 연구시설(6개소) 및 양식어가(7개소)에 **첨단·친환경 양식시설 지원***
 - * 친환경ICT순환여과양식연구시설(경북), 친환경바이오플라방식현대리새우양식장(전북), 해상가두리스마트양식시설(경남) 등 **13개소에 국비 83억 지원**
- (친환경 전환 유도) 양식어가의 자발적인 친환경 양식방식* 도입 유도를 위한 직불제 시행 후 친환경 양식어가 인증건수 증가 중**
 - * 유기수산물 사용, 무항생제, 배합사료 사용 등
 - ** ('20) 22건 → (직불제 시행 이후) ('21) 50 → ('22) 134 → **(23.9) 185(↑38%)**
- (내수면어업)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 및 재래식 양식시설의 규모화·스마트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스마트양식장) 내수면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한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전남 화순) 추진
 - (수산자원증대)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인공산란장 설치(3개소), 어도 개보수(24개소) 및 뱀장어 전용어도 운영*(3개소)
 - * 금강하굿둑, 영암방조제, 아산만방조제 3개소 총 664마리 실뱀장어 소상(遡上) 확인
- (수산부산물 전처리시설 구축) 양식어가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전처리 시설 구축 및 장비 도입 지원(138개소)
 - *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의 껍데기
 - 굴 수확 시 1차 유기물 제거를 위한 해상 세척 장비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코팅사 분리기 도입, 미생물 이용 악취저감 시설 구축
 - * 작업장 수요에 따라 필요 시설 및 장비 지원(전남 37개소, 경남 101개소)
- (활용 확대 등) 이미 사용 중인 제품(소결제)의 용도를 확대*하고 복토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포함**
 - * (현행) 제철용 소결제 → (개선) 소결제(제철용으로 한정된 용도를 확장)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12.4~1.15)
 - (인식개선)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이동 교실, 수산부산물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친환경 양식 전환을 위해 친환경 직불제 시행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新전략품목 선정) 양식산업 대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종을 新전략품목으로 선정('23.6)하고 집중 지원
 - (지원방안 마련) 핵심 품목(4개, 세우 제외)에 대한 전주기(생산·가공·유통·수출) 지원책을 수립('23.12)하여 글로벌 선도품목으로 발돋움 지원, 핵심 품목별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24년 예산에 반영
 - * 굴 수출 확대를 위한 굴까기 공장 현대화('24년 약 40억, 26개소), 전복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복 종자어가 첨단화('24년 약 4억, 1개소) 등
- (배합사료 사용어가 확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큰 배합사료를 전주기(100%) 사용하는 어가가 증가('22. 338호→'23. 356호)
 - (직불제) 어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 지원단가를 평균 8.1% 확대*
 - * (지원단가) ('22) 1포대(20kg) 당 5,420~12,390원 → ('23) 9,680~15,870원(↑8.1%)
 - (융자) 배합사료 구매지원 이차보전 사업(연1%)의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
 - (사료품질 개선) 해조류를 원료로 한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을 위해 '어린 전복 전용 배합사료 공장건립'을 완공('23.12월)
 - * (지역) 전남 완도 / (사업기간) '21~'23 / (총사업비) 40억원 / (규모) 15,000㎡
 - (안전관리 실시) 방사능 등 위해요소에 대한 배합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양어사료관리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 완료
 - * 양어사료 방사능 검사 (배합사료)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 (생사료) 양식장 안전성 검사와 병행
- (종자산업 육성) 해조류 우량종자의 개발·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해 출원품종에 대해 재배심사를 실시하고, 품종보호권에 등록(4품종)

- (종자보급) 김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빠른 성장 등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소유 품종(9종)의 보급·분양 확대

* 보급량(g) : ('19) 5,250 → ('20) 10,748 → ('21) 5,510 → ('22) 5,345 → ('23) 5,670

- (종자관측) 종자관측 대상을 확대(굴 추가)하여 생산량·유통 등 수급 동향*을 현장에 공유해 종자 수급 및 가격안정화 도모

- (실태조사)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위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지정('23.10)

* (시행령) 위임(수과원) 규정 삭제 → 위탁(법인·단체) 규정 마련 / (규칙) 위탁기관(공단) 지정

- (품종개량) 우량종자 개량 추진을 위해 개량대상 종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량기관을 지정**하여 종자개량 인프라 개선

* (당초) 넙치·터봇·전복·김 → (변경) 넙치·전복·김+굴

**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과원과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 (스마트 종자기술) 넙치·연어 등의 유전형질(내병성 등) 분석을 통한 예측모델 최적화 및 넙치·전복·김 등의 품질지표(질병 등) 발굴

*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22~'28, 355.2억원, 제주대·목포대·수과원 등)

○ (관상어산업 육성) 해·담수 관상생물의 품종개량 및 담수 아쿠아포닉스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산업화 기반기술 확보('23.12)

- (집적화단지) 내수면관상어센터 건립을 통해 관상어 연구에서 생산·유통·전시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집적화단지 조성

* '20~'23(190억원, 상주, '24.6월 준공 예정) : 전시·체험 시설, 연구·창업 시설 등

- (체험·전시시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한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지원

* '23~'24(90억원, 단양, '24.12월 준공 예정) : 미디어아트 에코리움, 생태·체험교육장

- (인지도 제고) 관상어산업 박람회를 통한 관상어의 전시·판매 등 대국민 홍보로 국내시장 활성화 및 반려문화 확산 등 친밀감 증진

* 박람회 방문객(명) : ('21) 8,796(코로나로 비대면 개최) → ('22) 48,749 → ('23) 83,04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보완·개선 필요, 정책효과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양식장 임대) 높은 시설 투자 비용 등 양식업 창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임대형 양식장을 도입*

*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6월 시행)

- (정보 통합관리) 면허·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별로 전자적 또는 수기로 관리 중인 양식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 체계 구축하고, 어업재해 및 수급 관리 등 주요 정책에 활용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24.2 시행)을 통해 양식장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피해예방) 수온 모니터링 강화(160 → 180개 지점), 대응장비 지원(39억원),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조기 수립(5.24) 등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 (피해복구) 고수온 피해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추석 전 신속히 1차 지원* 완료, 10월 이후 빈산소수피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2차 지원** 완료(11.22)

* '23년 고수온 피해 복구 현황(1차): 경남·전남 231어가, 186억원 지원(국비 58

** '23년 빈산소수과·고수온 피해 복구 현황(2차): 경남·전남·경북 469어가, 140억원 지원(국비 45)

- (제도개선) 정책자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대상·범위 확대*, 종자 생산어가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피해어가 경영 재개 지원

* (대상) 보험금 지급어가 포함, (범위) 3개 자금, 2.5조원 → 11개 자금, 4.2조원

- 상환유예·이자감면 대상자금 확대*(3개 자금, 2.5조원 → 11개 자금, 4.2조원)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지원단가 증액**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고시 제정을 통해 '23년 저수온 피해복구 시 최초 지원

** 인상(1), 증액 신설(3) / 기재부, 행안부 협의를 통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

- **보험어가도 정책자금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상환유예·이자감면, 세금 감면, 융자 등) 대상으로 포함('23년 고수온 이후)
- **(수급 점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주요 양식품종별 수급동향 긴급 점검 후 전복, 우럭 등 집중관리품목 단체급식 우선 제공, 소비촉진 대상 포함 등을 통한 과잉생산 물량 해소
- 14개 주요 양식 품목*에 대한 생산·가격 동향과 향후 전망을 제공하여 입식·출하 조절 등을 통해 적정 시장 가격 유지에 기여
 - * 김, 미역, 우럭, 참돔, 감성돔, 농어, 송어, 굴, 홍합, 광어, 전복, 멍게, 뱀장어, 송어
- **(자조금 운영)** 양식수산물 생산단체*가 스스로 소비촉진, 수급조절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대·내외 현안에 대응 중
 - * (의무) 김, 전복, 광어, 메기, 민물장어, 송어, 향어, 관상어, (임의) 굴, 미역
- **(의무 전환)** 정책설명회, 강화방안 수립('23.3) 등 설득을 통해 임의방식에서 '의무자조금'으로 본격 출범(10개 중 8개 단체)하여 책임성과 경쟁력을 강화
 - * 의무자조금 전환에 따라 10개 단체 회원 규모 45.2% 증가(7,344명 → 10,665명), 자조금 자부담 규모 110% 증가 예상(31 → 67억원)
- **(양식박람회)** 日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이후 안전한 우리수산물 홍보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3 수산양식박람회」 개최*(9.22~24, aT센터)
 - * 7개 기관 58개 지자체·기업이 참여, 소비활성화 행사, 수산물 안전성 정책 홍보 등 6,216명 관람객 방문('22년 대비 11.8%↑)
- **(에너지 절감)** 넙치, 새우, 전복 등 육상양식장에 히트펌프(114개소), 인버터(14개소) 등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여 전기요금 절감
- **(기후변화 대응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12월)
 - * 해양환경, 해조류·어류 양식, 사료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3회)·자문회의(2회)
-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11월)
 - * (수립방향) ①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②기초산업 내실화, ③생산·가공·수출 연계로 고부가가치 도약, ④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토대마련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양식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 지원 추진 계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증부표 전환) 양식장 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스티로폼 부표를 모든 양식장에서 금지*(11.13~)하고, 「인증부표**」 지원을 통해 '23년까지 스티로폼부표 약 3300백만개를 교체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3.11.13)

**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을 충족하는 부표로 스티로폼 부표 반납 시 인증부표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국비(억 원): '15년 4 → '21년 200 → '23년 400]

- 어업인 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신규 지원('23년 25억 원) 하고, 인증부표 품질 기준을 높이고*, 업체의 관리책임을 강화(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23.1)

* 제품성능 표기 의무화, 내충격성과 내압성 미달 등은 중결함에서 치명결함으로 상향

- (청정어장 재생) 개별 어장정화 활동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灣)단위 해역(기존 4개소, '23년 신규 2개소 추가, 개소당 500ha)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여 어장 생산성 증대 기대

* (개소당) 500ha 이상, 50억 원 2개년 (내용) 오염퇴적물 제거, 바닥고르기, 해양환경시스템 구축 등

** ('23년 신규) 태안 근소만, 창원 진동만

- 올해 사업이 완료된 가막만(920ha)은 퇴적 유기물 농도*가 감소하여 사업의 생태계 회복 효과 확인

* TOC(총유기탄소함량) : 8.5→7.6mg/g,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13.6→8.9mg/g

- (어장정보 제공) 사업 대상지에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해양환경 빅데이터 확보

* 득량만, 강진만, 진동만, 가막만, 여자만

- (어장정화 개선) 양식방식 및 퇴적물 쌓이는 정도가 다른 품종별 (해조류, 어류 등)로 어장청소 방법과 주기를 세분화(3년 → 3~5년)*, 어장청소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존 과태료)**하여 어장관리를 강화
 - *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3.1)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12.12)·시행(12.28)
- (수출검역) 수출수산물생산시설 등록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 등록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 수수료 비용절감**
 - * 「수산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23.6) 및 시행('24.6) / 수출상대국 또는 국제적인 수산물질병관리 기준에 따라 수출수산물생산시설에 대해 등록하여 관리
 - **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11.27) : 시범사업 실시로 수출검역(정밀검사)을 면제하는 시점을 단축하고, 모니터링 정밀검사를 수출검역 정밀검사로 인정하여 수수료 비용감면
- (질병관리) 연어과 어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11~'22)에 따른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청정국* 지위 획득('23.6)으로 수출 시 정밀검사 면제 등 수산물 수출 확대 기여
 -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청정국 지위획득 질병: ('22) 4종 → ('23) 1종 추가
- (新통상규범 대응) 수출 및 해외생산시설 등록 제도, 현지점검 근거 마련 등 「수산물질병 관리법」 개정(6월)을 통한 국제적 위생·검역(SPS) 규범 대응
- (국제협력)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23.5), 한-에콰도르 SECA, 한-인도네시아 CEPA 등 SPS 협상 대응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 신규 지정 질병정보 신설 등 WOAH 수산동물 위생규약 및 진단매뉴얼 개정 대응
- (동물용의약품) 마취, 항생제, 호르몬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의약품 지정 범위를 전 성분으로 확대*하고,
 -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23.7)
- (온라인 유통) 네이버, 지마켓, 쿠팡 등의 온라인 플랫폼사와 온라인 상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허위 광고 신속 차단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정어장을 만들기 위한 인증부표 지원 계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보통 정도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예비비 적기 편성) '23년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 방류후(8.24) 연말까지 전국 38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여 산지적체 최소화

** 전국 14개 마트·소매점(1,700여개 점포)과 2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올해 총 15회 실시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 하고 전국 30여개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환급행사 상시(매일) 개최, 환급가능 금액구간을 조정*하여 966개 수산물 점포가 신규가맹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8.4),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9.7),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9.12)

** (당초) 수산물 6.7만원 이상 구매 시 → (예비비 투입 후)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환급

- (제로페이) 20% 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전국 9천여 가맹점에 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

* 月 1회 35억원 발행 → (예비비 투입 후) 週 1회 12.5억원 발행하고, 가맹점도 전통 시장, 도·소매점으로 확장

- (수산물시장 축제) 추석 명절 전·후 전국 주요 수산물시장 축제를 개최, 홍보행사, 소비마케팅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 확산

* 강서시장(9.9~10), 소래포구시장(9.15~17), 노량진시장(9.23~24), 자갈치시장(10.5~8)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단에 우리 수산물 전달행사(8.4 등

- (수급·물가관리)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수산물물가 상승세는 7월 이후 4개월 연속 둔화*

*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전월 대비): (6월) $\Delta 0.3\%$ → (7월) $\Delta 0.9$ → (8월) $\Delta 0.6$ → (9월) $\Delta 0.4$

- (정부비축) '24년(안) 정부비축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2천억 원대 확보하고,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상시 방출**

* 정부비축 예산규모: ('22) 1,081억원 → ('23) 1,750억원 → ('24년 안) 2,065억원

** 설(1월. 1,774톤), 상시(3월. 1,002톤), 어한기(5~6월. 3,825톤), 추석(9월. 4,913톤)

- (수입 수산물 가격인하)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로 전환(할당관세 관세 10→0%) 시행(11.6~)
- (물가안정대응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여 ①일일 가격 모니터링, ②현장점검(장·차관) 및 ③현장 중심 상황 점검 등 추진
- (유통질서 단속)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135개소) 등 직접 현장방문 조사로 교란행위 차단
 - * (합동점검반) 해수부·수품원·해경·지자체, 6.23~7.7, 8.30~ / (신고센터) 8.25~, 8개소
- (소통강화) 일일브리핑('23.6월~, 약 100회), 수산물안전 관련 국민소통단 간담회(3.8), 현장설명회, 시·도 정책협의회(4.23)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강화
- (신속검사) 유통 전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신속검사법을 도입한 민간 모니터링 사업 신규 추진(8월), 주요 산지 위판장을 대상으로 유통 전에 위판 물량의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8.21~)
 - * 검사체계: 시료채취·이송(위판장) → 검사(민간기관) → 결과통보(SMS, 문서) → 확인증 교부(민간기관)
- (천일염 안전관리) 국내 전체 가동염전 837개소를 대상으로 방사능 전수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정밀검사(품질·안전) 전년비 663% 확대
 - * ('21) 20건→ ('22) 52건(전년비 52%↑)→ ('23.10) 397건(전년비 663%↑)
- (물가 안정) 역대 최대 정부비축 천일염 물량확보(1.1만톤) 후 연말까지 지속 방출, 천일염 수요가 높은 김장철에 마트 3사에서 두 차례 30% 할인행사 추진(1차. 10.12~29, 2차. 11.2~27) 등
- 천일염 11월 소비자 가격은 전월 대비 22.7%, 전년 대비 15.2% 하락(11.22)
- (이력제도 활성화) 이력정보 입력 절차와 표시 정보 등을 대폭 간소화*하여, 이력제 참여업체가 손쉽게 참여토록 제도 개편(5월)
 - * (정보 입력단계) 5단계(생산자·위판장·중도매인·가공기업·판매기업)→ 2단계(위판장·가공기업) (시현 정보) 33종(시스템상 관리)→ 4종(생산자, 생산시기, 생산장소, 가공기업)
- 이후, 최근 10년 내 이력제 관리 및 표시 물량 최고치 달성*
 - * 관리물량 비율: ('21) 1.42%/54,602톤→ ('22) 1.76/63,399→ ('23.10) 7.11/206,356
표시물량 비율: ('21) 0.16%/6,099톤→ ('22) 0.17/5,954→ ('23.10) 0.26/7,456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산물 물가관리 위한 정책 추진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김산업 진흥구역) 김산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김산업 진흥구역 '23년신규 지정
 - * '23년 3개소(신안, 해남, 서천) 지정, '24년 2개소(공모) 선정 예정
- 진흥구역을 대상으로('23년~'24년) 김제품의 품질향상, 위생·안전 관리 제고, 수출 확대 및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 사업 규모 : 총사업비 150억원(3개소 × 50억원) / 농특, 국비 50%·지방비 50%
- '23년 역대 최대 김 수출 7억89만 달러 달성('23.11)
- (중화권 수출 확대) 수산식품 수출시장 1위('22년 기준)인 중화권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 바이어를 초청, 표창 및 수출 유망 K-블루푸드 홍보
 - 해외 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 연계 중화권 바이어 대상 한국 수산식품 지속 홍보, 바이어(청도익화홍) 삼치 품목 126만불 수출계약 지원(10월)
 - (K-Fish 시범품목 지정) 일본산 수입품목 1위인 가리비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하여 국내산 가리비의 중화권 진출 기반 구축
- (수출판로 개척) 비대면 다자간 쇼케이스 및 현지 이원생중계 구매설명회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기업·해외 바이어 간 교류 추진
 - *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 활용 3개국(미국, 중국, 홍콩) 온라인 구매설명회 진행, 해외 바이어 63개사 및 국내 수출업체 24개사 참여 / ** 수출실적(천달러) : 중국 272, 미국 563, 홍콩 81
- (수출조직 육성) 생산-가공-수출기업이 하나로 구성된 품목별 대표 조직*을 육성하여 전략품목 육성 및 신규시장 개척 확대
 - * ('23) 지원현황 : 5개 품목 8개 조직(김, 전복, 넙치, 어묵, 멸치)
- (수출바우처)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내수기업을 천만불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우처* 제공으로 해외 경쟁력 확보(35개사)

- * (지원메뉴) 해외시장조사, 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등 18가지 메뉴 자율선택
- (한류 K-박람회) 한류소비재 관련 부처 협업 한류 K-박람회 공동 개최, K-콘텐츠(K-POP, K-드라마 등)과 연계한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신규 거래선 발굴
 - * K-콘텐츠와 연계한 B2C소비자체험 홍보행사 개최, 수산식품 25개사 B2B 수출상담 (24.8백만불 상담 / MOU 2.65백만불) 지원
- (해외홍보관) 범부처 한류 K360 해외홍보관(자카르타) 내 수산 홍보관 운영을 통한 인도네시아 현지 소비저변 확대 기여
 - * 범부처 한류 K360 해외홍보관 방문객 1.2백만명(10월기준), 수산식품 쿠키쇼 32회, 특판행사 4회, 온라인판촉 2회, 요리교실 10회 등을 개최
- (대일 수출) 한·일 보건당국의 일상회복 선언으로 4년만에 대면 개최 하여 한국 김 제품 1,141만속 1,050억원 수출계약 체결
 - * '95년 일본 수출 한국 김 입찰·상담회 개시 이래 최대 성과
-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김 생산 소규모 업체를 규모화하고, 공동 가공·판매시스템을 구축('20~'25, 목포)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추진사항: 총사업비협약(~'23.9월) → 착공 공고('23.10월~)
- (부산 수산식품클러스터) 영세한 수산가공 업체의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R&D를 집중지원하여 글로벌 스타상품 발굴
 - * 추진사항: 사전행절차 진행(~'23.9월) → 기본실시설계('23.10월~)
- (전북 스마트수산가공단지) 새우·메기 등 특산물의 식재료·급식시장 진입을 위한 가공 자동화기반 수산가공단지를 조성
 - * 추진사항: 기본·실시설계 추진('22.9월~계속)
-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붉은대게·가자미 등 동해 특산품을 밀키트·간편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산가공단지('23~'26, 영덕) 신규선정
 - * 추진사항: 선정('23.4월) → 기본계획 수립(~9월) → 기본실시설계(9월~)
- (중소업체 역량강화) 수산식품거점단지(부산, 전남, 통영) 입주 중소기업 대상으로 홍어만두, 펫푸드 밀키트 등 37개 상품개발 지원
 - * 신제품 개발 청어 바지락 이취저감기술 개발 패키징 개선 등(부산 12건 전남 20건 통영 5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수산식품 수출판로 개척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이행하여 우수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산인의 날) 역대 최초로 기념식(3.31)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수산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의지 표명

* ①세계 최고 수준의 어업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산업 미래산업화 기술개발 확대 등 메시지 전달, ②유공자에 대해 훈장 4점 등 정부포상 34점 전수

- (금융안전망)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이자 감면, 원금 상환유예,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공급

- (경영안전망) 고유가, 전기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확대, 전기료 인상 최소화, 면세유 공급을 통한 유류비 절감 등 지원

- (창업설명회) 해양수산분야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창업·투자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의 장 마련
 - 해양수산분야 창업방법, 창업에 필요한 역량, 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 기업 운영 및 투자유치 노하우 등 공유

- (토크콘서트) 해수부 장관, 창업·투자 전문가와 예비창업 청년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조언 등 대화의 장 마련

- (창업아이템 발굴) 우수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 11개 아이템 발굴

* 전 부문 참가율 증가(총 271개 팀 참가, 전년 대비 35.5% 증가)

- (후속지원) 창업투자지원 센터*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대출보증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해양·수산모태펀드 투자 연계 등

* ('23) 7개 지정 운영 중

- (신규펀드 조성) 수산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민관 합작 자펀드를 결성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수산경영체에 투자
 - '23년에는 스마트양식 및 수산부산물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133.4억원* 규모의 수산분야 최초 특수목적펀드 결성

* 수산펀드 출자사업 설명회 등 민간 자본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독려한 결과, 13.4억 원이 추가된 133.4억 원으로 결성(당초 계획 120억원)

- (투자유치) 지속적인 정부 출자로 민간의 투자위험을 분담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였고, 18개 자펀드를 통해 총 144건, 1,861억 원을 투자

- (창업·투자 선순환)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 팀이 지역별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에 지원 시 센터별로 상이했던 가점 부여 제도의 표준화*

* 콘테스트 수상팀은 수상 후 3년 이내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며, 1회에 한정

- (정책소통)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수산정책을 설명하고, 어업인 등 요구사항 수렴

- 어업인 등 현장의 높은 우려를 고려하여, '24년 수산·어촌 부문에 역대 최고 예산(3조 1,146억원, 전년대비 5.7% ↑) 편성하여 지원

- 전국 시·도 대상 수산정책·제도 및 예산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등 국민소통 강화

- 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역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건의사항 수렴을 거쳐 해결방안 마련 추진

* 시·도 수산정책협의회('23.3.7, 수산정책실장, 11개 시도 참석)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시도 수산정책협의회('23.7.5, 수산정책실장, 17개 시도 참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추진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충실성)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직접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 제공,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높음 ○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미흡, 부진과제 작성)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3-③ 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해양개발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북극협력주간 개최를 통한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정책효과 확산 방안 제고('24.12월) ○ 성과지표 개선·보완 반영('24.3월)
Ⅲ-1-② 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정책이행 노력도,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정책 수요자와 적극적인 정책 소통 확산 방안 제고('24.12월) ○ 해양바이오 확보·관리·이용 분야 핵심 정책의 효과성 확산 방안 제고('24.12월)
Ⅲ-3-②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해양영토과)	○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개선 반영('24.3월) ○ 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 강화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정책효과 개선('24.12월)
Ⅳ-2-⑤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원양산업과)	○ 성과지표의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개선·보완('24.3월) ○ 정책효과 확산 방안 제고 및 '24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정책 효과 드러나도록 작성방식 개선·보('24.12월)
Ⅳ-3-② 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양식산업과)	○ 성과지표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보완·개선 추진('24.3월) ○ 수산물부산물 처리업 허가요건 완화 및 재활용 유형 확대를 위한 「수산물부산물법」 하위법령 개정('24.6월)
Ⅳ-1-①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어촌어항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추진계획, 정책 소통·확산 노력방안 원점에서 재검토·계획수립('24.3월) ○ 정책효과 증진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 및 신규사업 추진('24.3월)
Ⅰ-2-④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항만물류기획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중장기 해외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국제물류 체계 구축('24.3월) ○ 물류기업 간담회를 통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발굴('24.2월)
Ⅰ-2-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스마트해운물류팀)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24.12월) ○ 정책효과 개선·보완 (~'24.12월)
Ⅱ-1-① 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항만연안재생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정책이행 노력도,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소통·확산 및 정책효과 개선 노력 추진('24.12월)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개선('24.3월)
Ⅲ-4-① 해양쓰레기 전수조사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해양보전과)	○ 성과지표 부합도, 목표 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24년 성과지표 개선·보완('24.3월) ○ 대국민 홍보 등 정책효과 확산 방안 제고 및 '24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정책 효과가 드러나도록 작성방식 개선·보완('24.12월)
Ⅳ-1-④ 수산업어촌 공인증진과 연계한 어가소득 기반 강화 (수산업진흥팀)	○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목표 달성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과제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개선·보완('24.3월) ○ 성과지표에 적합한 목표 달성도를 설정하고 정책효과 등 개선·보완('24.12월)
Ⅰ-3-① 디지털 해양교통정보(바다나비) 제공 및 산업육성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정책이행 노력도,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과제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계획 수립('24.3월), 정책수요자와의 적극적인 정책 소통·확산 방안 제고('24.12월) ○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도 등 개선·보완 조치('24.12월)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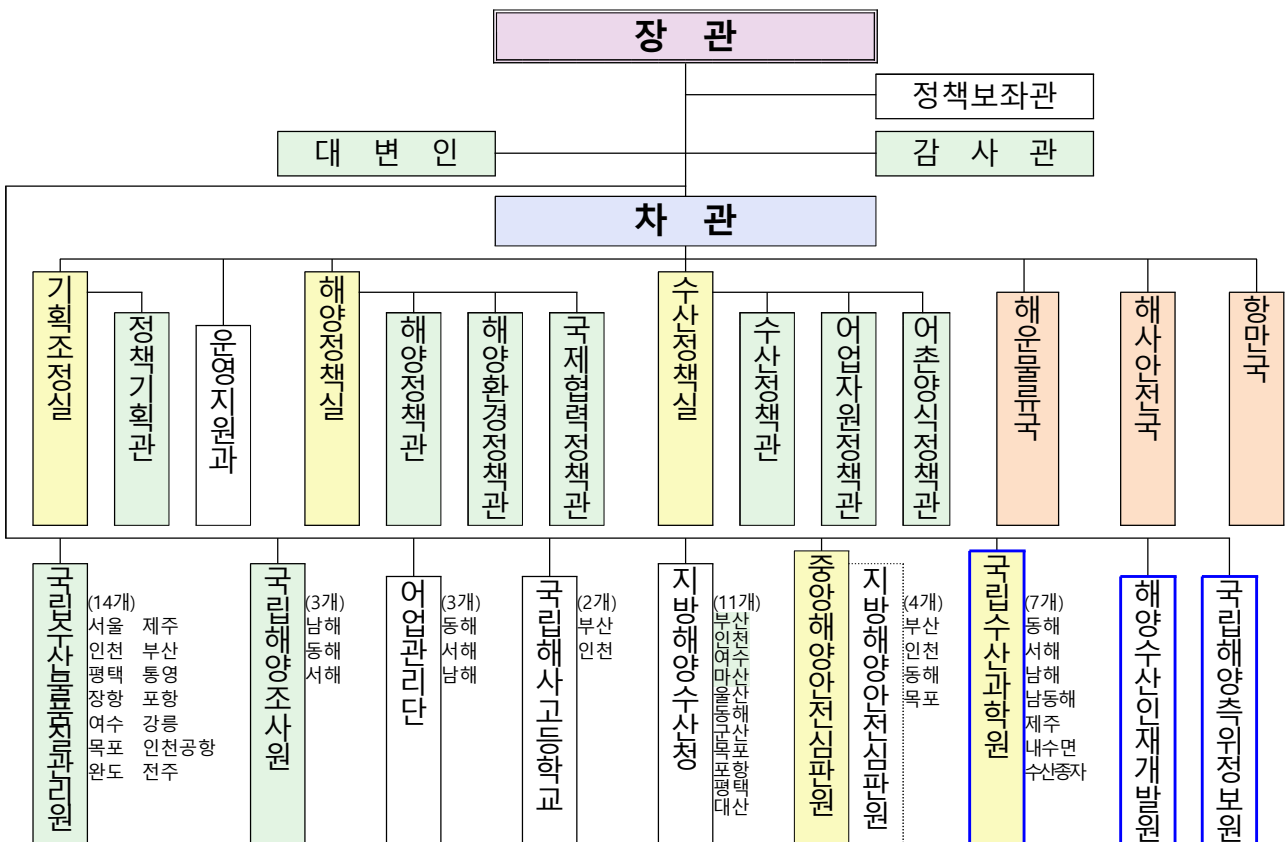
- ◇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관장

□ 핵심기능

-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
- ◆ 해양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리더 국가로 위상 강화

□ 조직도

- ◆ (본부) 1차관 3실 3국 9관 (50과 5팀, 자율기구 포함)
- ◆ (소속) 69개 (1차 22개, 2차 40개, 3차 7개)
-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해양영토(44만km², 육상면적의 4.4배)의 **보전·이용·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행정 구현**

비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전략목표 · 성과목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 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 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IV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원양 선복량(만TEU)

□ 성과지표 개요

〈 원양 선복량 〉

- 개념 : 20ft(6.1m) 표준 컨테이너 박스 1개를 1TEU로 하여, 우리 원양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적재능력을 나타냄
- 조사기관 : 전문 조사기관(Alphaliner社)
- 조사대상 :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미주, 유럽 등 / 동남아 등 연근해 제외)
- 조사방법 : Alphaliner社 선사별 선복량 확인
- 측정산식 : 연도별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합

□ '23년 측정결과

- 국적 원양선사의 수송능력은 한진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 직후인 '17년 대비 2.7배 증가한 112.4만 TEU(신조발주 포함) 달성
- 해진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HMM의 초대형선 20척('20~'21)*, 13,000TEU 대형선 12척(10.30) 신조 등을 지원(1조 8,081억원)한 것이 주효

* 24,000TEU '컨'선 12척, 16,000TEU '컨'선 8척

□ 성과분석

- (대형 '컨'선) 1,3000TEU 대형 '컨'선(12척) 신조를 지원('23.10, 3,833억원) 하여 선복량 확충을 통한 원양항로의 비용경쟁력 강화 추진

* '24.1월부터 13,000TEU 컨테이너선 12척 순차적으로 인도 및 항로 투입

- (메탄올 추진선) 해진공의 금융지원*과 함께 HMM은 국내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선(9,000TEU급, 9척) 신조 발주(2.14)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신조계약시 해진공-HMM간 금융지원 MOU 체결(2.14)

- 총 1.4조원 규모의 신조계약을 모두 국내 조선소(현대삼호 7척, HJ중공업 2척)와 체결하여 해운·조선 상생 도모('23~'25)

⇒ 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이후 449척(3,559만톤(DWT))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여 원양선복량을 포함한 국가 전체 해상수송능력 1억톤대 진입

* (해상수송능력) 국적선사가 운용(소유·임대 등) 중인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

- 해진공은 설립 이후 선박 도입,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선박 유출 방지 등 수송능력 확충에 총 10조 1,215억원 지원('23.12 기준)

- 국적선사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해운기업의 자발적인 출자*(2,881억원)를 통해 해진공 자본금 확충(9.14)

* 당기순이익 대신 선사의 선박량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톤세제' 적용으로 해운기업 세금절감 → 법인세 절감액의 일부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 향후 추진계획

-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 해운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27년 원양선복량 130만 TEU 달성 예정

- 중소선사 선박도입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 규모(5년간 2,500억→5,000억) 및 지원대상(외항→내항)을 확대하고, 지원조건 개선

* (범위) 중고선 도입·S&LB 등 투자지원 한정 → 신조선까지 확대 / (한도) LTV 70→80%

- 선사의 재무여건 및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 지원분야 및 한도를 설정하는 맞춤형 체계 마련으로 지원의 실효성 제고

- 공공선주사업 선종 다변화 및 규모 확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송능력 확충 지원

* 현재 공공선주사업으로 '컨'선 10척, 탱커선 5척 등 15척 운영중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2

해양사고 인명 피해(사망·실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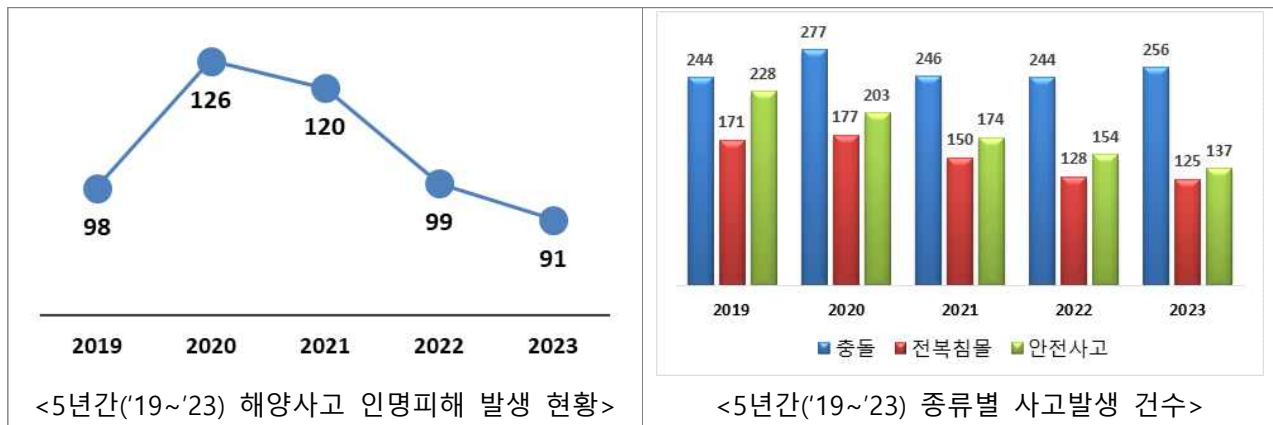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관련 사망·실종·부상, 해양시설 손상, 선박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의 사고 발생 건수
- 조사기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사대상 : 당해연도 해양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인원 수
- 조사방법 : 해양사고 발생현황 통계자료 요청(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측정산식 : 해양사고 발생현황 통계자료

□ '23년 측정결과

- '23년 사망·실종자는 총 91명으로 지난 5년('18~'22) 평균(109명) 대비 19%(18명), 전년(99명) 대비해서는 8% 감소하였음



- 어선에서 77명(85%), 비어선(일반선박 등)에서 14명(15%) 발생

(단위 : 명)

구분	합계	어선	일반선박						수상 레저
			일반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기타선	소계	
2023	91	77	5	0	0	0	4	9	5
(1~12월)	100%	84.6%	5.5%	0.0%	0.0%	0.0%	4.4%	9.9%	5.5%

- 안전사고가 56명(62%)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뒤이어 전복 20명(22%), 충돌 9명(10%), 침몰 4명(4%), 접촉 1명(1%) 순

(단위 : 명)

구분	합계	안전 사고	전복	충돌	화재 폭발	침몰	접촉	좌초	기타
2023 (1~12월)	91	56	20	9	0	4	1	0	1
	100%	61.5%	22.0%	9.9%	0.0%	4.4%	1.1%	0.0%	1.1%

※ (안전사고 유형별) 해상추락 45%(25명), 양망기사고 20%(11명), 나홀로조업·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6%(9명), 신체가력 7%(4명), 선내추락·잠수사고 각 2%(1명) 순

□ 성과분석

< 정책성과 >

- 여객선 대형 인명피해 “Zero” 달성(‘16~) 및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기조 지속 유지 중

* (‘20) 126명 → (‘21) 120명(5%↓) → (‘22) 99명(18%↓) → (‘23) 91명(8%↓)

< 추진실적 >

- (고강도 안전대책) 선박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대책을 수립(2.13) 하여 취약선박 현장점검 강화, 사고선박 1:1 전담관리 등 역량 집중

* '27년까지 선박사고 인명피해 50% 감축('17년~'21년 평균 118명 → '27년 59명)

- (취약선박 집중점검)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과 엔진 고장이 잦은 어선·레저선 등 대상 집중점검 실시

- (여객선) 엔데믹에 따른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 연안·국제 여객선에 대해 구멍·소화설비 구비 여부, 비상대응실태 등 특별점검* 실시

* 연안여객선 총 160척(설·추석 연휴, 여름 휴가철), 국제여객선 총 22척('23.4~6, '23.9)

- (어선·레저선박) 사고 방지를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자가 정비 안내서·안전운항점검표·안전물품 등 보급** (9.1~12.31)

* 어선보험 가입 어선(전국 800여척) 대상 기관전기설비 점검 서비스 제공(KOMSA, 수협)

** 기관·추진축계 사고예방을 위한 엔진유허유, 냉각호수 등 안전물품 보급

- (간편 구명조끼) 작업 중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편함이 없는 허리착용형 구명조끼 개발·보급(6.15~12.31)

□ 향후 추진계획

- (목표) 선박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대책('23.2)에 따라 '27년까지 사망·실종자 50%(59명) 저감 추진

* '27년까지 선박사고 인명피해 50% 감축('17년~'21년 평균 118명 → '27년 59명)

- (주요 실천방향) 어선·예부선 등 안전 취약선박과 여객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취약선박 현장점검, 사고선박 1:1 전담관리, 연안여객선(155척) 정기 전수점검 등

- 신규 개관한 안전체험관·지원센터*(총 4개소)를 중심으로 체험 및 실습형 교육**을 늘려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 해양안전체험관(안산 '21.7, 진도 '23.12), 선박안전지원센터(목포 '23.6, 인천 '23.8)

** '23년 누적 해양안전 교육인원 : 10.3만명 / 전년동기 6.8만명 대비 51% 증가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3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남·북극 및 대양 주요 연구 조사 정점 목표('26년 1,250점) 대비 탐사 진척도
- 조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조사대상 : 남·북극해, 아북극-서태평양 등 극지 및 대양 탐사 연구 정점 수
- 조사방법 : 연차별 성과보고서, 탐사보고서, 관측 데이터 등 확인
- 측정산식 : 실제 조사 정점 수(누적)/ 조사 목표 정점 수(%)

□ '23년 측정결과

- '23년 극지 및 대양 조사 정점 수는 460점(누적 1,589점)으로 최종 목표('26년 누적 1,250점) 대비 127.1%로 '23년 목표(92.5%) 초과 달성

< 6년간('21~'26) 목표 및 실적 >

구분		'21	'22	'23	'24	'25	'26
목표	극지 및 대양 탐사 진척도(% 누적)	57.4%	90%	92.5%	95%	97.5%	100.0%
	연도별 정점 조사(점, 누적)	718	1,125	1,156	1,188	1219	1,250
실적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누적)	80.6%	90.3%	127.1%	-	-	-
	정점 조사(점, 누적)	1,008	1,129	1,589	-	-	-

* 23년 성과측정 결과 최종 목표치를 초과하여, 26년 기준 최종목표치 재설정 필요

□ 성과분석

- 남·북극해 및 대양 조사 정점을 전년대비 확대(121→460점)하여 해양·생태·지질 등 주요 관측정보를 확보*하고 해양과학 연구영토 확장

* 북극해 해저지질 조사, 인도양 중앙해령대 심해열수공, 아북극 및 북서태평양 등

□ 향후 추진계획

- 연구 선도국과 공동탐사 네트워크 확대, 북극 해양-대기-육상 종합 관측망 구축 등 극지 및 대양 탐사 역량 강화

□ 성과지표 개요

〈 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 발행수(건) 〉

- 개념 :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
- 조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조사대상 : 극지 및 대양 연구분야 관련 사업 소관 과제
- 조사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 확인
- 측정산식 : 극지 및 대양분야 연구 논문 발행 건수 집계

□ '23년 측정결과

- '23년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사업 SCI논문 발행 101건 달성으로 '26년 최종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
- 최근 5년간 동향과의 비교

성과지표명	'19	'20	'21	'22	'23	'26 (최종목표치)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사업 SCI 논문 발행수(건)	50	54	65	62	101	60

□ 성과분석

- 극지 및 대양연구 관련 과학적 현상을 실험을 및 관측을 통해 규명하며 그 연구성과로 62건의 논문 발행
- 아북극-서태평양 기인 한반도 고수온 현상 관련하여, “초여름 발생하는 수온 성층화에 의한 서남해 해양열파 발생” 규명
(「Frontiers in Marine Science」, mrmIF 95)
-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주는 대양의 해양환경요소 연구를 통한 해양기후 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및 원인 규명

□ 향후 추진계획

- 극지·대양 탐사를 통한 미개척 환경의 자원 정보 및 기후 예측 능력 확보 등 연구 역량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문제의 해결 및 선제적 대응 방안에 기여

4

수산물 수출액(억불)

□ 성과지표 개요

〈수산물 수출액〉

- 개념 : 수산물 수출액 확대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을 통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
- 조사기관 : 관세청
- 조사대상 : 당해연도 수산물 수출실적
- 조사방법 : 수산물 수출 통계자료 요청(관세청)
- 측정산식 : 수산물 수출 통계

□ '23년 측정결과

○ '23년 수산물 수출실적 30억불 달성

-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수출액 30억불 달성

* 수산식품 수출(억불) : ('17) 23.3 → ('19) 25.1 → ('21) 28.3 → ('22) 31.6 → ('23) 30

** '22년도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중국의 코로나19 전이에 따른 러시아산 수입금지 조치로 러시아 수산물의 한국 우회 對중국 수출(재수출)로 통계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23.2월 중국의 규제완화로 '23년도 통계 하락

□ 성과분석

○ 해외 수산물 무역분쟁 전략적 대응 및 신시장 개척 총력

- 주변국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체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전략을 신속히 수립·이행*하는 등 전략적 대응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피해 예방

* 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23.8월), 美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에 따라 중국 내 기존 일본산 수산물 대체시장 공략('23년 굴 對중 수출 : 1.3 → 3.1 백만불)

- 해외무역지원센터 확대(10→13개)를 통한 견고한 수출망 구축, 온라인몰 K씨푸드관 추가 개설(5→10개)로 비대면 新수출시장 공략

- 김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23.10)과 시행계획 수립('23.11)하고,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23년 신규)** 등을 통해 김수출 1조원 돌파(약 1조 200억원)

* 김 수출(관세청) : ('10)1.1억불 → ('15)3.0 → ('17)5.1 → ('19)5.8 → ('21)6.9 → ('23)7.9

- ** 김산업의 중심지를 지정하여 원료생산-가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23년 신규, 3개 지역, 총 150억 원(국비75억 원) 지원

- 김 수출업체 對미 수출통관 문제(중금속 과다) 조기 해소*('23.3월~)로 비 관세장벽 우려완화 및 수출업체-바이어 관리를 통한 김 수출 안정화

* 한국 김 제품 안정성검사사업 지원('23년 신규, 2억원)으로 수출 전 검사 강화 및 김 수출제품 미국 내 검사 강화 등을 우리 수출업체에 전파 및 모니터링 강화

- 수산식품 수출 100대 기업*을 선정하여 연 초부터 정부사업 지원, 해외시장 동향정보 제공,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밀착 지원** 강화

* 수산식품 100대 기업 '23년도 수출 평균 6% 증가('22년 16억 불 → '23년 17억 불)

- ** 수산식품 수출바이어 간담회(4.26, 차관), 100대 수출기업 간담회 5회(장차관 5회), 해외바이어 초청 간담회(11.1, 장관),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10.26, 차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산식품 가공수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본격 착공('23.12), 부산권 기본·실시설계 착수('23.10))
- IoT, AI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스마트가공, R&D, 창업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2개소(전북, 경북) 조성 추진
- 김, 굴, 붕장어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간편가공식 등 신제품 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반 활성화 도모

○ '23년도 중국의 코로나19관련 규제 철폐에 따른 러시아산 수산물 직수입으로 한국 對중 수산물 수출실적 하락

* 對중 수산물 재수출 감소 ('22)5.8억불(러시아산 우회 수출) → ('23)2.6억불, 전년 대비 54.6%↓

- '22년 러시아 수산물의 한국 우회 對중국 수출(재수출)로 통계치가 높게 나타났던 현상이 '23.2월 중국의 규제 완화로 '23년도 수출실적 감소

□ 향후 추진계획

- 수출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불 달성
 - 수산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 확대·개편으로 최대 11년간 중장기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수출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점유율 향상
 - 공동물류센터 지원에서 풀필먼트, 콜드체인 해외물류 지원까지 확대하고 무역지원센터 추가 개소를 통해 입항에서 소비자까지 수출 진출로 확대
 - 권역별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전남·부산) 및 IoT 기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 조성(전북, 경북), 김 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2개소)
 - 최신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가정 간편식(HMR) 등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과 세포배양 수산물 등 미래식품 기술 개발 추진